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적 책임(ISO 26000) 구현을 위한 지속가능성 보고서

2019. 1.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적 책임(ISO 26000) 구현을 위한 지속가능성 보고서

2019. 1.



Contents

제1장		
개요	1. 남구 현황	10
	2. 보고서의 작성 기준과 범위	14
	3. 보고서의 특징	15
	4. 보고서의 구성	15
제2장		
사회적 책임과 ISO 26000	1. 사회적 책임의 개념	18
	2. ISO 26000의 특징과 구조	20
	3. ISO 26000의 주요 내용	23
	4. ISO 26000의 지방정부 적용	40
제3장		
사회적 책임 이행 성과분석	1. 조직 거버넌스	48
	2. 인권	57
	3. 노동	69
	4. 환경	84
	5. 공정운영	93
	6. 소비자	105
	7.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	122
제4장		
사회적 책임수준 진단 및 평가: SR Toolkit에 의한 수준 평가	1. 개요	146
	2. 조직 거버넌스	148
	3. 인권	150
	4. 노동	153
	5. 환경	155
	6. 공정운영	157
	7. 소비자	160
	8.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	163

제5장		
이해관계자 분석 및 중대성 분석	1. 이해관계자 설문 분석	168
	2. 중대성 분석	174
제6장		
GRI, UNGC 연계성 분석	1. 지속가능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GRI) 연계 분석	184
	2. UN Global Compact 연계 분석	192
제7장		
정책 제언	1. 조직 거버넌스	202
	2. 인권	205
	3. 노동	209
	4. 환경	214
	5. 공정운영	217
	6. 소비자	220
	7.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	227
참고자료: 남구 주민 및 공무원 설문조사 자료		234

Table Contents

표 2-1 • CSR의 3대 분야별 개념	19
표 2-2 • ISO 26000 제정 경과	21
표 2-3 • ISO 26000의 공공부문 적용을 위한 재해석	40
표 3-1 • 울산 남구청 위원회 현황	55
표 3-2 • 남구청 제정 사회적 책임 관련 조례 현황	56
표 5-1 • 분야별 공무원 및 구민 별 관심분야 응답수 및 비율	170
표 5-2 • 중요도 1그룹군 이슈	180
표 7-1 •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과제 및 추진체계	223

Figure Contents

그림 2-1 • Archie B. Carroll의 CSR Pyramid	20
그림 2-2 • ISO26000 구조	22
그림 2-3 • ISO26000 7대 핵심주제	23
그림 7-1 • 성인교육 프로그램 개발 과정	227

ISO 26000 인증서



Certification

We hereby state that

Namgu Ulsan Metropolitan City

has successfully implemented the recommendations of the

ISO 26000 and ONR192500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Namgu Ulsan Metropolitan City is well acquainted with ISO 26000, its content, and how it may be used to prioritise and to work with social responsibility.

Namgu Ulsan Metropolitan City recognises ISO 26000 as a reference document that provides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and has used ISO 26000 as a guide to integrate social responsibility into their values and practices.

This verification is valid from 20 December 2018 to 19 December 2021 with audits on an annual basis.

Serial Number: 1006/18
Vienna
December



Martin Neureiter, CEO
The CSR Company International

CSR Company의 리뷰결과

Review of Content Report by Martin Neureiter, CEO CSR Company International

For Namgu Ulsan Metropolitan City

Namgu Ulsan Metropolitan City is a well structured administrative body of a buzzing, highly developed and prospering city – with all its different impacts.

With the clear commitment from the top to implement the guidance of ISO 26000 the path is set for the city to become a sustainable peer for many other administrations in the country. The efforts undertaken to address environmental issues, to deal with expectations of the public and in regards to labour issues are exemplary for a public administration. We congratulate the responsible people for their efforts.

Of course there are still areas that can be improved, such as the representation of women in leading positions within the administration or most of all, the support for sustainability issues in the supply chain of the organisation. Also the issue of potential bribery can be addressed in a more systematic way, just to avoid the risk of law suits against the city. We would strongly recommend the implementation of ISO 37001 – Anti Bribery Management System to ensure legal conformity, in the near future. Also in this ever changing world the issue of Human Rights becomes more and more relevant and will need more attention in future. Especially regarding people with disabilities but also refugees and migrants.

We wish Namgu Ulsan Metropolitan City all the best for the next steps and we will be very interested to monitor the developments regarding Social Responsibility and ISO 26000 within your organisation. If you allow we will also promote your activities on a global scale as a peer benchmark for other administration authorities how the implementation of ISO 26000 can support the core cause of a public administration.

Martin Neureiter

President CSR Company International

Chair of the ISO 26000 Stakeholders Global Network

Chair of the CSR Centre at the University of St. Gallen, Switzerland

Academic Head of the Ferdinand Porsche University MBA program “International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Management”.

01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적 책임(ISO 26000) 구현을 위한 지속가능성 보고서

개요

1. 남구 현황
2. 보고서의 작성 기준과 범위
3. 보고서의 특징
4. 보고서의 구성

제1장 개요

1. 울산광역시 남구 현황

■ 역사적 배경

- 울산지역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삼한시대에 진한에 속하였고, 삼국시대에는 신라의 굴아화현에 속해 있었으며 고려시대에는 울주로 지칭됨
- 울산이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한 것은 조선시대 태종 13년(1413년)이며 선조 31년(1598년)에 울산도호부로 승격되면서부터이며, 이후 고종 32년(1895년) 울산군으로 개칭됨
- 1914년 부·군 정리하는 지방제도 개편 시 울산면(태화강 이남의 신정, 달동, 삼산, 옥동지방)과 대현면(현남면, 현북면)으로 구분됨
- 1931년 울산면이 울산읍으로 승격되었으며, 1962년 1월 27일 울산읍, 대현면 등이 울산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되고, 동년 6월 1일 울산시로 승격되면서 장생포출장소가 설치되고 무거동이 편입됨
- 울산시 남구는 1914년 울산면을 그 모태로 하고 있으며, 1985년 7월 15일 대통령령 제11716호로 일반구제가 실시되면서 개칭되었으며, 1997년 7월 15일 법률 제5243호로 울산광역시설치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자치구로 승격됨¹
- 울산 광역시 남구는 울산 중심부에 위치하고 중·동·북구, 울주군이 주변을 감싸고 있으며, 북쪽은 태화강을 경계로 중·동·북구, 울주군과 접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외항강을 경계로 울주군과 접하고, 동쪽은 동해와 접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문수산을 경계로 울주군과 접하고 있음. 동서간의 거리는 13,780m이며, 남북간의 거리는 10,710m임. 인근 도시와의 거리는 부산이 남쪽으로 64km, 경주가 북쪽으로 39km 떨어져 있음
- 지형적으로 동해와 접해 있어 연평균 3~4개의 태풍이 영향을 미치고 해풍이 기온을 조절하여 기후는 온화한 편이며, 계절풍이 많이 불어 여름은 우기, 겨울은 건기로 뚜렷이 구분됨

¹ 울산남구백서. 2018. 5



■ 인구와 면적

- 울산광역시 남구의 인구는 2018년 12월말 현재 134,986세대 330,732명으로 2017년 대비 232세대가 증가하고, 4,707명이 감소함. 인구밀도는 4,502명/km²로 울산광역시 1,088명/km²의 약 4.1배의 조밀도를 보이고 있음
- 면적은 73.46km²로서 울산광역시 전체(1,061.18km²)의 6.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 면적을 보면, 선암동이 27.77km²로 가장 넓으며 수암동이 0.54km²로 가장 좁은 반면, 지역별 인구수는 삼산동이 50,644명으로 가장 많고 신정5동이 9,116명으로 가장 적음

■ 행정기구

- 2018년 12월 31일 현재 3국 1실 1관 23과 1보건소 1의회사무국 14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759명으로 본청 517명, 보건소 55명, 의회사무국 17명, 동 170명임

■ 재정규모

- 2018년도 남구 재정규모는 총 4,655억 52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274억 87백만원, 특별회계는 225억 78백만원이며, 2017년 대비 일반회계는 9.8%(383억 66백만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4%(5억 84백만원) 증가하였고, 재정자립도는 31.1%, 재정자주도는 44.3%임

■ 남구의 비전과 방침

2018년 10월 현재, 남구청은 '주민이 먼저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6개의 구정지표를 제시하고 있음

■ 비전 및 방침

울산 남구청 구정비전 및 지표

구정비전

주민이 먼저다 따뜻한 행복남구



구정지표

경제를 살리는 도시
고용이 먼저인 도시
안전이 확보된 도시
복지가 탄탄한 도시
문화가 숨쉬는 도시
행정이 깨끗한 도시

• 구정비전 의미

민선 6기는 주민을 최우선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을 추구함으로써 35만 구민 모두가 살기 좋고 따뜻한 행복도시 남구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 구정지표

① 경제를 살리는 도시

- 지역 기업체와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 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협력을 이끌어 내는 동시에 다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맞춰 남구만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만들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함

② 고용이 먼저인 도시

- 최고의 복지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여 누구나 쉽게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살 맛 나는 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함

③ 안전이 확보된 도시

- 재난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이 믿고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만들고,
-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중심의 구정을 펼치고자 함

④ 복지가 탄탄한 도시

-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해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실천하여 모든 구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 어려운 이웃에 대한 체계적이고 탄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포용적 복지사회를 만들고자 함

⑤ 문화가 숨쉬는 도시

- 남구만의 특화된 문화·관광 콘텐츠를 기반으로 문화와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남구를 조성하고,
-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어디서나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생활문화 시대를 열어나가고자 함

⑥ 행정이 깨끗한 도시

-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구정을 실현하기 위해 소통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 조직도



- 2018년 10월 현재, 남구청은 1실 3국 1보건소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지원국은 총무과, 주민소통과, 세무과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복지경제국은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경제정책과, 환경관리과 등으로 구성하여 주민 복지 및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며, 안전도시국은 안전총괄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건축허가과 등으로 구성되며 주로 안전 및 도시정책을 맡고 있음

2. 보고서의 작성 기준과 범위

■ 보고서 작성 기준

본 보고서는 KSA ISO26000:2012 (사회적책임에 대한 지침)의 7대 핵심주제(CS:Core Subject)를 중심으로 울산 남구청의 지속가능경영과 사회적 책임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G4 권고사항과 UN Global Compact의 원칙을 포함하여 상호 연계성을 최대한 살려 작성하였음

■ 보고서 범위

본 보고서는 대한민국 울산시 남구지역에 걸쳐 시행되는 남구청의 활동과 성과를 담고 있음

■ 보고 기간

본 보고서는 2017년과 2018년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하였고, 적용가능한 경우 최근 3개년 이상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함

3. 보고서의 특징

- 본 보고서는 ISO26000에서 기술한 사회책임 핵심주제를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여 그 성과를 기술하는 보고서임
- 공공기관이라는 조직의 특성상, 해당 조직이 내부적으로 갖는 사회적 책임과 정책을 통해 구민(국민)들에게 정책을 통해 구현되는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기술함
- 본 보고서는 사회책임에 관한 조직의 기대사항과 성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경제, 사회, 환경분야의 성과를 보고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UN 글로벌컴팩트에서 요구하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관련 항목에 대한 보고를 같음하도록 구성되어 있음

4. 보고서의 구성

- 본 보고서는 모두 7장으로 구성됨
- 제1장은 울산광역시 남구의 현황을 소개하고, 본 보고서의 작성 기준과 범위 및 특징을 정리함
- 제2장은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인 ISO26000의 개념과 구조 및 주요내용을 소개함
- 제3장에서는 사회적 책임 이행과 관련한 성과를 분석하는데, 주요내용은 거버넌스, 인권, 노동, 환경, 공정운영, 소비자보호,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등 7대 핵심주제를 포괄하여 진행함
- 제4장에서는 사회적 책임수준 진단 및 평가를 수행함. 이를 위하여 오스트리아 CSR Company의 SR Toolkit를 활용한 분석과 함께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함
- 제5장에서는 이해관계자 분석 및 중대성 분석을 수행함
- 제6장은 GRI 및 UNGC 연계성 분석에 대한 내용을 남구청의 사회책임 이행성과와 연계하여 비교 분석함
-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개선방향 및 향후과제를 포함하여 향후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02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적 책임(ISO 26000) 구현을 위한 지속가능성 보고서

사회적 책임과 ISO 26000

1. 사회적 책임의 개념
2. ISO 26000의 특징과 구조
3. ISO 26000의 주요내용
4. ISO 26000의 지방정부 적용

제2장 사회적 책임과 ISO 26000

1. 사회적 책임의 개념

- 조직의 사회적 책임이란 개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서 유래.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란, 기업이 이윤을 추구할 때 사회 전체의 복지와 사회적 가치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개념임
- 따라서 기업은 정부, 주주, 종업원, 공급자, 고객, 경쟁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과 공동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경영을 지속해 나가는 것을 뜻함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뜻하는 CSR이란 개념은 국제적으로도 광범위하고 보편적으로 사용되지만, 그 개념에 관해서는 이를 바라보는 기관마다 다양한 견해가 존재함

구분	정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기업들이 자발적 방식으로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자사의 기업활동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합시키는 개념
UN무역개발협약(UNCTAD)	기업들이 사회의 요구사항과 목표에 어떻게 대응하고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것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법 준수를 뛰어넘는 기업의 자발적이고 다양한 경제·사회·환경 이니셔티브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위원회	기업이 법적 의무를 뛰어넘어 자발적으로 전개하는 이니셔티브이며, 기업이 자사 활동이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는 방식
국제사용자기구(IOE)	법 준수를 뛰어넘는 다양한 사회·경제·환경 분야에서의 기업의 자발적이고 긍정적인 활동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세계기업협의회(WBCSD)	직원, 가족, 지역사회 및 사회 전체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개발에 기여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

- 2010년에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사회책임에 관한 국제표준(ISO26000)에서는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고 있음
- 사회적책임(social responsibility) : 조직의 의사결정 및 활동이 사회 및 환경(2.6)에 미치는 영향(2.9)에 대해, 투명하고 윤리적인 행동을 통해 조직이 지는 책임

- 투명하고 윤리적인 행동은
 - 사회의 보건 및 복지를 포함한 지속가능발전(2.23)에 기여하며
 - 이해관계자(2.20)의 기대를 고려하며
 - 해당되는 법을 준수하며 국제행동규범(2.11)을 지키며
 - 조직(2.12) 전반에 걸쳐 통합되며 조직의 관계 속에서 실행되는 것
- 위와 같이 CSR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법적 책임”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음
- 통상적으로 CSR은 ‘경제, 법, 윤리, 자선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으로 인식되나, 경제적 책임(이익 추구)을 제외한 법준수, 윤리, 자선적 책임을 CSR의 3대 축이라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
- 경제적 책임은 기업경영의 기본이 되는 영역이고, 법적, 윤리적, 자선적 책임이 추가되는 흐름인데, 법적, 윤리적 책임은 환경경영과 준법경영, 윤리경영을 통해 구현되고, 자선적 책임은 사회적 공헌으로 이해

[표 2-1] CSR의 3대 분야별 개념

구분	협의	광의
환경 경영	• 정부에서 제정한 환경공해 방지 및 작업장 환경, 제품안전 등과 관련된 법과 규제의 준수여부	• 법적 책임을 넘어 윤리적 책임으로까지 확대 • 환경에 대한 오염방지 차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으로 확대
정도 경영	• 주주권한, 노사관계, 윤리규정, 각종 법령에 대한 준수여부	• 기업정보의 공개를 의미하는 투명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 확대된 윤리경영 개념으로 확장
사회 공헌	• 자원봉사활동, 지역사회활동, 긴급구호활동, 기부금 기탁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활동	•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으로 확대 - 잉여상품, 유통채널, 기술 노하우와 같은 비금전적 기업자산의 기증 및 공유 등

- CSR활동 분야의 단어로는 투명경영, 윤리경영, 녹색경영, 상생경영 등이 혼재되어 사용하고 있는데, CSR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는 미국의 경영학자이자 조지아대 교수인 캐롤임
- 캐롤은 ‘CSR의 4단계 책임론’으로 유명한데, 위의 그림에서 가장 아래에 위치한 경제적 책임은 기업의 목적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기업의 이윤추구’와 유사하며, 위로 갈수록 높은 단계의 책임을 갖는 것으로 사회적 책임의 수준을 정의



[그림 2-1] Archie B. Carroll의 CSR Pyramid

2. ISO 26000의 특징과 구조

■ ISO 26000의 제정 경과

- ISO26000 사회적 책임 표준을 만들기 위한 1차 총회가 열린 것은 2005년 3월 브라질 살바도르임. 그 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ISO 26000의 개발 작업은 2005년 9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2차 총회에서 표준 초안 작성의 기본방향을 정했으며, 2006년 3월 1차 작업초안(WD1)을 공개
- 이 초안에 대해 접수된 2천여 개의 의견과 같은 해 5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된 3차 총회 토론 내용을 종합하여 2차 작업초안(WD2)이 2006년 10월 6일 발행
- 2차 초안에 대해서는 총 5천여 개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2007년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제4차 총회에서 이 의견들을 종합해서 3차 초안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
- 2007년 7월 23일에는 그간의 논의사항을 종합한 3차 작업초안(WD3) 발표(사회적 책임 국제표준 제정에 따른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2010)
- 이후 5차 총회(오스트리아, 비엔나) 후 6차 총회(칠레, 산티아고)를 거치면서 위원회 초안(CD)으로 넘어가는 것이 결의되고, ISO/CD 26000 발간
- 그 후 2009년 4월초 CD 단계에서 DIS 단계로 넘어갈 것인지 여부를 두고 투표가 진행되어 가결되었고, 2010년 2월에는 DIS 단계에서 FDIS로 넘어가는 것이 ISO 회원국 투표로 확정됨(사회적 책임 국제표준 제정에 따른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2010)

[표 2-2] ISO 26000 제정 경과

일 정	추진 내용
2001년 4월	ISO 이사회가 소비자정책위원회(COPOLCO)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표준개발 검토를 요청
2002년 6월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아닌 모든 조직의 사회적 책임으로 의견을 정리
2002년 9월	ISO 이사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하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전략자문그룹(SAG)을 구성
2004년 4월	전략자문그룹은 ISO 기술관리부에 사회적 책임에 대한 보고서와 권고안을 제출
2004년 6월	ISO 기술관리부는 국제표준지침 표준 개발을 결정
2004년 10월	ISO 기술관리부는 신규표준제정안을 제출하고 스웨덴과 브라질 표준기관을 공동 의장국으로 지명
2005년 1월	ISO는 투표로 사회적 책임 표준을 개발하기로 결정
2005년 3월	ISO와 ILO 간 양해각서 체결 제1차 사회적 책임 총회를 개최(브라질 살바도르)하여 사회적 책임 표준 작업반 구성 조직을 결정
2005년 9월	제2차 사회적 책임 총회를 개최(태국 방콕)하여 사회적 책임 표준 운영절차를 마련
2006년 5월	제3차 사회적 책임 총회를 개최(포르투갈 리스본)하여 사회적 책임 표준 기본 프레임을 작성
2006년 12월	ISO와 UN 지구협약 간 양해각서 체결
2007년 1월	제4차 사회적 책임 총회를 개최(호주 시드니)하여 사회적 책임 작업반초안 2판의 7개 핵심 쟁점을 확정
2007년 7월	사회적 책임 작업반초안 3판 제출
2009년 4월	CD 단계에서 DIS 단계 이전 투표
2010년 2월	DIS 단계에서 FDIS로 넘어가는 것이 ISO 회원국 투표로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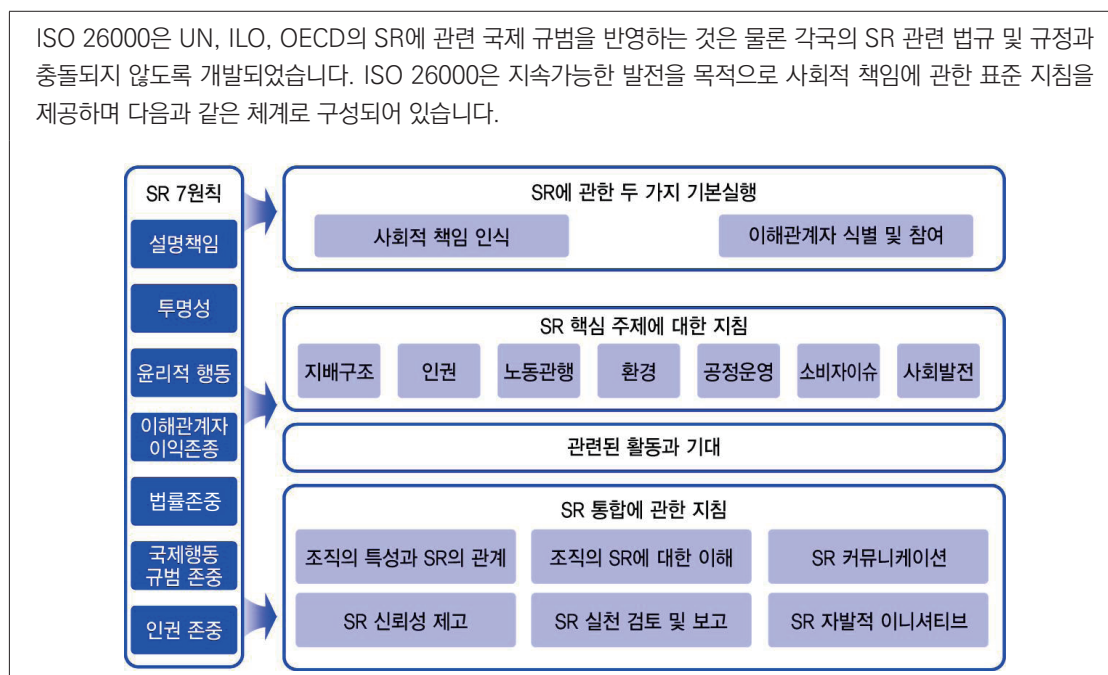
■ ISO 26000의 특징

-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표준규범화가 진행됨에 따라 각국의 상이한 CSR 표준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에서는 ISO9000(품질경영), 14000(환경경영)과 같은 시스템 표준 형식으로 SR 표준 가이드라인 ISO 26000을 제정
- 하지만, 기존의 ISO 9001이나 ISO 14001과 달리, ISO 26000은 인증을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다만, 기업 스스로 또는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통해 사회적 책임 이행 실적을 보증(assurance)하는 방안 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능성이 열려 있기에 그 영향력은 지대할 수밖에 없음(기업지배구조리뷰, 2010)
- ISO26000은 사회적 책임이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나 NGO 등 모든 형태의 조직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CSR'에서 기업을 뜻하는 'C'를 뺀 사회적 책임으로 범위를 확장하였으나, ISO26000은 기업들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임

- 제3자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일반 ISO표준과 달리 단지 지침을 제공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무역이나 해외진출에 있어 기업에 대한 중요한 평가 지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하나하나의 항목들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됨
- 이렇듯 ISO26000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기업, 정부, 시민사회에서는 국가경쟁력 재고와 더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 각 분야별로 많은 노력을 기울임 (기업지배구조리뷰, 2010)

■ ISO 26000의 구조

- ISO26000(SR)은 크게 7개장으로 구성
- 1,2,3장은 적용범위와 용어와 정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
- 4장은 사회적 책임을 위한 7개 원칙을 밝히고 있음. 사회적 책임은 각 주제별로 설명책임이 부과되며, 투명성을 유지해야 하며, 윤리적 행동을 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하여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정신을 담고 있으며, 법률과 국제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인권을 보호하는 대원칙에 서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5장은 사회적 책임을 인지하고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6장에서는 7개 핵심 주제 및 이슈별로 기대사항을 정리하고, 7장은 이행수단과 방법론에 대하여 정리하고 있음
- 이를 종합하여 ISO26000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기업지배구조리뷰, 2010).



[그림 2-2] ISO26000 구조



[그림 2-3] ISO26000 7대 핵심주제

3. ISO 26000의 주요내용

- ISO 26000의 7대 핵심주제와 37개 주요 이슈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핵심 주제와 쟁점	
[핵심주제 1] 조직 거버넌스	
핵심주제 1: 조직 거버넌스	<p>조직의 의사결정 프로세스 및 구조는 다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좋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책임에 대한 조직의 의지표명을 반영하는 전략, 목표 및 세부목표를 개발 - 고위층의 의지표명 및 설명책임을 제시 - 사회적책임 원칙(4. 참조)들이 실행되는 환경 및 문화의 조성 및 육성 - 사회적책임 성과와 관련된 경제적 및 비경제적 인센티브 시스템의 조성 - 재무, 자연 및 인적 자원의 효율적 사용 - 대표성이 낮은(under-represented) 그룹(여성, 인종 및 소수민족 그룹 포함)이 조직의 고위직을 차지할 공정한 기회를 촉진 - 당면한 니즈 및 미래세대의 니즈를 포함하여, 조직 및 조직의 이해관계자간의 니즈를 조화 - 의견 일치 및 불일치의 영역을 식별하며 발생가능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하는 조직과 이해관계자와의 양방향 의사소통 프로세스를 수립 - 전 직급의 피고용인이 조직의 사회적책임 활동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것을 격려

<p>핵심주제 1: 조직 거버넌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을 대신해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권한, 책임 및 역량 수준을 균형잡음 - 의사결정이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장하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조직의 의사결정 및 활동의 결과에 대한 설명책임을 정하는 의사결정의 실행을 기록 - 조직의 거버넌스 프로세스를 정기적으로 검토 및 평가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프로세스를 조정하고 조직 전반에 걸친 변화에 대해 의사소통
<p>[핵심주제 2] 인권</p>	
<p>쟁점 1 : 실사</p>	<p>실사 프로세스는, 인권에 특정해서 조직의 규모 및 상황에 적합한 방식 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내 사람 및 조직에 긴밀히 연계된 사람에게 의미있는 지침을 주는 조직의 인권 정책 - 기존 활동 및 제안된 활동이 인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는 수단 - 조직 전반에 걸쳐 인권 정책을 통합하는 수단 - 우선순위 및 접근방식에 있어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시간 경과에 따른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수단 - 조직의 의사결정 및 활동의 부정적 영향을 다루기 위한 조치
<p>쟁점 2: 인권 위험상황</p>	<p>조직은 위와 같은 상황을 다룰 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 이런 상황에서는 인권 존중을 제고하기 위해 좀 더 강화된 실사 프로세스가 필요할 수도 있다.</p> <p>보기를 들면, 이것은 독립적인 인권영향평가를 하는 것이다. 이런 한 가지 이상의 상황이 적용되는 환경에서 운영될 때, 조직은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한 어렵고 복잡한 판단에 직면하게 된다. 단순한 공식 또는 해결방안이 없을 수도 있지만, 조직은 전반적인 인권 실현을 촉진하고 방어하는 데 기여하면서, 조직의 의사결정을 인권 존중이라는 일차적 책임에 기초하는 것이 좋다.</p> <p>이에 대한 대응으로, 조직은 인권 존중이라는 바람직한 목표가 실질적으로 달성되도록 조직 활동의 잠재적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특히, 다른 인권 침해를 악화시키고 또는 다른 인권 침해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상황의 복잡성을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p>
<p>쟁점 3: 공모회피</p>	<p>인권 침해에서 연루/공모를 만들 가능성이 현저한 영역은 보안방식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무엇보다도 조직은 조직의 보안방식이 인권을 존중하고, 법 집행을 위한 국제규범 및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좋다. 보안직원(고용, 계약 또는 하청을 준)은 인권 기준 준수를 포함하여 적절하게 훈련받아야 하며, 보안절차 또는 보안직원에 대한 불만은 즉각적으로,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독립적으로 다루고 조사하는 것이 좋다. 더욱이 조직은 공공 보안인력이 저지른 인권 침해에 참여, 촉진, 또는 이로부터 이득을 얻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도록 실사를 하는 것이 좋다. 추가적으로, 조직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을 침해하는 단체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다. - 파트너십 맥락 또는 계약 업무의 수행 시, 인권을 침해하는 파트너와 공식 또는 비공식 파트너십 혹은 계약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좋다. - 조직이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가 생산된 사회적 조건 및 환경적 조건을 스스로 알리는 것이 좋다. - 모든 대안적 해결방안을 살펴보고 영향받은 당사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는 보장을 포함하여, 국내법 및 국제규범에 따르지 않는다면, 어떤 형태로든 자신이 살고 있는 토지로부터 쫓겨나는 데 연루/공모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것이 좋다. - 관련 국가의 고용에서 발생하는 차별 행동과 같은 인권 침해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공공성명 또는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 반(反)사회 활동에 참여한 단체와 관계를 피하는 것이 좋다. 조직은 법적 및 사회적 비교대상(benchmarks)의 공통 특징을 실사 프로세스에 통합함으로써 연루/공모의 리스크를 알고 예방하며 다룰 수 있게 된다.

<p>쟁점 4: 고충처리</p>	<p>조직은 조직 자신의 이용 및 이해관계자의 이용을 위해, 구제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또는 직접 수립하지 않는 경우는 이용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좋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성 특정 고충 프로세스 당사자 누구도 그 프로세스의 공정한 관리에 간섭할 수 없음을 보장하는 명백하고 투명하며 충분히 독립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포함한다.
<p>쟁점 5: 차별과 취약그룹</p>	<p>조직은 피고용인, 파트너, 고객, 이해관계자, 회원 및 조직이 접촉 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이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 조직은 직·간접적 차별이 존재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조직의 운영 또는 영향권 내에 있는 다른 당사자의 운영을 조사하는 것이 좋다. 조직은 또한 조직의 활동과 연계된 관계를 통해 차별적 관행의 원인이 되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것이 좋다. 혹시 그런 경우, 조직은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다른 당사자가 그들의 책임을 다하도록 격려하고 돕는 것이 좋다. 이것이 성공적이지 않다면, 조직은 그런 조직과의 관계를 다시 고려하는 것이 좋다. 보기를 들면, 조직은 남성과 비교해서 여성과 상호작용하는 전형적인 방식을 분석해도 되고, 이런 관점에서 정책 및 의사결정이 객관적인지 또는 정형화된 선입견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고려해도 된다. 조직은 인권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지역 또는 국제조직의 자문을 구하기를 원할 수도 있다. 조직은 국내 및 국외 모니터링 절차 또는 조사 절차의 관찰결과(findings) 및 권고를 지침으로 삼을 수도 있다.</p> <p>조직은 취약집단의 구성원 사이에서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를 촉진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조직은 실행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차별 또는 과거 차별의 악습을 구제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좋다. 보기를 들면, 역사상 차별을 받아온 집단 출신 사람을 고용하고 또는 그 조직과 거래하려고 노력하고, 실행가능한 경우, 교육, 기반시설 또는 사회 서비스에의 완전한 접근을 거부당했던 집단에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늘리는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 좋다. 조직은 조직이 상호작용하는 사람으로부터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다양한 관점을 얻을 수 있다. 다양한 관점은 다방면의 인적 자원 및 관계의 완전한 발전에 따른 부가가치라는 측면에서 인권 측면뿐만 아니라 조직 스스로의 운영에도 이득이라는 것을 고려하게 한다. 아래의 취약집단의 보기는 특정 관련 활동 및 기대사항과 함께 설명되어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및 여자 어린이는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남성 및 남자 어린이와 같이 자원 및 기회에 동등하게 접근하는 것을 빈번하게 거부당하고 있다. 여성은 결혼 및 가족문제에 관해 결정할 권리 및 자신의 출산보건에 대해 결정할 권리뿐만 아니라, 교육, 고용, 경제 및 사회 활동을 포함하여 모든 인권을 차별 없이 누릴 권리를 가진다. 조직의 정책 및 활동은 여성의 권리에 대해 마땅히 고려를 하고, 경제, 사회 및 정치 영역에서 여성 및 남성의 동등 대우를 촉진하는 것이 좋다. - 장애인도 종종 취약한데, 이는 부분적으로 장애인의 기능(skills) 및 능력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 조직은 남녀 장애인이 사회에서 존엄성, 자율성 및 충분한 참여를 받도록 보장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좋다. 비차별 원칙은 존중되는 것이 좋으며, 조직은 시설접근에 대한 합리적인 규정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 아동은 특히 취약한데, 이는 부분적으로 아동의 의존적 상황 때문이다.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할 때, 아동의 최상 이익을 일차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다. 비차별, 아동의 생명권, 생존권, 발전권 및 표현의 자유권을 포함하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원칙을 항상 존중하고 고려하는 것이 좋다. 조직은 피고용인이 아동을 성(性)적으로 및 기타의 형태로 착취하는 데 참여하는 것을 예방하는 정책이 있는 것이 좋다. - 토착민은 식민지화, 토지 몰수, 다른 시민과의 분리상황 및 인권 침해를 포함하는 전체적인 차별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취약집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 토착민은 집단권을 누리며, 토착민에 속한 각 개인은 보편적인 인권, 특히 동등 대우 및 동등 기회 권리를 가진다. 집단권은 자기의사결정권(자신의 정체성, 정치적 상황 및 발전 방식을 결정하는 권리를 의미함), 전통적으로 점유해 온 토지, 물, 자원에 대한 접근 및 관리, 자신의 관습, 문화, 언어 및 전통지식을 차별 없이 유지하고 향유할 권리,

	<p>자신의 문화재산 및 지식재산을 관리할 권리를 포함한다. 조직은 조직의 의사결정 및 활동을 수행할 때 토착민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좋다. 조직은 의사결정 및 활동을 수행할 때 비차별 원칙 및 토착민 소속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좋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자, 이주근로자 및 그 가족 또한 취약할 수도 있는데, 외국 또는 지역 출신 때문에, 특히 이들이 비정규 이주자 또는 불법 이주자일 경우 그러하다. 조직은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주자, 이주근로자 및 그들 가족의 인권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좋다. - 카스트를 포함하여, 혈통에 따라 차별받는 사람. 수억 명에 이르는 사람이 세습지위 또는 혈통 때문에 차별받고 있다. 이런 종류의 차별은 일부 사람이 자신이 태어난 그룹이 깨끗하지 않고 또는 가치가 적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정당화되어 온 인권 침해의 역사에 기초한다. 조직은 이런 관행을 피하며, 실행 가능하다면, 편견을 없애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
쟁점 5: 차별과 취약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종에 따라 차별받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인종, 문화적 정체성 및 민족 출신 때문에 차별받는다. 이는 일부 사람이 피부색 또는 문화가 열등하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정당화되어 온 인권 침해의 역사에 있다. 인종차별주의는 노예제 또는 한 인종이 다른 인종을 탄압한 역사를 가진 지역에서 종종 보여진다. - 기타 취약집단은 보기를 들면, 고령층, 난민, 빈곤층, 문맹, HIV/AIDS 환자, 소수집단 및 종교집단을 포함한다.
쟁점 6: 시민권과 정치적권리	<p>조직은 모든 개별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좋다. 보기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삶 -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조직은 내부 또는 외부에서 조직에 대한 비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견해 또는 의견을 억압하지 않는 것이 좋다. -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 -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수단을 통해 정보 및 아이디어를 얻고, 받고, 전하는 자유 -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함께 재산을 소유할 권리 및 임의로 재산을 빼앗기지 않을 자유 - 내부 징계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정당한 프로세스에 접근하고 항변할 권리. 어떤 징계조치이든 상응적인 것이 좋으며 신체 처벌,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쟁점 7: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권리	<p>조직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이러한 권리 향유를 제한, 방지 또는 지연하는 활동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실사를 할 책임이 있다. 다음은 조직이 이 권리를 존중하는 좋은 보기이다. 조직은 지역주민의 권리를 포함한 이런 권리에 대해, 새로운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조직의 의사결정, 활동, 제품 및 서비스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좋다. 나아가 조직은 물 같은 필수제품 또는 자원에 대한 접근을 직·간접적으로 제한 또는 거부하지 않는 것이 좋다. 보기를 들면, 생산 프로세스는 부족한 식수자원의 공급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조직은 필수상품 및 서비스의 분배가 위태로울 때 이의 효율적인 분배를 보장하기 위한 특정 정책을 채택 또는 유지하는 것을 적절히 고려하는 것이 좋다. 또한 사회적책임을 다하는 조직은 이런 권리 조항과 관련하여 정부 및 다른 조직의 각기 다른 역할 및 능력을 고려하는 동시에, 적절할 때 그런 권리의 이행에 기여할 수 있다. 보기를 들면, 조직은 다음의 내용을 고려할 수도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구성원을 위한 교육 및 평생학습(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가능한 경우, 지원 및 시설을 제공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존중 및 실현을 지원하는 다른 조직 또는 정부기관의 노력에 동참 - 이런 권리 이행에 기여하는 핵심 활동과 관련된 방식을 탐색 - 빈곤층의 구매능력에 맞게 제품 또는 서비스를 조정 <p>다른 모든 권리처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역시 지역적 맥락에서 고려하는 것이 좋다. 관련활동 및 기대에 대한 추가지침은 6.8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에 있다.</p>

<p>쟁점 8: 근로에서의 근본원칙과 권리</p>	<p>여러 사법권 내에서 이러한 권리가 법으로 제정되어 있지만, 조직은 다음 사안을 다루는 것을 독립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좋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 근로자 및 사용자는, 어떠한 차이 없이, 관련 조직의 규칙만을 조건으로 어떠한 사전 승인 없이 스스로 선택에 따른 조직을 설립하고 이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 근로자가 구성 또는 참여한 대표 조직은 단체교섭의 목적을 위해 인정되는 것이 좋다. 고용 협약 및 조건은 근로자가 그렇게 선택한 경우 자발적 단체교섭을 통해 정해질 수도 있다. 근로자 대표자는 자신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하고 간섭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제공받는 것이 좋다. 단체협약에는 분쟁 해결을 위한 조항이 포함되는 것이 좋다. 근로자 대표자는 의미있는 협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좋다(결사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이 어떻게 사회적 대화와 관련이 있는지에 관한 추가 정보는 6.4 참조). - 강제노동 조직은 강제노동 또는 의무노동에 관여하거나 그로 인해 이득을 누리지 않는 것이 좋다. 불이익 위협이 있거나 근로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근로 또는 서비스를 얻지 않는 것이 좋다. 재소자가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지 않았거나, 재소자의 노동이 공권력의 감독 및 통제 아래 있지 않을 경우, 조직은 재소노동에 관여 또는 이로부터 이익을 얻지 않는 것이 좋다. 나아가,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제대로 된 고용조건이 증거가 되는 것처럼, 자발성에 기초하지 않았다면, 민간 조직은 재소노동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평등한 기회 및 비차별 조직은 조직의 고용 정책이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출신 국가, 사회출신, 정치 견해, 나이, 또는 장애에 기초한 차별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최근 생겨난 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에는 결혼 여부, 가족사항, 개인적 관계(성 지향성을 뜻함) 및 HIV/AIDS 상황과 같은 건강상태가 포함된다. 이는 고용 정책 및 관행, 수입, 고용 조건, 훈련 및 승진에의 접근성, 고용 만료는 직무의 요건에만 기초하는 것이 좋다는 일반원칙과 맥을 같이 한다. 조직은 또한 작업장에서의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 평등한 기회 및 비차별을 촉진하는 정책 및 활동의 영향을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 취약집단의 보호 및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인 조치를 취한다. 이 조치는 장애인에 적절한 조건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돕도록 작업장을 만들고 청년·고령 근로자의 고용 촉진, 여성의 평등한 고용기회 및 보다 균형 잡힌 여성 대표자의 고위직 진출 같은 이슈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수립 또는 참여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 아동노동 최저 고용 연령은 국제 선언서에 결정되어 있다(상자 7 참조). 조직은 어떤 형태의 아동노동 이용에 관여하거나 이를 통해 이익을 얻지 않는 것이 좋다. 조직이 조직의 운영 또는 영향권 내에서 아동노동을 행하고 있다면, 조직은 가능한 한 해당 아동이 근로를 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아동에게 적절한 대안, 특히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아동에게 해를 주지 않고 또는 학교참석, 아동의 완전한 발달에 필요한 다른 활동(휴양 활동 같은)을 방해하지 않는 가벼운 근로는 아동노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주제 3] 노동관행</p>	
<p>쟁점 1: 고용과 고용관계</p>	<p>조직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근로가 법적으로 피고용인으로 인정되고 또는 법적으로 자영업자로 인정된 남성 및 여성에 의해 수행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법적으로 고용관계로 인정되는 관계를 위장하여 법이 사용자에게 부과한 의무를 회피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개별 근로자 및 사회 모두에게 안정된 고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좋다. 근로의 성격이 진정한 단기간 또는 계절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시적인 근로의 과도한 사용 또는 일용직 사용을 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력 기획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p>쟁점 1: 고용과 고용관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에 영향을 주는 작업장 폐쇄 같은 조직 운영상의 변화를 고려할 때, 부정적 영향을 가능한 한 최대한 어떻게 완화할지에 대한 고려와 함께 근로자 대표자에게 합리적인 통지 및 적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 모든 근로자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어떠한 노동관행에 있어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임의해고 또는 차별해고 관행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좋다. - 근로자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이 좋다. - 법적으로 인정받고, 그렇지 않다면 사용자의 책임과 양질의 근로조건을 제공할 수 있고 그걸 의지가 있는 조직에 한하여 근로 계약 또는 근로 하청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조직은 법적으로 인정받고 근로수행에 대한 기타 방침이 근로를 수행한 사람들에게 법적 권리가 주어지도록 하는 노동중개인만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재택 근로자가 다른 임금근로자보다 더 열악한 대우를 받지 않는 것이 좋다. - 재택 근로자를 포함한 조직의 파트너, 공급자 또는 하청업자의 불공정하고, 착취적 또는 침해적인 노동관행으로부터 이득을 얻지 않는 것이 좋다. 조직은 영향력 수준이 높을수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책임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조직의 영향권 내에 있는 조직이 책임있는 노동관행을 따르도록 격려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좋다. 상황 및 영향력에 따라, 합리적인 노력은 공급자 및 하청업자에 대한 계약의무 설정, 불시 방문 및 감독, 계약자 및 중개인을 감독하는 실사를 포함한다. 공급자 및 하청업자가 노동관행 법규를 준수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그 법규는 세계인권선언 및 해당 ILO 노동기준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것이 좋다(영향권 내에서의 책임에 대한 추가 정보는 5.2.3 참조). - 국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해당국 국민의 고용, 직업 개발, 승진 및 발전 증대에 노력하는 것이 좋다. 이는 실현가능한 경우, 지역기업을 통해 구매하고 유통하는 것을 포함한다.
<p>쟁점 2: 근로조건과 사회적보호</p>	<p>조직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조건이 국내법 및 규정을 준수하고, 해당 국제노동기준을 지키고 있음을 보장하는 것이 좋다. - 단체협약과 같이, 다른 해당 법적 구속력을 지닌 선언서를 통해 수립된 더 높은 수준의 조항을 존중하는 것이 좋다. - 특히 국가 법률이 아직 채택되지 않은 경우, 적어도 ILO가 수립한 국제노동기준에 정의된 최소조항을 준수하는 것이 좋다. - 임금, 근로시간, 주휴, 휴가, 보건 및 안전, 모성보호, 일과 가정의 양립능력(ability to combine work with family responsibilities)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근로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 가능한 어디에서든지, 국가적 또는 종교적 전통 및 관습 준수를 허용하는 것이 좋다. - 근로와 삶의 균형을 가능한 한 최대로 허용하고, 관련 인근지역에서 비슷한 사용자가 제공하는 근로조건과 유사한 근로조건을 모든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좋다. - 국내법, 규정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및 다른 형태의 보수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조직은 근로자 및 그 가족의 필요에 적절한 최소한의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할 때, 조직은 국가의 일반적인 임금 수준, 생계비, 사회 보장 급부 및 다른 사회그룹의 상대적 생활 수준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또한 조직은 높은 수준의 고용을 달성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바람, 생산성 수준 및 경제 발전의 요구를 포함하는 경제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임금 및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 조직은 단체교섭에 관한 국가시스템에 따라, 근로자 또는 그 대표자와, 특히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노동조합과 단체협상을 하는 것이 좋다. - 동일 가치 근로에 대해 동일 임금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 법, 규정 또는 단체협약이 허용하는 어떤 제한 또는 공제를 제외하고는, 임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것이 좋다.

<p>쟁점 2: 근로조건과 사회적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이 운영되는 국가에서의 근로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 조항 관련 의무는 준수하는 것이 좋다. - 법, 규정 또는 단체협약을 통해 정해진 통상적인 또는 합의된 근로 시간을 따르는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좋다. 또한 피고용인에게 주휴 및 유급 연차휴가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 근로자의 근로 및 삶의 적절한 균형을 도울 수 있는 합리적 근로시간, 출산휴가, 그리고 가능한 경우, 보육시설 및 기타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가족에 대한 근로자의 책임을 존중하는 것이 좋다. - 법, 규정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의 초과근로를 보상하는 것이 좋다. 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요청할 경우, 조직은 관련 근로자의 이해관계, 안전 및 안녕(well-being), 그리고 근로에 내재된 어떠한 위험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조직은 강제적이고 보상 없는 초과근로를 금지하는 법 및 규정을 준수하며, 강제 노동에 관한 근로자의 기본 인권을 항상 존중하는 것이 좋다.
<p>쟁점 3: 사회적대화</p>	<p>조직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 수준을 포함해서, 사회적 대화 기구 조직과 해당 단체교섭 구조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좋다. - 근로자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증진 또는 단체교섭을 하기 위해 자신의 조직을 구성 또는 가입하는 권리를 항상 존중하는 것이 좋다. - 예를 들면, 근로자를 해고 또는 차별하는 방법으로 보복, 협박 또는 공포 분위기를 만드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 위협을 함으로써 근로자 조직을 구성, 가입 및 단체교섭하려는 근로자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조직 운영의 변화가 고용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조직은 해로운 영향을 가능한 한 최대한 줄이기 위한 결과를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해당 정부당국 및 근로자 대표자에게 합리적인 통지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 가능한 한, 그리고 합리적이고 지장을 주지 않는 정도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명된 근로자 대표자가 권한 있는 의사결정권자, 작업장, 그들이 대표하는 근로자 및 그들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시설에 접근하도록 하고, 조직의 재정 및 활동에 대한 진실되고 공정한 파악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도록 정부를 부추기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보기를 들면, 조직은 국내규정이 조직의 권리를 인정하더라도,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특정 산업구역에 자회사를 두거나 이 구역에 있는 회사로부터 조달받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이런 제한에 기초한 장려 제도에 참여하는 것을 지양하는 것이 좋다. - 조직은 또한 사회적 대화에 대한 기회를 조성하고, 그리고 이러한 대화 채널을 통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조직의 표현을 확대하는 수단으로써, 적절한 경우, 사용자 조직에 대한 참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p>쟁점 4: 근로에서의 보건과 안전</p>	<p>조직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력한 안전 보건 기준 및 조직 성과는 서로를 지원하고 보강한다는 원칙에 기초해서 산업보건안전 정책을 개발, 실행 및 유지하는 것이 좋다. - 제거, 대체, 공학적 통제, 관리적 통제, 관리통제, 근로절차 및 개인보호 장비 같은 통제 체계를 포함한 보건 및 안전 관리의 원칙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좋다. - 조직 활동과 관련된 보건 및 안전 리스크를 분석하고 통제하는 것이 좋다. - 근로자는 항상 모든 안전관행을 따르는 것이 좋다는 요구사항에 대해 소통하고, 근로자가 적절한 절차를 따르고 있음을 보장하는 것이 좋다. - 개인보호장비를 포함하여 비상사태 대처는 물론 고용상 부상, 질병 및 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 모든 보건 및 안전 사고와 문제를 감소 또는 제거하기 위해 이를 기록하고 조사하는 것이 좋다.

<p>쟁점 4: 근로에서의 보건과 안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 및 보건(OSH) 리스크가 여성(임산부, 최근 출산 또는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 남성, 장애 자, 비숙련자 또는 청소년 근로자 같이 특정 상황에 있는 근로자에게 다르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식을 다루는 것이 좋다. - 하청계약 근로자뿐만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 및 임시 근로자에게도 동등한 보건 및 안전 보호를 제공 하는 것이 좋다. - 스트레스 및 질병의 원인 또는 이를 유발하는 작업장에서의 심리사회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 하는 것이 좋다. - 전 직원에게 모든 관련 사안에 대한 적절한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 작업장의 보건 및 안전 조치가 근로자의 금전 지출을 수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 좋다. - 조직의 보건, 안전 및 환경시스템은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참여에 기초하고(상자 9 참조) 다음과 같 은 근로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좋다. - 보건, 안전의 리스크 및 이러한 리스크를 다루는 데 사용된 우수 관행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충분하 며, 정확한 정보를 얻을 권리 - 근로자의 근로와 관련된 보건 및 안전의 모든 측면을 자유롭게 문의하고 상담할 권리 - 근로자의 삶이나 건강 또는 타인의 삶과 건강에 위급 또는 심각한 위험을 줄 것으로 타당하게 여겨 지는 근로를 거절할 권리 - 근로자 조직, 사용자 조직 및 전문지식을 보유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외부 자문을 구할 권리 - 관련 당국에 보건과 안전 사건을 보고할 권리 - 사건 및 사고 조사를 포함하여,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의사결정 및 활동에 참여할 권리 - 위의 모든 사항을 실행할 때 보복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p>쟁점 5: 작업장에서의 인적 개발과 훈련</p>	<p>조직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 경력의 모든 단계에 있는 전체 근로자에게 동등하고 비차별적인 기초 위에서, 기능개발, 훈련, 견습직 및 경력발전의 기회 접근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 필요한 경우, 정리해고 된 근로자가 새로운 고용을 찾는 데 대한 지원, 훈련 및 상담에 접근하는 것을 돕도록 보장하는 것이 좋다. - 보건 및 안녕을 증진하는 노사 공동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
<p>[핵심주제 4] 환경</p>	
<p>쟁점 1: 오염 방지</p>	<p>조직의 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조직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환경에 대한 조직의 의사결정과 활동의 측면 및 영향을 식별하는 것이 좋다. - 조직의 활동과 관련된 오염 및 폐기물의 발생원을 식별하는 것이 좋다. - 조직의 중대 오염 발생원, 오염 감소, 물 소비, 폐기물 발생 및 에너지 사용에 대해 측정, 기록 및 보 고를 하는 것이 좋다. - 폐기물 관리체계를 활용하여, 오염 및 폐기물 예방과 불가피한 오염 및 폐기물의 적절한 관리 보장 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를 실행하는 것이 좋다. -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오염 배출과 폐기물, 관련된 보건 리스크 및 실질적이고 제안된 완화조치에 관 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것이 좋다. - 특히 보다 친환경적인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신속한 채택의 촉진을 통해, 조직의 영향력 통제 안 에 있는 직접적·간접적 오염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최소화시키는 조치를 실행하는 것이 좋다. - 우발적 방출뿐 아니라 정상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물질의 알려진 인간 보건 및 환경 리스크를 포함 하여, 관련되고 중요한 독성 및 유해물질이 사용되고 방출된 양 및 종류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좋다.

<p>쟁점 1: 오염 방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사항을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그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 국내법에서 정의한 금지 화학물질 및 국제협약에 등록된 바람직하지 않은 화학물질 - 가능한 경우, 합리적이고 입증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 과학기구 또는 다른 이해관계자가 우려된다고 식별한 화학물질. 조직은 또한 조직의 영향권 내의 조직이 그런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예방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좋다. 피해야 할 화학물질은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오존 파괴 물질,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POPs), 로테르담 협약에서 다룬 화학물질, (세계보건기구가 정의한) 유해화학물질, 살충제, 발암성 또는 (담배제품에서 나온 연기 노출 포함) 돌연변이 유발성이 있다고 규정된 화학물질, 생식에 영향을 끼치며, 내분비선을 방해 또는 잔류성이 있고, 생체에 축적되며 독성이 있고(PBTs), 고잔류성, 고생체축적성이 있는(vPvBs) 화학물질 - 현장 또는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사고 및 사건을 포괄하며, 근로자, 파트너, 당국, 지역사회 및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환경사고 예방 및 대비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비상사태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다른 사안보다도 공공 교육 및 정보뿐만 아니라 위험 식별 및 리스크 평가, 통보절차 및 리콜절차, 그리고 의사소통 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
<p>쟁점 2: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p>	<p>조직의 모든 활동과 관련해서 조직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물 및 기타 사용된 자원의 출처를 식별하는 것이 좋다. - 에너지, 물 및 기타 자원의 중대한 사용에 대해 측정, 기록 및 보고를 하는 것이 좋다. - 우수 관행 지표 및 다른 벤치마크를 고려하여, 조직의 에너지, 물 및 기타 자원의 사용을 줄이는 자원 효율성 조치를 실행하는 것이 좋다. - 가능한 경우, 재생 불가능 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재생가능한 자원 및 환경에 대한 영향이 적은 자원으로 보완 또는 교체하는 것이 좋다. - 가능한 한 재활용 재료를 이용하고 물을 재사용하는 것이 좋다. - 유역(watershed) 내 모든 이용자에게 공정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도록 수자원을 관리하는 것이 좋다. - 지속가능 조달을 촉진하는 것이 좋다. - 확대된 생산자 책임의 채택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 지속가능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좋다.
<p>쟁점 3: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p>	<p><기후변화 완화></p> <p>조직의 활동과 관련된 기후변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조직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적·간접적으로 누적된 온실가스 배출의 출처를 식별하고, 조직의 책임 경계(범위)를 정의하는 것이 좋다. -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GHGs 배출을 다루는 이니셔티브 및 도구의 보기에 대해서는 부속서 A참조)에 정의된 방법을 되도록 활용해서 조직의 중대한 온실가스 배출을 측정, 기록 및 보고하는 것이 좋다. - 조직의 통제 내에서 일어나는 직접적·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최소화시키는 조치를 실행하고, 조직의 영향권 내에서 유사한 행동을 격려하는 것이 좋다. - 조직 내에서의 주(significant) 연료 사용의 양 및 유형을 검토하고, 효율성 및 효과성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저배출 기술 및 재생가능 에너지를 고려할 때에도, 온실가스 배출의 순감소를 보장하기 위해 전과정 접근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난방, 환기 및 공기조절기기를 포함하지만 이것에만 제한되지 않는 프로세스 또는 장비로부터의 온실가스 (특히 또한 오존층 파괴도 초래하는 가스) 배출을 예방 또는 감소하는 것이 좋다. - 에너지 효율 상품 구매, 에너지 효율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포함해서, 조직 내의 가능한 모든 곳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현하는 것이 좋다.

<p>쟁점 3: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기를 들면, 탄소 포집 및 저장 또는 탄소 격리를 투명한 방법으로 운영하는 신뢰할 만한 배출감소 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해, 잔여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할 수 있는 조치를 실행함으로써 탄소중립을 목표로 할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p>〈기후변화 적응〉</p> <p>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조직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크를 식별하고, 기후변화 적응을 조직의 의사결정 안에 통합하기 위해, 미래의 글로벌 및 지역의 기후변화 예측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 기후변화와 관련된 피해를 회피 또는 최소화하는 기회를 식별하고, 가능한 경우 변화하는 조건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상자 10 참조). - 기존 또는 미래에 예상되는 영향에 대응하는 조치를 실행하고, 조직 영향권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적응 역량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좋다.
<p>쟁점 4: 환경보호, 생물다양성 및 자연서식지 복원</p>	<p>조직의 모든 활동과 관련하여 조직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이 영향을 제거 또는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 실행가능하고 적절한 경우, 조직의 환경영향에 대한 비용을 내부에서 처리하기 위한 시장 메커니즘에 참여하며, 생태계 서비스를 보호하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좋다. - 자연생태계 손실을 피하는 데 최우선순위를 두며, 두 번째는 생태계 복구에 우선순위를 두며, 마지막으로, 앞의 두 가지 활동이 불가능 또는 완전히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시간 경과에 따라 생태계 서비스에서 순이익을 가져다 줄 활동을 통해 손실을 보상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좋다. - 사회적으로 공평한 방식으로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는 토지, 물 및 생태계 관리를 위한 통합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좋다. - 고유종, 멸종 위기에 직면 또는 멸종 위기에 처한 종, 혹은 부정적 영향을 입을 수 있는 서식지를 보존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 농촌 및 도시 개발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포함하여, 조직의 토지 이용에 대한 의사결정으로 야기될 수 있는 가능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서 기획, 설계 및 운영 관행을 실행하는 것이 좋다. - 자연서식지, 습지, 산림, 야생 생물 통로, 보호 구역 및 농지의 보호를 건물 및 건축 작업 개발에 포함하는 것이 좋다. - 보기를 들면, 선도적인 표준 및 인증제도에서 정의된 것처럼, 동물 복지와 관련된 지속가능한 농업, 어업 및 임업 관행을 채택하는 것이 좋다. - 좀 더 지속가능한 기술 및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공급자의 제품 이용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이 좋다. - 야생동물 및 그 서식지가 우리 자연 생태계의 일부라는 것을 고려하고 따라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보호하고 야생동물의 복지를 감안하는 것이 좋다. - 생존을 위협, 국제적·지역적 또는 국지적인 종의 멸종, 외래종의 살포 또는 증식을 허용하는 접근방식을 피하는 것이 좋다.
<p>[핵심주제 5] 공정 운영관행</p>	
<p>쟁점 1: 반부패</p>	<p>부패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직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 리스크를 식별하고, 부패 및 부당취득에 대처하는 정책 및 관행을 실행하고 유지하는 것이 좋다. - 조직의 고위층(leadership)이 반부패 보기를 설정하고, 반부패 정책의 실행을 위한 의지표명, 격려 및 감독을 제공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좋다. - 뇌물수수 및 부패를 근절하려는 조직의 피고용인 및 대표자의 노력을 지원하고 훈련하며, 진척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 및 부패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조직의 피고용인, 대표자, 계약자 및 공급자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좋다. - 조직의 피고용인 및 대표자에 대한 보수가 적절하고, 정당한 서비스에만 지급됨을 보장하는 것이 좋다. - 부패에 맞서기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을 수립하고 유지하는 것이 좋다. - 보복의 두려움이 없이 보고 및 후속활동이 가능한 메커니즘을 채택함으로써 조직의 피고용인, 파트너, 대표자 및 공급자가 조직의 정책 위반 및 비윤리적이고 불공정한 대우를 보고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좋다. - 형사법 위반을 해당 법 집행 당국에 고발하는 것이 좋다. - 조직이 운영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조직에 유사한 반부패 관행을 채택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이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쟁점 2: 책임 있는 정치 참여	<p>조직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있는 정치적 참여와 기부 및 이해관계 상충 처리방법에 대해 조직의 피고용인 및 대표자를 훈련하고, 이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좋다. - 로비, 정치적 기부 및 정치적 참여와 관련된 조직의 정책 및 활동에 있어서 투명한 것이 좋다. - 조직을 대신하여 변호하기 위해 유지하고 있는 사람의 활동을 관리하는 정책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좋다. - 특정 명분을 지지하여 정치가 또는 정책의사결정자를 통제하려는 시도 또는 이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정치적 기부를 피하는 것이 좋다. - 허위정보, 허위표시, 위협 또는 강요를 포함하는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좋다.
쟁점 3: 공정 경쟁	<p>공정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조직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법 및 규정을 지키는 방식으로 조직 활동을 수행하며, 관계 당국에 협력하는 것이 좋다. - 반경쟁적 행위에 관여 또는 연루/공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 및 다른 보호수단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 - 경쟁 법률 준수 및 공정경쟁의 중요성에 대한 피고용인의 인식을 촉진하는 것이 좋다. - 경쟁을 장려하는 공공정책뿐만 아니라 반독점 및 반덤핑 관행을 지지하는 것이 좋다. - 조직이 운영되는 사회적 맥락을 염두에 두고, 불공정한 경쟁우위를 얻기 위해 빈곤 같은 사회적 조건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쟁점 4: 가치사슬 내에서의 사회적책임 촉진	<p>가치사슬에서 사회적책임을 촉진하기 위해 조직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책임 목표와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의 구매, 유통, 계약 정책 및 관행에 윤리적 기준, 사회적 기준, 환경적 기준 및 양성평등 기준과 보건 및 안전을 통합하는 것이 좋다. - 정책을 수행할 때 반경쟁적 행위에 빠지지 않으면서, 다른 조직이 이와 유사한 정책을 채택할 것을 장려하는 것이 좋다. - 사회적책임에 대한 조직의 의지표명이 타협하는 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조직과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조직에 대해 적절한 실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 중소조직이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사회적책임의 이슈에 대한 인식 제고, 우수관행 및 추가 지원(보기를 들면, 기술, 역량 구축 또는 기타 자원)을 포함한 후원 제공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 사회적책임의 원칙 및 이슈에 대해 관계가 있는 조직의 인식 제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다. - 가능한 경우,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치사슬에서 조직의 역량을 높이는 것을 포함하여, 가치사슬 전반을 통해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관행을 실행하는 비용 및 이득의 공정하고 실무적인 처리를 촉진하는 것이 좋다. 이는 공정한 가격 지불, 적절한 운송시간 및 안정적 계약의 보장과 같은 적절한 구매 관행을 포함한다.

<p>쟁점 5: 재산권 존중</p>	<p>조직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권 및 전통지식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는 정책 및 관행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 재산을 이용 또는 처분할 수 있는 합법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적절한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좋다. - 지배적 지위의 남용, 위조 및 저작권 침해를 포함한 재산권 위반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취득 또는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지불하는 것이 좋다. - 조직의 지적 재산권 및 물적 재산권을 행사하고 보호할 때, 사회의 기대, 인권 및 개인의 기본 니즈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	------------------------------------------------------------------------------------------------------------------------------------------------------------------------------------------------------------------------------------------------------------------------------------------------------------------------------------------------------------------------------------------

[핵심주제 6] 소비자 이슈

<p>쟁점 1: 공정마케팅, 사실적이고 치우치지않은 정보와 공정계약관행</p>	<p>소비자와 의사소통을 할 때 조직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정보 누락을 포함하여, 상대를 속이고, 오도(misleading), 기만 또는 불공정, 불명확 또는 모호한 어떤 관행에도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소비자가 정보에 기반하여 선택했다는 근거로서 쉬운 접근과 비교를 허용하는 투명한 방식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 좋다. - 광고 및 마케팅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식별하는 것이 좋다. - 제품 및 서비스의 (사용에 필요한 부속품뿐만 아니라) 가격 총액, 세금, 조건, 상황 및 운송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에게 신용 거래를 제공할 경우, 관련된 모든 비용, 지불금액, 할부 개월 및 불입기한을 포함한 평균이자율(APR)뿐만 아니라 실질 연이율에 대한 세부 정보까지 제공하는 것이 좋다. - 요구하는 대로 근본적인 사실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클레임 또는 주장을 실증하는 것이 좋다. - 보기를 들면, 성, 종교, 인종, 장애 또는 개인적 관계(성 지향성을 뜻함)와 관련해 고정관념을 고착하는 글, 음향 또는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아동을 포함해서 취약집단의 최대 이해관계에 맞는 광고 및 마케팅을 주로 고려하고, 이해관계에 해가 되는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 - 판매 지역의 공식언어 또는 일상언어와 비교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관한 해당 규정에 따르는 번역하고, 정확하고, 이해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 이상적으로는 전체 수명주기를 고려하면서, 금융 및 투자 제품을 포함한 제품 및 서비스의 모든 중요한 측면 - 표준화된 시험 절차를 이용하여 결정되고 가능하다면 평균성능 또는 우수 관행과 비교한 제품 및 서비스의 주요 품질 측면. 이런 정보의 제공은 소비자를 지원하는 적절하고 실용적인 상황에 한정하는 것이 좋다. - 제품에 포함되어 있거나 제품의 수명주기 동안 유출될 수 있는 잠재적으로 유해한 사용, 유해한 원자재 및 유해한 화학물질 같은 제품 및 서비스의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측면 - 제품 및 서비스의 접근성에 대한 정보 - 인터넷, 전자상거래 또는 우편 주문을 포함하여 국내 또는 해외 원거리 판매를 할 때, 조직의 위치, 우편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다음과 같은 계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명확하고, 읽기 쉽고, 이해가능한 언어로 작성된 계약 - 책임의 불공정한 배제, 가격 및 상황의 일방적인 변경 권리, 지급불능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 또는 부당하게 긴 계약 기간 같은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포함하지 않으며, 비합리적인 신용등급을 포함한 약탈적 대출 관행을 포함하지 않는 계약 - 가격, 특성, 조건, 비용, 계약기간 및 철회기간에 대해 명료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계약
-----------------------------------------------------------------	-------------------------------------------------------------------------------------------------------------------------------------------------------------------------------------------------------------------------------------------------------------------------------------------------------------------------------------------------------------------------------------------------------------------------------------------------------------------------------------------------------------------------------------------------------------------------------------------------------------------------------------------------------------------------------------------------------------------------------------------------------------------------------------------------------------------------------------------------------------------------------------------------------------------------------------------------------------------------------------------------------------------------------------------------------------------------------------------------------------------------------------------------------------------------------------------------------------------------------------------------------------------------------------------------------------------------------------------------------------------------------------------------------------------------------------------------------------------------------------------------------------------------------------------------------------------------------------------------

<p>쟁점 2: 소비자의 보건과 안전 보호</p>	<p>소비자의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은 아래와 같은 활동을 취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인지 또는 평가할 역량이 없는 취약집단(어린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 조직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적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이용 조건에서, 이용자 및 다른 사람, 이들의 재산 및 환경에 안전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 모든 보건 및 안전 측면을 다루기 위해, 보건 및 안전 법, 규정, 표준 및 다른 시방서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이 좋다. 최소한의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사건의 발생, 사건의 빈도 또는 심각성을 줄일 수 있는 제품 또는 제품 설계의 이용가능성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만일 더 높은 수준의 요구사항으로 더 나은 보호를 한다는 증거가 있다면, 조직은 최소한의 안전 요구사항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 - 제품이 시장에 나온 후 예상하지 못한 유해성이 있고, 심각한 결함이 있고 혹은 오도되고 또는 잘못된 정보를 포함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중단 또는 아직 유통사슬에 있는 모든 제품을 철회하는 것이 좋다. 조직은 제품을 구입 또는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에게 연락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 및 언론을 이용하여 제품을 리콜하며, 소비자가 당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좋다. 조직의 가치사슬에서의 추적 조치가 적절하고 유용할 수도 있다. - 다음을 통해 제품 설계에서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 예상 이용자 그룹, 의도된 용도, 제품 또는 서비스 사용의 모든 단계 및 조건에서 일어나는 유해는 물론 합리적으로 예상가능한 프로세스, 제품 및 서비스의 오용을 식별하고, 어떤 경우에는 취약집단을 위해 특별히 맞춤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임산부를 포함한 식별된 이용자 또는 접촉그룹에 대해 파악된 유해로부터 발생하는 각 리스크를 추정하고 평가하는 것 - 우선순위 순서에 따라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것 : 근본적인 안전설계, 이용자 보호 장치 및 정보 - 다양한 소비자 니즈를 고려하고, 소비자의 다른 또는 제한된 역량을 존중함으로써, 특히 정보 프로세스에 소요되는 시간이란 점에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정보 설계를 보장하는 것이 좋다. - 제품 개발의 경우, 발암성, 돌연변이 유발성, 생식에 대한 독성, 잔류성 및 생체 누적성 화학물질을 포함하지만 여기에만 한정되지 않는 해로운 화학물질의 이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만약 그런 화학물질을 포함한 제품을 판매할 때는,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좋다. - 해당되는 경우, 신(新)소재, 신기술 또는 신제조법을 도입하기 전에, 제품 및 서비스의 인간 보건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문서화한다. - 글자 정보 외에, 가능한 경우, 특히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호를 이용해서 소비자에게 중대한 안전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좋다. - 소비자에게 제품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의도된 용도 또는 정상적으로 예상가능한 사용 및 관련된 리스크를 경고하는 것이 좋다. - 소비자가 관리하는 동안 제품의 부적절한 취급 또는 보관함으로써 제품이 불안전하게 되는 것을 예방하는 조치를 채택하는 것이 좋다.
<p>쟁점 3: 지속가능 소비</p>	<p>지속가능소비에 기여하기 위해, 조직은 적절하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및 서비스의 선택이 소비자 안녕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소비자가 이해하도록 효과적인 교육을 촉진하는 것이 좋다. 소비행태를 바꾸는 방법 및 필요한 변화를 하도록 하는 방법에 관한 실용적인 자문을 할 수 있다. - 아래 방법을 통해서 전체 수명주기를 고려하여 사회적 및 환경적으로 유익한 제품 및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것이 좋다. - 가능하면 제품 및 서비스가 보건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 또는 최소화하고, 덜 해로우며 더 효율적인 대안이 가능할 때에는, 사회 및 환경에 역효과가 적은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p>쟁점 3: 지속가능 소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쉽게 사용되고, 재사용되고, 수리되고,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제품 및 포장에 설계하고, 가능한 경우 재활용 및 폐기 서비스를 제공 또는 제안하는 것이 좋다. -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급자를 선호하는 것이 좋다. - 적절한 가격에 수명이 더 긴 고품질의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 조직의 제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하여, 과학적으로 믿을 수 있고, 일관되고, 진실되고, 정확하고, 비교가능하며 검증가능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좋는데, 이 정보는 적절한 경우, 가치사슬을 고려한 자원 효율성의 정보를 포함한다. - 소비자에게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여기에는 보건의 미치는 영향, 원산지, 에너지 효율성(해당되는 경우), 내용물 또는 원자재(해당하는 경우, 유전자 변형 유기체 및 나노 입자의 이용을 포함), 동물 복지 관련 측면(해당하는 경우, 동물실험 사용을 포함), 제품 및 제품 포장의 안전한 이용, 유지보수, 보관 및 폐기가 포함된다. - 긍정적인 환경 측면, 에너지 효율성,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및 환경적으로 이득을 주는 특성을 의사소통하기 위해, 믿을 수 있고, 효과적이며, 독립적으로 검증된 라벨링 제도, 에코 라벨링 혹은 심사 활동과 같은 다른 검증 제도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p>쟁점 4: 소비자 서비스, 지원 및 불만과 분쟁 해결</p>	<p>조직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격판매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를 포함해서, 모든 소비자에게 규정된 기한 내에 제품을 반품 또는 다른 적절한 복구방안을 받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불만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 소비자 불만을 검토하고 이에 대응해서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좋다. - 적절한 경우, 법률이 보장한 기간을 초과하며 제품 기대수명에 적합한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 분쟁 해결 및 구제 메커니즘은 물론, 판매 후 서비스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리는 것이 좋다. - 적절하고 효율적인 자원 및 자문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 합리적인 가격 및 접근가능한 위치에서 유지보수 및 수리를 제공하고, 제품의 예비용 부품에 대한 예상되는 이용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쉽게 검색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 국가 또는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하고, 소비자에게 무료 또는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시키며, 소비자의 법적 청구권을 추구할 권리를 포기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대안적 분쟁 해결방안(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갈등 해결 및 구제 절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p>쟁점 5: 소비자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p>	<p>개인 데이터 수집 및 처리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조직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데이터의 수집은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수적이거나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고 자발적인 동의를 받아 얻은 정보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 - 마케팅 목적으로 데이터의 원치 않는 사용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것을 조건으로 서비스의 이용 또는 특별한 제안을 삼가하는 것이 좋다. - 합법적이고 공정한 수단으로만 데이터를 얻는 것이 좋다. - 데이터 수집 전 또는 수집 시, 개인 데이터의 수집 목적을 구체화하는 것이 좋다. -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 또는 법률이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케팅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된 목적 이외로 개인 데이터를 공개, 타인이 이용가능하게 하거나 기타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법률이 규정한 바에 따라, 소비자가 자신과 관련한 데이터를 조직이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데이터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좋다. 만약 그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진다면, 그 데이터는 적절하게 삭제, 개정, 완성 또는 수정하는 것이 좋다. - 적합한 보안 보호수단을 통해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이 좋다. - 개인 데이터와 관련한 개발, 관행 및 정책은 공개되고 개인 데이터의 존재 유무, 성격 및 주된 용도를 설정하는 가능한 쉬운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 데이터 보호를 책임질 사람(종종 데이터 관리자라고 함)의 신분 및 일상 소재지를 공개하고, 위에 언급된 조치 및 해당 법률을 준수할 책임있는 사람을 보유하는 것이 좋다.

<p>쟁점 6: 필수서비스에 대한 접근</p>	<p>필수 서비스를 공급하는 조직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또는 소비자 그룹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합리적 시간을 가질 기회를 주지 않고 필수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조직은 납부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소비자를 제재하는 서비스의 일괄적인 중단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가격 및 수수료를 정할 때, 상황이 허용되는 경우, 빈곤한 사람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요금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 가격 및 수수료 책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 - 공급 범위를 늘리고, 모든 소비자 그룹에게 차별 없이 같은 품질 및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 공급의 단축 또는 중단은 공평한 방식으로 관리하며, 소비자 그룹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피하는 것이 좋다. - 서비스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조직의 시스템을 유지보수하고 최신화하는 것이 좋다.
<p>[핵심주제 7]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p>	
<p>쟁점 1: 지역사회 참여</p>	<p>조직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투자 및 지역사회 발전 활동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대표적인 지역사회 그룹과 협의하는 것이 좋다. 취약집단, 차별받는 그룹, 주변으로 밀려난 그룹, 대표성이 없는 그룹, 대표성이 적은 그룹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며, 그들의 선택이 확대되고 권리가 존중되는 것을 돕는 방식으로 그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좋다. -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발전의 협정 및 조건에 대해, 토착민을 포함한 지역사회와 협의하고 수용하는 것이 좋다. 협의는 발전에 앞서 하는 것이 좋으며, 완전하고 정확하며 접근가능한 정보에 근거하는 것이 좋다. - 가능하고 적절하다면, 공익 및 지역사회 발전 목적에 기여하는 목표를 가진 지역 연합조직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 뇌물수수 또는 부적절한 영향력 없이, 지방정부 공무원 및 정치 대표자와 투명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 사람들이 지역사회 서비스에 발전이 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좋다. - 정책 형성과 발전 프로그램의 수립, 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에 기여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할 때, 조직은 다른 사람이 그들의 이해관계를 표현하고 방어하는 권리를 존중하고 그들의 견해를 적절하게 고려하는 것이 좋다.
<p>쟁점 2: 교육과 문화</p>	<p>조직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수준의 교육을 촉진하고 지원하며, 교육의 질 및 접근성을 높이고, 토착 지식(local knowledge)을 촉진하고, 문맹 퇴치를 돕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 특히 취약집단 또는 차별받는 그룹의 학습 기회를 촉진하는 것이 좋다. - 아동이 정규 교육에 등록하도록 장려하고, 아동교육의 장벽(아동 노동과 같은)을 제거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좋다. - 해당되는 경우 문화 활동을 촉진하고, 인권 존중 원칙에 부합되도록 지역 문화 및 문화적 전통을 인식하고 가치있게 여기는 것이 좋다. 역사적으로 불리한 그룹에게 자율권을 주는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조치는 차별 퇴치 수단으로써 특히 중요하다. - 인권 교육 촉진 및 인식 제고 촉진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 특히 조직 운영이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보호하도록 돕는 것이 좋다. - 적절한 경우, 토착 사회의 전통지식 및 기술의 이용을 촉진하는 것이 좋다.

<p>쟁점 3: 고용창출과 기능 개발</p>	<p>조직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의 투자 의사결정이 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경제적으로 실행가능하다면,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빈곤을 완화하는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 기술 선택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적으로 실행가능하다면, 고용 기회를 극대화하는 기술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 아웃소싱 의사결정을 하는 조직 내부 및 그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는 외부 조직 양쪽 모두는 고용창출에 대한 아웃소싱 의사결정의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 임시 근로 방식을 이용하기보다는 직접 고용 창출 이점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 견습직 프로그램, 특정의 불리한 그룹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 평생학습 프로그램, 기능 인정 및 인증 제도를 포함한 지역 및 국가 기능개발 프로그램 참여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 지역사회 내에 기능 개발 프로그램이 부적절한 경우, 가능하다면 지역사회 내 다른 조직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기능 개발 프로그램 개발 또는 개선을 돕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 고용 및 역량구축에 대해 취약집단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 - 고용 창출에 필요한 프레임워크 조건의 촉진을 위한 지원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p>쟁점 4: 기술개발과 접근성</p>	<p>조직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의 사회 및 환경 이슈 해결을 도울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기여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 쉽게 복제할 수 있고 빈곤 및 기아 퇴치에 매우 긍정적 영향을 가진 저비용의 기술 개발에 기여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 경제적으로 실행가능하다면, 해당 지식 및 기술에 대한 지역사회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잠재력 있는 향토 지식 및 전통 지식과 기술의 개발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 지역사회의 파트너와 과학 및 기술 개발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 또는 연구 실험실 같은 조직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을 고려하고, 이런 일에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것이 좋다. - 경제적으로 실행가능하다면, 기술 이전 및 확산이 허용되는 관행을 채택하는 것이 좋다. 해당되는 경우, 조직은 지역 발전에 공헌하도록 라이선스 또는 기술 이전에 관한 합리적인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기술을 관리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역량을 고려하고 제고하는 것이 좋다.
<p>쟁점 5: 부과 소득 창출</p>	<p>조직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기초 자원에 대한 영향을 포함하여, 지역사회로의 전입 또는 전출의 경제적 및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 지역사회의 기존 경제 활동의 다양성을 활발히 하는 적절한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 제품 및 서비스의 지역 공급자를 선호하며, 가능하다면 지역 공급자 발전에 기여할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 지역사회 내 불리한 그룹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가치사슬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 공급자의 능력 및 기회를 강화하는 이니셔티브의 실행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 조직이 적절한 법 프레임워크 내에서 운영하도록 돕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 발전 수준이 낮기 때문에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을 겪는 조직과의 경제활동은 아래의 경우에만 참여하는 것이 좋다. - 그 목적이 빈곤을 다루는 것일 때 - 이런 조직의 활동이 인권을 존중하며, 이런 조직이 적절한 법 프레임워크 안에서 자신의 활동을 하려고 일관되게 노력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가 있을 때

<p>쟁점 5: 부와 소득 창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성 향상, 기업가정신 고취에 있어, 지역사회 구성원, 특히 여성 및 창업하고 협동조합을 설립하는데 사회적으로 불리하고 취약한 그룹을 돕는 견고한 프로그램 및 파트너십에 기여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보기를 들면, 그런 프로그램은 공급자, 관리 및 기술 지원, 금융에 대한 접근 및 합작사업 촉진에 필요한 사업 기획, 마케팅 및 품질표준의 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 - 가족 잘 돌보기를 포함해서 이용가능한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장려하는 것이 좋다. - 보기를 들면, 기술시방을 충족하는 역량구축 및 이용가능한 조달 기회에 대한 정보 제공을 포함하여, 지역사회 조직에 보다 쉽게 접근가능한 조달 기회를 만드는 적절한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 지역사회 복지에 이득이 되는 지방시장, 지역시장 및 도시시장과의 연결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조직 및 개인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 지역사회에 기반한 기업가 단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 조직의 세금 책임을 이행하고, 세금부과를 올바르게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당국에 제공하는 것이 좋다. - 피고용인을 위한 퇴직연금 및 노령연금에 대한 기여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p>쟁점 6: 보건</p>	<p>조직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이 제공하는 생산 프로세스, 제품 또는 서비스가 보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 - 보기를 들면, 약품 및 백신에 대한 이용접근성에 기여하고, 운동 및 좋은 영양, 질병의 조기검진, 피임법에 대한 인식 제고, 건강하지 않은 제품 및 물질의 소비 억제를 포함한 건강한 생활방식을 권장함으로써, 좋은 보건의 촉진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어린이 영양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 - HIV/AIDS, 암, 심장질환, 말라리아, 결핵 및 비만 같은 건강 위협요소 및 주요 질병과 이의 예방에 대한 인식 제고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 질병 예방의 수단으로서 필수 의료서비스, 깨끗한 물 및 적절한 위생에 대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보편적인 접근의 지원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p>쟁점 7: 사회적투자</p>	<p>조직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투자 프로젝트를 기획함에 있어 지역사회 발전 촉진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모든 활동은, 보기를 들면, 지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조달 또는 아웃소싱을 늘림으로써, 시민을 위해 기회를 넓히는 것이 좋다. - 조직의 자선 활동, 계속적 참석 또는 지원에 대해 지역사회 의존을 고착화시키는 활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 기존의 지역사회 관련 이니셔티브를 평가해서 지역사회 및 조직 내의 사람에게 보고하고, 개선이 이루어질만한 곳을 식별하는 것이 좋다. -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하고, 상호보완적인 자원, 지식 및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 정부, 기업 또는 NGO를 포함한 다른 조직과 파트너가 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 지역의 증가된 역량, 자원 및 기회에 대한 기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취약 또는 차별받는 집단 및 저소득층을 위한 식량 및 기타 필수제품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기여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4. ISO 26000의 지방정부 적용

- ISO 26000 주요 내용의 대부분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내용을 그대로 지방정부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ISO 26000의 7대 핵심주제와 37개 이슈를 지방정부에 맞도록 재해석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소비자’의 경우 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기업이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이나 집단으로 쉽게 식별 가능하지만,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수요자들을 ‘소비자’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음. 37개 이슈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이러한 한계가 무수히 나타남. 따라서 ISO 26000을 지방정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ISO 26000을 ‘재해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ISO 26000의 7대 핵심주제와 37개 이슈를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분야에 적용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세부적인 요소들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표 2-3] ISO 26000의 공공부문 적용을 위한 재해석

핵심 주제와 쟁점	공공부문 적용
[핵심주제 1] 조직 거버넌스	
핵심주제 1: 조직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책임 관련 조례제정 - 기관장의 주요 정책방향 또는 주요공약에 사회적 책임 포함 - 예산의 효율적 편성 및 집행 - 효율적 세무행정 - 사회적 책임 달성 성과 인사 및 예산 반영 - 관리직 여성비율 제고 - 내부구성원 및 주민들과의 의사소통 채널 구축 및 소통활동 강화 -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및 활용 -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성, 참여 보장 및 공개 - 조직구조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조정(공개적 과정을 통한 조정)
[핵심주제 2] 인권	
쟁점 1: 실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인 인권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규정하는 인권조례의 제정 - ‘인권 영향평가’ 시행 - 인권정책을 통합적으로 담당하는 독립된 조직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인권정책을 평가하는 업무 2)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조정 업무
쟁점 2: 인권 위험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에 처한 인권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독립적인 인권영향평가 실시 - 정책들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마련

쟁점 3: 공모회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민접촉 담당직원(간접 고용 직원 포함)의 인권침해 가능성 최소화 노력. 특히 보안을 담당하는 인력(교육과 훈련 필요) - 보안직원의 인권침해 경우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 시행 -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 시 단체의 인권관리 노력, 또는 인권 침해 여부를 반영 - 계약 체결 시 해당 단체(기업)의 인권 침해 여부 반영 - 조달행정 과정에서 조달품목의 생산조건 공개 - 인권선언 - 반사회적(반인권적 또는 인권 침해) 활동을 수행한 단체와의 관계 단절(예산지원 등 각종 지원 중단)을 분명히 함
쟁점 4: 고충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리적이고 투명한 민원처리 방식 구축 - 직원들의 고충처리 제도의 독립성, 투명성, 공정성
쟁점 5: 차별과 취약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금지 조례' 제정 등으로 차별금지의 법적, 제도적 장치 구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정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주민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 2) 직원들을 인사 등의 면에서 차별 금지 - 차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독립된 조사과정을 확립하고, 조사결과를 구체적인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여성, 장애인, 아동, 다문화 가정(이주자), 소수인종, 노인, 난민 등 소수집단의 인권 존중 및 차별 금지 정책 수립
쟁점 6: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들의 기본권(언론 및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정보의 습득 및 전달 자유, 재산소유권 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 내부고발자 보호정책 - 직원 징계절차의 민주성 보장 및 징계를 이유로 한 부당한 처벌 금지
쟁점 7: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침해 여부(또는 향유정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이 결과를 정책에 반영 - 지방정부의 정책활동이 이러한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 -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이 차별 없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예를 들면, 생필품 공급량, 가격 등 관리, 공익서비스 요금의 합리적인 결정) - 특히 필수 재화나 서비스가 빈곤층에 적절히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으로 교육 받을 권리 보장
쟁점 8: 근로에서의 근본원칙과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노조의 결성, 활동 편의 제공 및 교섭권 보장 - 인사관리의 공정성(차별 금지)을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 구축 - 인사관리의 공정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정기적 평가 실시 - 장애인, 여성, 청년, 고령근로자 등의 고용기회 확대 및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가능하게 하는 인사관리와 프로그램 마련
[핵심주제 3] 노동관행	
쟁점 1: 고용과 고용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직,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활용하는 것을 제한 -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결정 사전 통지 - 근로자 차별 금지 - 근로자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장 - 용역계약 등을 체결할 때 사용자책임과 양질의 근로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함(용역계약, 조달 업체 선정 기준에 고용관계에 대한 관점을 포함) - 근로형태(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에 따른 차별 금지 - 하청업체나 고용관계 용역업체와 계약 체결 시 근로관계 설정을 포함하고 이것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감시 감독하고 이를 추후 계약에 반영하는 시스템 구축

쟁점 2: 근로조건과 사회적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근로조건이 법 규정 및 국제노동기준 준수 여부 - 공무원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로 노동조건에 대한 구속력 확보 -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마련 - 삶의 균형 유지를 위한 정책 마련 - 적정 임금 수준 확보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 근로시간 준수 및 주휴 및 연차휴가, 출산 휴가 제공 - 보육시설 마련 -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 - 위와 같은 사항이 산하기관, 관내 기업 등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함
쟁점 3: 사회적 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결권, 단체교섭권 보장 - 노조대표의 적법한 활동 보장 및 지원 - 사회적 대화 기구 조성 및 참여
쟁점 4: 근로에서의 보건과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 및 보건 정책 개발 유지 - 직원들의 보건 및 안전 리스크 분석 및 통제 - 안전장비 제공 - 보건 안전 문제에 대한 기록과 조사 - 산업 안전 및 보건관리가 근로자들에 따라(예컨대 여성, 남성, 장애인, 청소년 등) 적합하게 이뤄져야 함 - 임시직, 비정규직, 하청직 등에게도 정규직과 동일한 안전 및 보건정책 적용 - 스트레스 등 심리적 안전 위해요소 제거를 위한 노력 - 안전 및 보건 훈련 시행 - 보건 및 안전 정책 수립 시 근로자의 참여 보장: 정보제공, 문의상담권, 안전에 유해한 근로 거절권, 외부에 자문요구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보고권 등을 보장함
쟁점 5: 작업장에서의 인적 개발과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 퇴직자 교육
[핵심주제 4] 환경	
쟁점 1: 오염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환경오염예방 정책 마련.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소통 노력 - 유해 독성 물질 등 환경오염 정보의 공개 - 환경사고 예방 및 대비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비상사태 대비 계획 마련
쟁점 2: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자원 사용량 측정 및 기록, 보고 체제 수립 - 지역 내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정책 마련 - 지속가능하고 재생가능한 자원 사용 확대 - 재활용을 극대화 정책 - 지속가능한 조달 행정 - 생산자책임 확대 및 지속가능 소비 촉진
쟁점 3: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저감 정책 - 에너지 효율성 증대 정책 및 온실가스 저감을 고려한 에너지정책 수립 - 에너지절약 정책 - 기후변화 예측 및 피해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 - 지역 내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쟁점 4: 환경보호, 생물다양성 및 자연서식지 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 마련 - 자연서식지, 습지, 산림 등 자연생태계 보전 정책, 생태계 관리를 위한 종합 전략 수립 - 멸종위기 종 보호를 위한 정책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철저한 활용 - 동물복지와 관련된 지속가능한 농업, 임업, 어업 -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
[핵심주제 5] 공정 운영관행	
쟁점 1: 반부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방지 정책 수립 - 기관장의 의지 표명 - 부패방지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 부패방지 인식제고 정책 -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 - 부패신고의 익명성 보장 - 외부기관의 부패방지 활동 장려 가능한 제도 도입: 예컨대, 계약 및 보조금 지급 시 부패방지 활동 평가
쟁점 2: 책임있는 정치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가능영역 및 한계 등 교육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쟁점 3: 공정 경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경쟁에 관한 교육 실시 - 반경쟁적 활동을 하는 기업과 기관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 또는 계약대상 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쟁점 4: 가치사슬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 및 계약 기준 내에 윤리적 기준, 사회적 기준, 환경적 기준 및 양성평등 기준과 보건 및 안전을 포함 - 관내 기업과 조직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 시행 여부 실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관내 기업과 조직들이 사회적 책임 시행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제공 -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 구매나 계약 시 사회적 책임 이행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감안함
쟁점 5: 재산권 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들의 재산권 존중 - 재산권 조사 - 재산권에 대한 공정한 보상 - 기관의 재산권 행사 및 보호 시 사회적 가치 고려
[핵심주제 6] 소비자 이슈	
쟁점 1: 공정 마케팅, 사실적이고 치우치지 않은 정보와 공정 계약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 - 행정정보의 투명한 제공: 세부적인 사항 공개, 민원인이 요구하는 정보 제공, 성·종교·인종 등과 관련한 차별적 홍보 금지 - 주민들이 이해가능한 언어로 홍보 - 책임회피성 홍보, 일방적 홍보 등 지양

쟁점 2: 소비자의 보건과 안전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안전대책 수립: 주민안전을 위해하는 요소를 식별하고 요소별로 안전 확보 대책 수립(재난 대비, 교통안전, 범죄로부터 보호 등) - 행정행위 또는 활동이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소비자 안전 및 보건 관련 민원처리 정책 마련(조직 및 예산) -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존재하거나 확인되면 이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공개 - 주민 안전 훈련 및 교육 실시
쟁점 3: 지속가능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 소비 교육 실시 - 기업이나 단체가 지속가능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유도하는 정책 마련 -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이나 기관을 지원, 계약 등에서 우대 - 지속가능한 소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 - 제품이나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결과를 나타내 주는 라벨링제도 등 검증제도 도입으로 지속가능 소비 촉진 - 재화나 서비스의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공개
쟁점 4: 소비자 서비스, 지원 및 불만과 분쟁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활동에 대한 민원해소 방안 마련 - 행정행위로 인한 피해구제 절차와 방법 마련 - 민원해결을 위한 갈등해소 매커니즘 구축 - 소비자불만 해소를 위한 신고, 처리 등의 업무 수행
쟁점 5: 소비자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정보보호 대책 수립 - 공정하고 합법적인 정보수집 - 주민 동의 없는 데이터 활용 금지 - 개인 데이터 내용 확인 및 수정 또는 삭제 청구권 보장 - 주민정보 관리 부서 및 책임자 공개, 전문가 확보
쟁점 6: 필수서비스에 대한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청이 제공하는 필수서비스의 이용권 보장 - 주차료, 쓰레기수거료 등 주민이 부담하는 요금 책정 시 정확한 정보제공 및 투명성 확보 - 부담능력 없는 주민에게는 보조금 지급 또는 무료로 이용가능 하도록 조치 - 필수서비스 제공 시 차별 금지
쟁점 7: 교육과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교육 사업 시행 여부 - 시행 시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확인
[핵심주제 7]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쟁점 1: 지역사회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정부가 지역사회 관련 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고 있는가를 확인함 1) 지역사회 관련 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다양한 그룹의 참여 및 협의 2) 이 과정에서 투명한 관계 유지 3) 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실행, 모니터링 등 전 과정에 걸쳐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를 보장
쟁점 2: 교육과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정부의 주민대상 교육활동(평생교육 프로그램 포함)이 다음과 같은 점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함 1) 지역지식 촉진 2) 취약그룹 학습기회 촉진 3) 문화활동 지원, 문화유산 보호 4) 인권 교육 5) 지역사회의 전통지식 및 기술 활용

쟁점 3: 고용창출과 기능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의 고용 창출 정책 -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 또는 기술 보급 - 지방정부 및 국가의 기능개발 프로그램의 확대 - 이 과정에서 취약집단에 대한 특별한 고려 여부 - 민간의 고용창출 활동 지원 정책
쟁점 4: 기술 개발과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기술개발 사업 또는 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특히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식 과 기술의 개발 강조) - 관내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산학협력 또는 관학협력 유도. 이를 통한 지역 주민의 고용 확대 - 지역 내에 기술이전 및 확산을 위한 정책 마련
쟁점 5: 부와 소득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 계약 및 공사발주에 있어서 지역 기업 우대 정책 -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취약 조직에 대한 지원 정책(관리 및 기술지원, 금융지원, 마케팅 등 지원) - 지역 시장(전통시장) 등 지원 -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상공회의소 등 사업자단체에 대한 지원
쟁점 6: 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활동이 지역주민의 보건에 미치는 영향 파악 - 질병예방, 영양관리 정책 - 지역주민 운동능력 향상 프로그램 - 의료서비스 및 위생 향상 프로그램
쟁점 7: 사회적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 및 아웃 소싱 시 지역내 업소나 기관 우선 고려 - 지역 내 기업, 시민단체 등과 파트너십을 통한 사회적 투자활동 전개 -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투자 강화(취약계층에 필수제품과 서비스 공급)

03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적 책임(ISO 26000) 구현을 위한 지속가능성 보고서

사회적 책임 이행 성과분석

1. 조직 거버넌스
2. 인권
3. 노동
4. 환경
5. 공정운영
6. 소비자
7.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

제3장 사회적 책임 이행 성과분석

1. 조직 거버넌스

- 조직 거버넌스는 조직이 조직의 목표를 추구하는 데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 의사결정을 실행하는 시스템을 의미함
- 조직 거버넌스는 규정된 구조와 프로세스에 기반한 공식적 거버넌스 메커니즘 및 종종 조직을 이끄는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조직의 문화 및 가치에 연계되어 나타나는 비공식적 메커니즘으로 구성될 수 있음. 또한 조직 거버넌스는 조직 내 의사결정의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모든 조직의 핵심 기능임
- 거버넌스 시스템은 조직의 규모 및 유형, 조직이 운영되는 환경, 경제, 정치, 문화 및 사회 맥락에 따라 다양하며, 이러한 시스템은 조직이 목표를 추구하는 데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그룹에 의해 통제됨

■ 조직 거버넌스와 관련한 ISO26000 기대활동

- 제2장에서 제시한 조직 거버넌스의 기대활동에 비추어 남구청 조직의 바람직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다음 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책임에 대한 조직의 의지표명을 반영하는 전략, 목표 및 세부목표를 수립할 것
 - 최고 의사결정자인 남구청장의 의지표명 및 설명책임을 제시할 것
 - 사회적책임 원칙(4. 참조)들이 실행되는 환경 및 문화를 조성하고 육성할 것
 - 사회적책임 성과와 관련된 경제적 및 비경제적 인센티브 시스템을 조성할 것
 - 재무, 자연 및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
 - 대표성이 낮은(under-represented) 그룹(여성, 인종 및 소수민족 그룹 포함)이 조직의 고위직을 차지할 공정한 기회를 촉진할 것
 - 당면한 니즈 및 미래세대의 니즈를 포함하여, 조직 및 조직의 이해관계자간의 니즈를 조화롭게 할 것
 - 의견 일치 및 불일치의 영역을 식별하며 발생가능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하는 조직과 이해

관계자와의 양방향 의사소통 프로세스를 수립할 것

- 전 직급의 피고용인이 조직의 사회적책임 활동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것을 격려할 것
- 조직을 대신해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권한, 책임 및 역량 수준을 균형있게 조정할 것
- 의사결정이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장하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조직의 의사결정 및 활동의 결과에 대한 설명책임을 정하는 의사결정의 실행을 기록할 것
- 조직의 거버넌스 프로세스를 정기적으로 검토 및 평가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프로세스를 조정하고 조직 전반에 걸친 변화에 대해 의사소통할 것

■ 조직 거버넌스 이슈 현황 파악 및 보완점

- 남구청 조직의 기대활동 중 중요한 과제로 판단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현황 파악과 평가 및 보완점 제시를 해보면 다음과 같음

조직 거버넌스 이슈 평가 기준	현행 사업	평가 및 보완점
1. 최고책임자의 의지표명과 전략, 목표 및 세부목표 수립	- 남구청 비전 및 방침, 규정지표 - 2018년 주요 업무계획	대부분의 행정조직은 관련 법률과 규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고 있음
2. 경제적 및 비경제적 인센티브 시스템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2항) - 일과 성과중심의 활력있는 조직 운영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경제적 및 비경제적 인센티브 제도가 적절히 시행되고 있음. 성과의 범위와 관련하여 사회적 책임분야의 성과를 세부적으로 추가 설정할 필요가 있음
3. 재무, 자연, 인적자원의 효율적 사용	- 재무 예산 운영 현황 자료 -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 회계관리의 전문성·책임성 제고 - 체계적인 재무관리로 재정 건전성 강화 - 일과 성과중심의 활력있는 조직 운영 -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문화 확립	조직의 재무, 자연,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노력이 전체 부서에 걸쳐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4. 여성 임직원 승진 기회 촉진	- 남구청 직급별 여성비율 자료	현재(2018.5) 5급이상 여성 비율이 3명으로 전체(37)의 8.1%로 매우 낮은 수준. 향후 여성비율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5. 의사결정을 하는 권한, 책임, 역량 균형과 위원회 활동	- 본청 전결 사항 및 업무분장 - 열린 제안제도 활성화 - 위원회 현황 및 구성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적절히 운영되고 있음. 다양한 위원회 구성은 구민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의 창구가 될 수 있음

■ 최고책임자의 의지표명과 전략, 목표 및 세부목표 수립

- 2018년 10월 현재, 남구청장은 ‘주민이 먼저다, 따뜻한 행복남구’라는 구정 비전아래 6개의 구정지표를 제시하고 있음. 이는 주민을 최우선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을 추구함으로써 35만 구민 모두가 살기 좋고 따뜻한 행복도시 남구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 6개 구정지표는 지역주민의 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제를 살리는 도시> 정책과 <고용이 먼저인 도시> 정책을 중심으로, 환경보호와 안전을 중시하는 <안전이 확보된 도시> 정책,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복지행정 분야로 <복지가 탄탄한 도시> 정책과 남구의 특색을 살린 <문화가 숨쉬는 도시> 정책과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추진하는 <행정이 깨끗한 도시>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2018년 7월 현재, 남구는 이러한 구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292개에 달하는 2018년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사진1〉 전체 직원 조회에서 구정의 방향을 설명하고 있는 김진규 남구청장

■ 경제적 및 비경제적 인센티브 시스템

- 남구는 경제적 및 비경제적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일과 성과중심의 활력있는 조직 운영’ 계획에 따라 이를 실행하고 있음

- 일과 성과중심으로 인사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조직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는 정책의지를 담고 있음. 이를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년1회 수립하고, 정확한 인력 수급 예측으로 결원을 최소화하는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서는 실적에 근거한 근무성적평정에 따라 이를 시행하고 있으며, 연 2회, 근무 실적우수자 실적가산점제를 운영하고 있음
-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직원 사기를 진작하고 있으며, 특별승급제도를 운영하여 특별성적을 낸 공무원을 선정하여 1호봉을 승급하고, 우수, 모범, 업무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포상을 시행하고 있음

■ 재무·예산의 효율적 사용

- 조직 거버넌스는 의사결정과 관련한 주요 결정을 하게 되는데, 재무 및 예산의 운용은 남구의 행정에서 매우 중요함, 남구는 이를 위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음이 확인됨
-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의 효율적 사용은 그 검토 및 평가 절차의 합리성에 의하여 보장되는 측면이 있음
- 남구의 경우, 매년 9월 중·장기적 관점에서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리고, 20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3회이상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실시하고 있음
- 재정분석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관리강화를 위해서는 매년 8월 분석지표(3개 분야 22개 지표)를 통해 평가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재정운용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
-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여 주민제안사업을 연중 접수하고, 전체회의(2회), 분과회의(1회), 워크숍(1회) 등을 통해 소통 행정을 구현하고 있음
- 또한, 남구는 <회계관리의 전문성·책임성 제고>와 <체계적인 재무관리로 재정 건전성 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회계관리의 전문성·책임성 제고>를 위해서는 회계업무 수행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회계담당공무원 등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서의 정확한 작성으로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및 재정운영의 환류 기능을 강화하고 있음
- <체계적인 재무관리로 재정 건전성 강화> 계획을 통해 체계적인 현금 흐름 관리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유휴자금 운용에 따른 수익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음

■ 인적자원의 효율성 강화

- 남구는 인적자원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일과 성과중심의 활력있는 조직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을 통하여 조직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는 정책 의지로 파악됨
- 이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통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통해 정확한 인력 수급 예측으로 결원 최소화하고, 대체인력 बैं크를 운영하여 결원 시 신속 지원으로 업무공백 최소화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또한, 행정 전문성을 강화하여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한 업무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현재 9개 직위를 운영하고 있고, 특정 및 전문 분야 경력자도 경쟁 임용을 통해 임기제공무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업무추진 능력 및 적성과 경력을 고려한 직무중심 보직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2018 주요사업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운영

1. 목표

- 종합적인 기획·조정으로 남구청 구정 발전의 선도적 역할 수행
-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환류를 통한 조직성과 및 책임성 제고
- 성과지표에 따른 분석 및 적절한 보상으로 조직 효율성 제고

2. 사업내용

- 남구 현안 업무의 적극적 조정 및 해결
- 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운용
- 구정 주요업무 자체 평가
- 객관적인 부서별 종합 평가 시행

3. 최근 추진실적

	2017
조직 분석·진단을 통한 합리적인 조직관리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2회), 조직개편(1회)
구정주요업무 선정 및 평가	구정주요업무평가 : 연 2회(중간평가 7월, 최종평가 12월)

4. 성과지표추이

- 현행 성과지표

성 과 지 표	측 정 지 표 (성과측정산식)	연도별 실적 및 목표		지표 비중 (100%)
		2017년 실적	2018년 목표	
계				100
조직 분석·진단을 통한 합리적인 조직관리	기능·인력 재배치 실적 (재배치 인원 / 3명) × 100	3명	3명	30
구정주요업무 선정 및 평가	구정업무 우수이상 평가 달성율 (우수이상 평가과제/전체과제)×100	97%	97%	70

5. 개선방안

- 현안 업무의 경우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와 연계 필요
- 구정 주요 업무 평가 절차에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그램으로 객관성 제고 필요
- 우수 과제 평가시 정량적인 평가와 동시에 정성적인 평가 방법 도입 필요

■ 여성 임직원 승진 기회 촉진 관련

직급별 여성 비율

- 조직 거버넌스에서 여성 및 취약계층들을 대변할 수 있는 임직원들의 수와 비율은 매우 중요함.
- 남구는 2018년 8월 현재, 1급부터 9급까지 총 7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 여성 근로자 숫자는 372.5명으로 비율로 보면 52.2%에 달함.
- 그러나, 5급이상 여성 상위직은 5명으로, 비율로 보면 8.1%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구분		총괄			총괄			총괄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계		731	381.5	52.2	564.5	272.5	48.3	166.5	109	65.5
일반직	소계	713	372.5	52.2	547.5	264.5	48.3	165.5	108	65.3
	1급	0	0	0.0	0	0	0.0	0	0	0.0
	2	0	0	0.0	0	0	0.0	0	0	0.0
	3	1	0	0.0	1	0	0.0	0	0	0.0
	4	5	1	20.0	5	1	20.0	0	0	0.0
	5	39	4	10.3	28	2	7.1	11	2	18.2
	6	165	98	59.4	130	71	54.6	35	27	77.1
	7	259	129	49.8	217	100	46.1	42	29	69.0
	8	151.5	83.5	55.1	123	65	52.8	28.5	18.5	64.9
	9	92.5	57	61.6	43.5	25.5	52.8	49	31.5	64.3

■ 의사결정을 하는 권한, 책임, 역량 균형과 위원회 활동 관련

- 남구의 의사결정과 관련한 권한, 책임 및 역할 전반에 관한 사항은 '본청 전결 사항 및 업무 분장' 규정
에 따라 적절히 운영되고 있음
- 남구와 같은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
하는 것은 정책 수요자인 주민들을 정책의 중심에 둔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임
- 남구의 '열린 제안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한 창의적인 제안으로 구정발전 도모 위해 기획된 것으로 구
정 정책에 대한 주민 관심과 참여 제고로 소통행정 실현하는 대표적 사례로 판단됨
- 구민 제안제도는 주민, 공무원, 대학생 구정 서포터즈 등을 대상으로 행정능률 및 대민 봉사 행정의 향
상 방안에 대하여 제안을 받는 프로그램이며, 예산절감 방안 등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우
편, 팩스 등으로 연중 접수하고, 우수 제안자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있으며, 행복남구 제안왕 프로그
램도 운영하고 있음



〈사진2〉 남구청장과 직원들의 소통: 한마음등산대회

위원회 현황 및 운영 관련

-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정책을 심의하게 하는 기능은 매우 중요함. 남구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여러 분야에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정의 정책을 심의, 의결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회 활동 관련 내용들이 구민들에게 더욱 널리 알려지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사회적 책임과 관련성이 많은 위원회를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음. 2018년 8월 현재 84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이며, 위원으로는 공무원 356명과 민간위원 719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구청의 사회적 책임관련 정책 결정시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구청의 주요의사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표 3-1] 울산 남구청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구 성 인 원			주 요 기 능
	계	공무원	민간인	
정책자문단	25	0	25	정책수립 발굴에 대한 자문, 정책제안 등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49	0	49	예산편성방향 의견제출, 주민사업 제안
규제개혁위원회	12	5	7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 등
공직자윤리위원회	5	2	3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 결과의 처리 등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	8	8	0	자율적내부통제 자체평가 및 개선 등
물가대책위원회	20	6	14	공공요금 등 심의
에너지위원회	13	3	10	온실가스감축 및 에너지절약 추진
공공근로사업추진	12	5	7	공공근로 추진사업 및 선발기준 결정
학교급식심의위원회	10	3	7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9	2	7	대규모점포 등 제출서류 심의 등
노사민정협의회	15	5	10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15	2	13	사회적경제 활성화 자문, 육성 심의 등
인사위원회	17	13	4	인사관련 업무 및 징계심의
후생복지운영위원회	8	8	0	후생복지 운영관련 심의
근무성적평정위원회	6	6	0	근무성적평정 심사 등
근무실적평가위원회	5	5	0	근무실적평가 심사 등
공유재산심의위원회	12	6	6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남구 평생교육발전협의회	12	3	9	남구 평생교육 발전방안 협의
지역치안협의회	14	6	8	주민의 생활안전 향상과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사항 추진
인권보장위원회	12	3	9	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사항 추진
정보공개심의회	7	3	4	공개청구된 정보의 이의신청시 공개여부 결정 심의
민원조정위원회	8	6	2	장기 미해결, 분쟁민원 해소대책 심의, 거부 처분에 대한 재심의, 결정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20	3	17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심의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25	11	14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검토
장애인복지위원회	9	3	6	장애인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제도 개선 등
남구생활보장위원회	9	4	5	법령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에 관한 사항 심의

의료급여심의위원회	5	2	3	의료급여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심의
아동급식위원회	11	4	7	아동급식대상자 선정, 급식방법 등 심의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12	3	9	양성평등기금 심의 등
보육정책위원회	14	2	1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 보육관련 업무 위탁 심의, 기타 보육관련 사항 심의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14	6	8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자문
청소년육성위원회	11	6	5	청소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13	4	9	위기청소년 종합서비스 제공연계
학교폭력대책심사위원회	15	6	9	학교폭력예방 대책수립 및 상호협력지원방안 협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15	6	9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심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10	3	7	아동급식대상자 선정, 급식방법 등 심의
안전관리위원회	22	12	10	안전관리정책 심의, 재난관리업무 협의 등
안전관리자문단	24	0	24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
경관디자인 위원회	20	1	19	경관디자인 심의 및 자문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11	2	9	옥외광고물 심의 및 자문
공유재산심의회	12	5	7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자문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12	2	10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및 결과 심의, 구민 건강증진 시 책결정을 위한 의결 및 자문

■ 사회적 책임 관련 조례

- 남구의 사회적책임 관련 조례 현황은 아래와 같음
- 남구는 인권, 주민참여, 노사민정협의회, 노인복지 등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환경기본조례 등 일부 조례는 조직, 업무분장, 예산 등이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인 진행 사항이 없는 경우도 있어 점검 및 향후 활성화 계획이 필요함

[표 3-2] 남구청 제정 사회적 책임 관련 조례 현황

연번	조례명	담당부서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어르신장애인 복지과
2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자치행정과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어르신장애인 복지과
4	환경기본조례	환경관리과
5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환경관리과
6	구민대상조례	자치행정과
7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자치행정과
8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지원과

9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행정과
1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복지지원과
1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기획예산실
12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제정책과
13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복지지원과
14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어르신장애인 복지과
15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과
16	헌혈권장조례	보건소

2. 인권

- 인권은 모든 인간이 부여받은 기본권임. 인권 분야는 생명권, 자유권, 법 앞에서의 평등 및 표현의 자유 같은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도 있고, 노동권, 식량권, 보건안전권, 교육권, 사회보장권 같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도 있음
- 인권보호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행정 과정에서 중요하게 부각되지 않는 것은 도덕적, 법적 및 지적 규범과 문화적 전통을 통해 다양하게 구현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함
- 인권에 대한 인식 및 존중은 법치, 사회정의 및 공정성 개념의 핵심으로 널리 간주되며, 사법 시스템같은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의 기본 토대로 간주함
- 국가와 정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 및 책임이 있으며, 조직의 영향권 범위를 포함하여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음



〈사진3〉 울산시 교육청과 학생 인권 및 안전 캠페인 협약 체결

■ 이슈 1 : 실사

- 조직 내 사람 및 조직에 긴밀히 연계된 사람에게 의미있는 지침을 주는 조직의 인권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기존 활동 및 제안된 활동이 인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는 수단을 구비할 필요가 있음
- 조직 전반에 걸쳐 인권 정책을 통합하는 수단을 구비할 필요가 있음
- 우선순위 및 접근방식에 있어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시간 경과에 따른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수단을 구비할 필요가 있음
- 조직의 의사결정 및 활동의 부정적 영향을 다루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실사 이슈 현황 파악 및 보완점

남구청 조직의 기대활동 중 중요한 과제로 판단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현황 파악과 평가 및 보완점 제시를 해보면 다음과 같음

연번	조례명	담당부서
1. 인권정책 2. 인권영향 평가 수단 3. 인권정책 통합 수단 4. 성과 모니터링 수단 5. 의사결정 및 부정적 영향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3) - 인권증진기본계획 (2018-2022) 	인권정책을 공공기관의 기본적 책무로 인식하고 기본 계획 시행을 보다 공개적이고 활발히 할 필요 있음. (업무 분장 명시 및 남구청 주요 사업 계획에 포함 필요)

향후 개선 방향

- 실사 분야 관련해서는 인권증진기본계획 시행을 보다 홈페이지등을 통해 공식화할 필요가 있음. 종합적이고 정확한 기초조사를 통한 인권현황 진단은 인권 기본계획의 시행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
- 이를 위해서는 인권도시를 지향하기 위한 남구청의 역량과 주민들의 인권의식 및 문화, 남구의 인권행정체계, 시민사회의 조직 및 활동역량, 인권의 제도화 수준 등 지역의 총체적인 인권지형에 대한 진단이 필요함
- 인권현황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취약 부분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 작업을 수행하고, 주요 사업 계획에서 수록할 필요가 있음
-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각종 국제조약을 통해 마련된 인권의 기본원칙과 대한민국 헌법을 통해 제시되고 있는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가시적이며, 공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슈 2 : 인권 리스크 상황

- 인권리스크상황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조직의 의사결정을 인권 존중이라는 일차적 책임에 기초하도록 함
- 다른 인권 침해를 악화시키고 또는 다른 인권 침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인권리스크상황 이슈 현황 파악 및 보완점

위 남구청 조직의 기대활동 중 중요한 과제로 판단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현황 파악과 평가 및 보완점 제시를 해보면 다음과 같음

인권리스크상황 이슈 평가 기준	현행 사업	평가 및 보완점
1. 인권리스크상황에 대한 특별한 주의 2. 인권존중을 중시한 의사결정 3. 추가적인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3) - 인권증진기본계획 (2018-2022)	인권정책을 공공기관의 기본적 책무로 인식하고 기본 계획 시행을 보다 공개적이고 활발히 할 필요 있음. (업무 분장 명시 및 남구청 주요 사업 계획에 포함 필요)

향후 개선 방향

- 인권리스크상황 인식 및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인권 실사나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인권경영시스템을 본격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인권 분야를 업무 분장에 명시하고, 남구청 주요 사업 계획에도 포함하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본격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이슈 3 : 공모 회피

- 남구의 보안방식이 인권을 존중하고, 법 집행을 위한 국제규범 및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함
- 보안직원(고용, 계약 또는 하청을 준)은 인권 기준 준수를 포함하여 적절하게 훈련받아야 하며, 보안절차 또는 보안직원에 대한 불만은 즉각적이고 독립적으로 다루고 조사해야 함
- 인권을 침해하는 단체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야 함
- 파트너십 맥락 또는 계약 업무의 수행 시, 인권을 침해하는 파트너와 공식 또는 비공식 파트너십 혹은 계약 관계를 맺지 않도록 함
- 조직이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가 생산된 사회적 조건 및 환경적 조건을 스스로 알리도록 해야 함

공모회피 이슈 현황 파악 및 보완점

남구 조직의 기대활동 중 중요한 과제로 판단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현황 파악과 평가 및 보완점 제시를 해 보면 다음과 같음

공모회피 이슈 평가 기준	현행 사업	평가 및 보완점
1. 보안방식에서 인권존중 규범 부합 2. 보안직원 인권기준준수 3. 인권침해 단체에 거래 제한 4. 인권침해 파트너와 계약 제한 5. 구매 상품, 서비스의 사회·환경 조건 공지	- 공모회피 정책이나 규정 등 현재 남구청의 인권정책으로 별도의 체계화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3) - 인권증진기본계획 (2018-2022)은 수립되어 있음	인권정책을 공공기관의 기본적 책무로 인식하고 관련 규정 및 인권 조례 본격 시행을 통해 공모회피 관련 대책을 별도로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향후 개선 방향

- 공모회피를 위한 제도화 및 이행을 위해서는 조직 내 인권 실사나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조직 전체에 걸쳐 인권경영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한 인권 분야를 업무 분장에 명시하고, 남구청 주요 사업 계획에도 포함하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본격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이슈 4 : 고충 처리

- 남구는 임직원 및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이용을 위해, 구제 메커니즘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이 메커니즘은 아래와 같은 성격을 갖도록 구성되어야 함
 - 정당성 : 특정 고충 프로세스 당사자 누구도 그 프로세스의 공정한 관리에 간섭할 수 없음을 보장하는 명백하고 투명하며 충분히 독립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포함해야 함
 - 접근가능성 : 고충 처리(grievance) 메커니즘의 존재가 알려져야 하고, 언어, 문맹, 인식 또는 자원 부족, 거리, 장애 또는 보복의 두려움 같이 접근 장벽이 있을 수 있는 피해 당사자를 위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함
 - 예측가능성 : 명백하고 알려진 절차, 각 단계별 명확한 일정, 고충 처리 메커니즘이 제공할 수 있고 제공할 수 없는 프로세스 및 결과의 유형에 대한 명료성, 그리고 어떤 결과의 실행을 모니터링하는 수단이 있어야 함
 - 공평성 : 피해 당사자는 공정한 고충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정보, 자문 및 전문 지식의 출처

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권리양립성 : 결과 및 처리방안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기준을 따라야 함
- 명료성 및 투명성 : 때로는 비밀 유지가 적절할 수 있지만, 프로세스 및 결과는 공공 감시에 충분히 개방되며 공공 이익에 적절한 무게를 두어야 함
- 대화 및 조정 기반 : 프로세스는 당사자 간의 참여를 통해 고충에 대한 상호 간의 합의된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요함. 판결을 바라는 경우, 당사자는 별개의 독립된 메커니즘을 통해 판결을 구할 권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고충처리 이슈 현황 파악 및 보완점

남구 조직의 기대활동 중 중요한 과제로 판단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현황 파악과 평가 및 보완점 제시를 해 보면 다음과 같음

고충처리 이슈 평가 기준	현행 사업	평가 및 보완점
1. 남구청 임직원 고충처리 메커니즘	- 인사위원회와 함께 고충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 중	인권정책 차원에서 보다 체계화하고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2. 구민 및 이해관계자를 위한 고충처리메커니즘 3. 메커니즘 성격 규명 - 정당성 - 접근가능성 - 예측가능성	- 고충처리제도가 있으나, 고충처리 메커니즘과 성격규명이 종합적인 인권 정책의 관점에서 체계화될 필요가 있음. -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인권증진기본계획 (2018-2022)은 수립되어 있음.	인권정책을 공공기관의 기본적 책무로 인식하고 규정 및 인권 조례 시행을 통해 고충처리 관련 대책을 인권경영 차원에서 좀 더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개선 방향

- 남구의 고충처리 이슈는 조직 내 구성원들의 고충처리와 구민들의 고충처리로 구분됨
- 조직 전체의 인권경영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고충처리 및 민원처리 방식 및 방법론 구축이 필요함
- 고충처리 제도의 독립성, 투명성, 공정성, 접근가능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슈 5 : 차별과 취약그룹

- 남구의 활동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이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취약집단의 구성원 사이에서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를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함

- 여성 및 여자 어린이는 남성 및 남자 어린이와 동등하게 대해야 함
- 남녀 장애인이 사회에서 존엄성, 자율성 및 충분한 참여를 받도록 노력해야 함
- 아동의 의존적 상황을 감안하여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할 때, 아동의 최상 이익을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함
- 토착민은 인권 침해를 포함하는 전체적인 차별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취약집단으로 간주될 수 있고, 특별히 보호해야 함
- 이주자, 이주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함
- 기타 취약집단의 예를 들면, 고령층, 난민, 빈곤층, 문맹, HIV/AIDS 환자, 소수집단 및 종교집단을 포함함

차별과 취약그룹 이슈 현황 파악 및 보완점

남구조직의 기대활동 중 중요한 과제로 판단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현황 파악과 평가 및 보완점 제시를 해 보면 다음과 같음

차별과 취약그룹 이슈 평가 기준	현행 사업	평가 및 보완점
1. 취약계층차별 방지주의	- 취약계층 관련 위원회 활동을 통한 점검:(예)인권보장 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 위원회, 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등	차별방지와 취약그룹 이슈를 검토 하는 구체적인 프로세스 필요
2. 취약집단 자신의 권리인식촉진	- 따뜻한 지원과 긴밀한 협력으로 단체 및 회원 역량강화 - 배우는 즐거움, 보람으로 성장하는 평생학습	차별방지와 취약그룹 이슈를 검토 하는 프로세스 필요
3. 여성보호	- 차별없는 공정사회를 위한 성평등 사회 실현 -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 지원	적절히 수행되고 있음.
4. 장애인보호	-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후 본격 시행 안됨)	적절히 수행되고 있음.
5. 아동보호	안전하고 건강한 아동성장 지원	적절히 수행되고 있음.



〈사진4〉 인권 보장 관련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 개최

개선 방향

- 차별금지와 취약그룹 보호 정책은 인권보호 규정이 아니라도 관련 위원회 활동과 다양한 형태의 지역 사회, 지역복지 사업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음
- 이 분야 대응방안으로 이미 제정되었으나 시행되지 못한 ‘차별금지’ 관련 조례 재정비와 함께 차별금지의 법적, 제도적 장치 점검이 필요함
- 차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독립된 조사과정을 확립하고, 조사결과를 구체적인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보다 구체화된 프로세스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여성, 장애인, 아동, 다문화 가정(이주자), 소수인종, 노인, 난민 등 소수집단의 인권 존중 및 차별 금지 정책 등이 향후 인권경영시스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2018 주요사업

고령화사회 노인복지정책 확대

1. 목표

- 맞춤형 일자리제공으로 노인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제공
- 노인 여가 문화활동 참여기회 확대로 노인 복지 제고

2. 사업내용

-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확대
- 활기찬 노후생활 환경 조성

3. 최근 추진실적

	2017
노인일자리 사업추진	40개 사업 1,693명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확대	경로당 노래교실 (800명), 건강체조교실 (700명)
활기찬 노후생활 환경 조성	봄 문화유적지탐방, 노인의날 기념식 등(5000명)

4. 성과지표추이

- 현행 성과지표

성 과 지 표	측 정 지 표 (성과측정산식)	연도별 실적 및 목표		지표 비중 (100%)
		2017년 실적	2018년 목표	
계				100
노인일자리 사업추진	[참여인원/1,696명(계획인원)]×100	100%	100%	30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확대	[참여인원/1,80 명(계획인원)]× 100	100%	100%	30
활기찬 노후생활 환경 조성	[참여인원/12,60 명(계획인원)]× 100	100%	100%	40

5. 개선방안

- 현행 성과지표 운영과 함께,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내용과 연계 관리 필요
- 고령인구를 다시 세분화하여 맞춤형 정책 차별화 필요
- 해당 주민들과의 정책 소통 방안 강구 필요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위한 성 평등 사회 실현

1. 목표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역량 강화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
- 사업·정책에 대한 성 인지적 관점 반영으로 정책의 효과성 제고

2. 사업내용

- 여성단체 역량강화 및 성평등의식 확대
- 성인지력 향상 및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3. 최근 추진실적

	2017
여성단체 역량강화 및 성평등의식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여성 역량 강화 - 양성평등주간: 연1회 - 여성지도자 워크숍: 연1회
성인지력 향상 및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 전 직원, 연 1인 4시간 이상

4. 성과지표추이

- 현행 성과지표

성 과 지 표	측 정 지 표 (성과측정산식)	연도별 실적 및 목표		지표 비중 (100%)
		2017년 실적	2018년 목표	
계				100
여성단체 역량강화 및 성평등의식 확대	양성평등사업 운영율 (실시횟수/계획횟수)×50 + (참여인원/계획인원)×50	100%	100%	50
성인지력 향상 및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이수율 [교육이수자 수/계획인원(전 직원 20%)] × 100	100%	100%	50

5. 개선방안

- 현행 성과지표 운영과 함께,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내용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성평등 정책은 경제분야, 노동분야와 동시에 교차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함

■ 이슈 6 :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 모든 개별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를 존중해야 함
- 개인의 삶 존중
- 언론 및 표현의 자유
-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
- 어떠한 수단을 통해 정보 및 아이디어를 얻고, 받고, 전하는 자유
-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함께 재산을 소유할 권리 및 임의로 재산을 빼앗기지 않을 자유
- 내부 징계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정당한 프로세스에 접근하고 항변할 권리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이슈 현황 파악 및 보완점

- 위 남구청 조직의 기대활동 중 중요한 과제로 판단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현황 파악과 평가 및 보완점 제시를 해보면 다음과 같음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이슈 평가 기준	현행 사업	평가 및 보완점
1. 모든 개별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 존중 2. 개인의 삶 존중 3. 언론 및 표현의 자유 4.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	- 공공기관으로서 남구청의 행정 업무 과정이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이슈를 기본으로 포함하고 있음. -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3) - 인권증진기본계획 (2018-2022)	남구청의 인권선언, 시민기본권 선언 및 조례 시행 등을 통해 시민권과 정치적 기본권을 보다 강화해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개선 방향

-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는 헌법과 법률로 다양하게 보호되고 있지만, 사회책임(SR)을 조직에 시스템화하고자 한다면 내부 규정이나 조례 등으로 세부 규범을 만들 필요가 있음
- 주민들의 기본권(언론 및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정보의 습득 및 전달 자유, 재산소유권 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및 구청 내 업무분장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 이슈 7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이러한 권리 향유를 제한, 방지 또는 지연하는 활동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실사를 해야 함
- 조직은 지역주민의 권리를 포함한 이런 권리에 대해, 새로운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조직의 의사결정, 활

동, 제품 및 서비스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해야 함

- 필수상품 및 서비스의 분배가 위태로울 때 이의 효율적인 분배를 보장하기 위한 특정 정책을 채택 또는 유지하는 것을 적절히 고려해야 함
-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직으로 재정립하여 다음의 내용을 고려해야 함
 - 지역사회 구성원을 위한 교육 및 평생학습(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지원 및 시설을 제공
 - 이런 권리 이행에 기여하는 핵심 활동과 관련된 방식을 탐색
 - 빈곤층을 위한 정책의 조정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이슈 현황 파악 및 보완점

- 남구 조직의 기대활동 중 중요한 과제로 판단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현황 파악과 평가 및 보완점 제시를 해보면 다음과 같음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이슈 평가 기준	현행 사업	평가 및 보완점
1. 권리 향유를 제한, 방지, 지연에 불개입 2. 권리 생사에 조직의 의사결정이 미치는 영향 3. 필수재의 효율적인 분배를 위한 정책 유지 4. 사회적 책임 조직으로 재정립	- 공공기관으로서 남구청의 행정 업무 과정이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이슈를 기본으로 포함하고 있음. -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2013) - 인권증진기본계획(2018-2022)	남구청의 인권정책,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선언 및 조례의 본격적인 시행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기본권이 보다 강화해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개선 방향

-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는 권리는 헌법과 법률로 다양하게 보호되고 있지만, 사회책임(SR)의 관점에서 관련 세부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음
- 주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침해 여부(또는 향유정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이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이를 담당할 업무분장이 필요함
- 지방정부의 정책활동이 이러한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함
-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이 차별 없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예를 들면, 생필품 공급량, 가격 등 관리, 공익서비스 요금의 합리적인 결정)
- 특히 필수 재화나 서비스가 빈곤층에 적절히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으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인식 제고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함

■ 이슈 8 : 근로에서의 근본원칙과 권리

-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야 함
- 강제노동을 철폐하여야 함
-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차별을 철폐하여야 함. 고용 정책은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출신 국가, 사회 출신, 정치 견해, 나이, 또는 장애에 기초한 차별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을 확인해야 함
- 취약집단의 보호 및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 아동노동 금지 및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 함

근로에서의 근본원칙과 권리 이슈 현황 파악 및 보완점

남구 조직의 기대활동 중 중요한 과제로 판단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현황 파악과 평가 및 보완점 제시를 해 보면 다음과 같음

근로에서의 근본원칙과 권리 이슈 평가기준	현행 사업	평가 및 보완점
1.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장 2. 강제노동 철폐 3. 차별 철폐 4. 고용취약집단의 보호 및 발전을 위한 조치 5. 아동노동 금지 및 대안 마련	- 공공기관으로서 남구청의 행정 업무 과정에서 근로에서의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으며, 관련 법을 준수하고 있음. -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3) - 인권증진기본계획 (2018-2022)	남구청의 노동기본권 정책, 강제노동, 아동노동 금지 등 근로에서의 기본권 보호가 남구 전체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동 분야와 연계하여 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개선 방향

- 근로에서의 근본 원칙과 권리 항목은 ILO에서 권장하는 국제 노동 규범에 근거하고 있어서 아직 비준되지 않은 부분은 최대한 입법 노력을 해야 함
- 남구의 경우, 공무원 노조의 결성, 활동 편의 제공 및 교섭권 보장 관점에서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강제노동, 의무노동 금지, 아동노동 철폐 등 국제 규범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여성, 청년, 고령근로자 등의 고용 취약집단 보호를 위한 세부적인 정책과 계획이 필요함

3. 노동

- 노동은 울산 남구청 조직에 의한 또는 조직을 대신해서 수행되는 근로와 관련된 모든 정책 및 관행과 관련이 있음
- 여기에는 근로자의 채용 및 승진, 징계 및 고충처리 절차, 근로자의 전근 및 재배치, 고용의 만료, 훈련 및 기능개발, 보건, 안전 및 산업위생, 특정 근로시간 및 보수 같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또는 관행을 포함함
- 노동관행은 또한 고용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다루기 위한 단체교섭, 사회적 대화 및 노사정 협의에 근로자 조직의 인정, 근로자 및 사용자 조직 양쪽의 의견 및 참여를 포함



〈사진5〉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 노동 관행 이슈 1 : 고용 및 고용관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고용 및 고용관계를 위하여 남구청은

- 안정적인 고용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고, 고용율 등 직접적인 일자리 지표가 개선되고, 실질적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공정한 고용관계와 착취적 노동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대표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공정한 고용관계정립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 고용된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유출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

-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용인의 지위를 인정하고 평등한 기회보장과 임의/차별 해고를 방지하는 근로계약 체결을 보장해야 함

고용 및 고용관계 이슈 현황파악 및 보완점

고용 이슈 평가 기준	현행 사업	평가 및 보완점
1. 고용 안정된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센터 - 일자리 지원 	남구청의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구청에서는 성공적이라 평가할 수 있는데 청년 고용률 등의 지표는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음 성공적이라 평가되는 사업이 청년 고용으로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2. 고용관계 착취적 노동관행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 고용평가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많은 일들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 평가됨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구청에게 중재역할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사실을 어떻게 정책화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
3. 개인정보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보호법 	중앙정부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남구청에서도 중앙정부의 사업을 시행
4. 피고용인 인정 고용의무회피 금지 운영상변화에 대한 통지 평등한 기회보장 임의/차별해고 제거 근로계약체결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 고용 관련 법안 	중앙정부의 의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남구청에서도 중앙정부의 사업을 시행

2018 주요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

1. 목표

-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 공모 추진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2. 사업내용

- 일자리 창출 공모전 개최
- 일자리 창출 국제 심포지엄 개최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 사회공헌활동 일자리 지원사업

3. 최근 추진실적

2015년	- 울산지역 건설기능인 양성 및 훈련사업 : 90,760천원, 90%취업 - 울산지역 전략산업 설계 인력 양성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 138,222원, 112% 취업
2016년	- 울산 인문사회계열 청년 취업 프로젝트 : 91,381천원, 9명 취업
2017년	- VR 콘텐츠 허브 구축사업 : 108,000천원, 20명 취·창업 - 비계(죽장,발판)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사업 : 43,812천원, 16명 취업 - 울산 대나무를 활용한 죽공예가 양성사업 :46,545천원, 4명 취업

4. 성과지표추이

• 현행 성과지표

성 과 지 표	측 정 지 표 (성과측정산식)	연도별 실적 및 목표		지표 비중 (100%)
		2017년 실적	2018년 목표	
계				100
일자리 아이디어 발굴	아이디어 발굴 건수 (발굴건수/목표건수 (5)×50%)		100%	50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맞춤형사업 취·창업인원 (취업인원/목표인원 (50)×25%)	100%	100%	25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취·창업인원 (취업인원/목표인원 (30)×25%)		100%	25

5. 개선방안

- 예산의 적법한 사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존의 창업 지원정책은 창업 지원사업 지원기간이 끝나면, 내년에 지원을 권장하는 등 상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개선해야 함
- 또한 현재 국가가 지정한 사업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적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이 가능한 업종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장됨
- 국가지정 사업이 아니어서 금전적인 지원은 불가능 하더라도, 창업과 관련된 기초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어야 다양한 창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일자리 지원 및 실업 해소

1. 목표

-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2. 사업내용

- 공공근로사업
-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3. 최근 추진실적

	2015	2016	2017
공공근로사업	276명	180명	198명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60명	60명	60명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322명	337명	932명

4. 성과지표추이

- 현행 성과지표

성 과 지 표	측 정 지 표 (성과측정산식)	연도별 실적 및 목표		지표 비중 (100%)
		2017년 실적	2018년 목표	
계				100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근로사업 참여 인원 (참여인원/목표인원(180))×60%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참여인원/목표인원(60))×40% 	104	100%	60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취업자수/목표인원(600))×100% 	169	100%	40

5. 개선방안

- 실업해소를 위한 공공근로와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은 구청의 성과지표로는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고용률/실업률 지표에 개선을 가져오지는 못하고 있음
- 공공근로의 경우 사회복지성 성격이 강하므로 이러한 사업을 경제적 정책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노동 관행 이슈 2 : 근로조건 및 사회적 보호

근로조건 및 사회적 보호를 위하여 남구는

- 공정한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실업 등의 불안정한 상태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국내법과 국제노동기준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함
- 근로와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 모성보호 등을 위하여 합리적인 근로시간과 보육시설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단체협약과 근로자의 권리 존중을 위해 노력해야 함

근로조건 및 사회적 보호 현황파악 및 보완점

근로조건 및 사회적보호 이슈 평가 기준	현행 사업	평가 및 보완점
1. 근로조건 동일노동 동일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지원 	<p>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펼쳐지고,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위한 정책이 펼쳐지고 있음</p> <p>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을 저해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수립 필요</p>
2. 사회적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지원 및 실업해소 -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및 강화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p>실업에 대한 사회적 보호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청년 일자리 정책은 지방정부는 성공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실질 지표는 계속 하락세라는 점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함</p>
3. 국내법/국제기준 준수 국제노동조항 준수 국가적 전통 및 관습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노동/고용 법률은 ILO 기준을 준수 	<p>ILO 기준의 국내화된 적용 권장</p>
4. 임금, 근로시간, 모성보호 등 합리적 근로시간, 보육시설 제공 근로와 삶의 균형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세대 투자를 위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 	<p>모성보호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p> <p>보육정책 관련 지방정부는 성공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실질지표는 계속 하락세라는 점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함</p>
5. 단체협약 존중 단체협약에 따른 보수제공 임금직접 지불 근로자의 권리 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 관련법 	<p>중앙정부의 노동 고용 관련 법률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지역적 실행에 집중</p>

2018 주요사업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및 강화

1. 목표

- 지역 특성에 맞는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조직 발굴·육성

2. 사업내용

-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 사회적 기업 인증
- 마을기업 지정
- (예비)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 사업
- 경영컨설팅 및 인큐베이팅
- 사회적기업 판로 활성화
- 사회적기업 생산제품 우선구매 추진

3. 최근 추진실적

20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지원 -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 사회적경제 창업팀 육성 지원 : 6개팀 (창업지원금, 준비공간, 멘토링 등)
20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활성화 지원 - 일자리 알선 연계 지원 -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실 운영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맞춤형 사회적경제조직 발굴·육성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사업 추진 - '남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 사회적기업 판로 활성화

4. 성과지표추이

• 현행 성과지표

성 과 지 표	측 정 지 표 (성과측정산식)	연도별 실적 및 목표		지표 비중 (100%)
		2017년 실적	2018년 목표	
계				100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개소 (실제지정개소/목표지정개소)×40 • 사회적기업 인증 개소 (실제인증개소/목표인증개소)×30 • 마을기업 지정 개소 (실제지정개소/목표지정개소)×30 	100%	100%	20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및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금 (집행금액/예산금액)×40 • 경영컨설팅 등 교육 참여 인원 (참여인원/목표인원(200명))×20 • 위드프리마켓 참여 인원 (참여인원/목표인원(1,000명))×30 • 사회적기업 생산제품 우선구매 (사회적기업구매실적/ 총구매실적(20,000백만원))×10 	100%	100%	80

5. 개선방안

-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자립, 취·창업 연계를 위해서는 기존기업의 사회공헌센터의 설립/확장 및 연계를 통하여 사업추진을 할 것이 권장됨
- 사회적 경제 육성 방안은 엄밀히 말해 경제적 사업이라기보다 사회복지적 측면이 강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

1. 목표

-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통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 보육서비스 수준향상을 통한 영유아 양육 및 취업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2. 사업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지원

3. 최근 추진실적

- 2018년 공공어린이집 선정 심의 시작

4. 성과지표추이

- 현행 성과지표

성 과 지 표	측 정 지 표 (성과측정산식)	연도별 실적 및 목표		지표 비중 (100%)
		2017년 실적	2018년 목표	
계				100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계획 개소수 [(신규개소/(계획 개소수))*100]	-	3	70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지원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설정 시설수 [(신규시설수/(계획 개소수))*100]	-	1	30

5. 개선방안

- 현 보육료 하에서의 실현가능한 보육수준에 대한 홍보 및 대화를 통한 학부모 인식전환 사업이 권장됨
- 여성취업율의 상승과 맞물려 집에서 아이를 보는 여성에 대해 “일을 하지 않는 여성”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권장됨

■ 노동 관행 이슈 3 : 사회적 대화

고용자와 사용자의 사회적 대화를 위하여 남구는

- 단체교섭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조직구성 및 가입권리를 존중하고, 보복 및 방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사회적 대화 현황파악 및 보완점

사회적 대화 평가 기준	현행 사업	평가 및 보완점
1. 사회적 대화 단체교섭의 중요성 인정 조직구성 및 가입 권리 존중 보복 및 방해 금지 합리적 통지 제공 정보 접근성 보장 결사의 자유 보장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고용포럼 일자리위원회	공동 이해관계 사항에 대한 대화를 진행하고 있음 원활한 노사협상에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 고민

2018 주요사업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1. 목표

- 노사소통을 통한 상생협력 도모 및 지역경제발전 추구
- 노동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통한 협력적인 선진 노사문화 정착 필요

2. 사업내용

- 노동단체 지역노사안정 지원
-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
- 노동특보를 통한 노사갈등 예방

3. 최근 추진실적

2015년	- 2015년 9월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 노사상담 및 기업체 방문 175건, 노동관련법 교육 2회
2016년	- 단시간 근로자 고용실태 조사 등 7가지 노사민정 협력사업 추진 - 노사상담센터 총 1701건의 전화 및 현장 상담 실시 - 노동관련법 교육 실시
2017년	- 노동단체 워크숍 및 국제교류사업지원 - 노사관계 교육 및 발전방안 토론 - 노동특보 노사상담(200건) 및 단체협약 지도(58건)

4. 성과지표추이

• 현행 성과지표

성 과 지 표	측 정 지 표 (성과측정산식)	연도별 실적 및 목표		지표 비중 (100%)
		2017년 실적	2018년 목표	
계				100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 노동단체 국제교류사업 참여율 (실제참여인원/목표인원)×100	100%	100%	30
	• 국비공모사업 지원 및 추진율 (추진건수/지원건수)×100			30
	• 노사민정(실무)협의회 운영율 (운영횟수/계획횟수)×100			30
	• 노동특보 노사갈등 상담율 (실제상담건수/200건)×100			20

5. 개선방안

- 최근 젊은 세대는 노동운동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지고 있으며, 지역민의 대표자인 구청장 등에게 보다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에 구청의 사회적 책임을 재고하는 것이 권장됨
- 또한 실질노동소득 분배율 등을 측정하여 합리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 권장됨

■ 노동 관행 이슈 4 : 근로에서의 보건 및 안전

근로에서의 보건 및 안전을 위하여 남구청은

- 보건관리 원칙을 이해하여야 함
- 안전관리 원칙을 이해하여야 함
- 다양함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함
- 산업보건 안전정책을 수립하여야 함
- 질병의 원인을 제거하여야 함

근로에서의 보건 및 안전 이슈 현황파악 및 보완점

근로에서의 보건 및 안전 이슈 평가 기준	현행 사업	평가 및 보완점
1. 보건 보건관리 원칙이해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위생업소 단속	남구청 구성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음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절차 권장
2. 안전 안전관리 원칙 이해 안전 리스크 관리 안전장비제공 적절한 훈련 제공	국제안전도시 공인 인증 안전관리 조례제정	안전을 위한 국제적 수준의 인증 및 제도가 도입되었음 실질적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 필요
3. 다양한 근로자 보호 임시근로자 보호 근로자의 권리 존중 근로자의 금전지출 금지	재난배상 책임보험 현황관리	울산지역 기업들의 단체가입 가능성에 대한 모색
4. 산업보건 안전정책 소통과 절차 보장 안전사고 기록	안전관리 위원회 산업안전지식 공유장터	산업안전지식 공유장터의 실효성 높은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5. 질병의 원인 제거 보건 리스크 관리	식품관련 영업주 위생교육관리	지속적 식품품질 관리 권장

2018 주요사업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관리

1. 목표

- 시설물 정기점검을 통한 청사 안전관리 강화
- 각종 시설물 및 기계설비 소수리 및 위생관리
- 쾌적하고 효율적인 업무 공간 조성

2. 사업내용

- 승강기, 소방, 가스, 건축 등 시설물 정기 점검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 정화조 청소, 물탱크 청소, 비데 청소, 방역 등 위생관리 강화
- 각종 시설물 및 전기, 기계설비 소수리 안전
- 쾌적하고 효율적인 업무 공간 조성

3. 최근 추진실적

	2015	2016	2017
시설물 정기점검	월 1회	월 1회	월 1회
위생관리 횟수	정화조: 연 1회 물탱크: 연 2회 비데: 월 2회 방역: 연 6회	정화조: 연 1회 물탱크: 연 2회 비데: 월 2회 방역: 연 6회	정화조: 연 1회 물탱크: 연 2회 비데: 월 2회 방역: 연 6회
각종 시설물 소수리 건수			320건
청사 환경개선 공사 실시 건수			6건

4. 성과지표추이

• 현행 성과지표

성 과 지 표	측 정 지 표 (성과측정산식)	연도별 실적 및 목표		지표 비중 (100%)
		2017년 실적	2018년 목표	
계				100
시설물 정기점검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 점검결과 보고서(승강기 등) (점검실적/점검계획) × 100	100%	100%	20
위생관리 강화	• 점검결과 보고서 (점검실적/점검계획) × 100	100%	100%	20
각종 시설물 소수리	• 소수리 실적 (수리실적/수리대상) × 100	100%	100%	20
청사 환경개선공사 실적	• 환경개선 공사 실적 (공사실적/공사대상) × 100	100%	100%	40

5. 개선방안

- 남구청 공무원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것이 권장됨
- 또한 공무원들이 민원인으로부터 당할 수 있는 불쾌한 경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마련 권장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

1. 목표

- 지역사회 공동체 구성원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선진화 구현

2. 사업내용

- 국제안전학교 시범사업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환경개선사업
- 안전문화 확산 릴레이 캠페인 추진
-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사업 추진
- 국제안전도시 공인식 개최 : 3. 6. (화)

3. 최근 추진실적

20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도시 조례 제정 : 2015년 8월 - 안전도시협의회 구성 : 2015년 10월 - 안전도시실무협의회 구성 : 2015년 12월
20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도시실무협의회 분과위원장 간담회(제1차) 개최 : 2016년 1월 - 공인 업무지원 협약식 및 사업설명회 : 2016년 3월,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 - 분과별 안전증진프로그램 선정 : 2016년 3월 ~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지식 공유장터 행사(6월, 1회) - 안전문화 확산 릴레이 캠페인 추진 - 국제안전도시 공인 본심사 : 12. 14.~12. 15.(2일간)

4. 성과지표추이

- 현행 성과지표

성 과 지 표	측 정 지 표 (성과측정산식)	연도별 실적 및 목표		지표 비중 (100%)
		2017년 실적	2018년 목표	
계				100
국제안전도시사업 홍보	국제안전도시 사업관련 홍보 (10회 이상 100%, 10회 미만 50%)	100%	100%	15
학교안전분야 특성화사업 추진	국제안전학교 시범사업 수행여부 (수행 100%, 미수행 0%)	100%	100%	15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사업 추진	분야별 안전 증진프로그램추진건수 (추진건수/계획건수(90건))×100%	100%	100%	30
국제안전도시 네트워크 활동 및 실무자 역량강화	연차대회, 워크숍 등 (참석횟수/계획횟수(3회))×100%	100%	100%	15
국제안전도시 공인식 및 심포지엄	공인식, 심포지엄 (개최횟수/계획횟수(2회))×100%	100%	100%	25

5. 개선방안

- 국제안전도시 공인이 작업장에서의 사고사망을 등 실질지표와 연관이 되도록 추진하는 것이 권장됨
- 울산 지역은 많은 중화학 공업단지가 모여 있으며, 지진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과거 설립된 공단 등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등, 견잡을 수 없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홍보하며 관련 안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권장됨



〈사진6〉 남구 국제 안전도시 심포지움 개최

■ 노동 관행 이슈 5 : 직장에서의 인적개발 및 훈련

직장에서의 인적개발 및 훈련을 위하여 남구청은

- 비차별적 경력발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
- 새로운 고용을 지원하고 보건 및 안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함

직장에서의 인적개발 및 훈련 현황파악 및 보완점

인적개발 및 훈련 이슈 평가 기준	현행 사업	평가 및 보완점
1.인적개발 및 훈련 비차별적 경력발전 기회 제공	- 장애인자립지원체계 내실화 - 국비직업훈련 교육 - 지역자활센터	인적개발 및 훈련을 위한 정책들이 실행되고 있음. 인적개발 및 훈련이 고용으로 이어지기 위한 정책이 필요
2.새로운 고용 지원 보건 및 안녕 증진 노력	- 자활역량평가 실시 - 행정인턴운영 - 신입 공무원 적응교육	자활역량 평가 등이 내실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

2018 주요사업

장애인 자립지원체계 내실화

1. 목표

- 저소득 장애인 가구 생활안정 지원
- 장애인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도모

2. 사업내용

-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전 지원
-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지원

3. 최근 추진실적

	2015	2016	2017
저소득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16,256명, 4,311백만원	4,338백만원	3,493명, 4,526백만원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원	101명, 1,026백만원	109명, 900백만원	125명, 1,096백만원

4. 성과지표추이

- 현행 성과지표

성 과 지 표	측 정 지 표 (성과측정산식)	연도별 실적 및 목표		지표 비중 (100%)
		2017년 실적	2018년 목표	
계				100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지원자수/3,552명(계획자수)] *100	111%	100%	50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 지원	[참여인원(125명)/계획인원(111명)] *100	111%	100%	50

5. 개선방안

- 장애인 자립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가 문제가 되지 않는 사업으로의 확장이 권장됨

4. 환경

- 조직의 모든 의사결정과 활동은 환경에 영향을 미침. 이러한 영향은 조직의 자원 이용, 조직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오염 및 폐기물의 발생 그리고 자연 서식지에 대한 조직 활동의 영향과 관련될 수 있음
- 조직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조직은 조직의 의사결정 및 활동의 직접적·간접적인 경제적, 사회적, 보건적 및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는 통합 접근방식을 채택해야 함
- 지방 정부 조직으로서 남구청의 경우도 행정과정상에서 다양한 환경적 책임을 지님
- 미세먼지 문제와 기후변화 문제를 비롯하여 자연자원의 고갈, 오염, 서식지 파괴, 종의 손실, 전체 생태계의 붕괴, 도시 및 농촌 문제, 인간 정주 문제 등 많은 환경적 도전에 직면해 있음
- 환경적 책임은 인류의 생존 및 번영을 위한 전제조건임. 따라서 남구청의 환경적 책임도 사회적 책임의 중요한 측면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



〈사진7〉 남구 관내에 조성된 선암호수공원

■ 이슈 1 : 오염예방

환경분야 오염예방을 위하여 남구는 다음의 활동을 할 필요가 있음

- 주변 환경에 대한 남구청의 의사결정과 활동의 측면 및 영향을 식별해야 함
- 남구청의 활동과 관련된 오염 및 폐기물의 발생원을 식별해야 함
- 남구지역의 중대 오염 발생원, 오염 감소, 물 소비, 폐기물 발생 및 에너지 사용에 대해 측정, 기록 및 보고를 해야 함
- 폐기물 관리체계를 활용하여, 오염 및 폐기물 예방과 불가피한 오염 및 폐기물의 적절한 관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를 실행해야 함
-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오염 배출과 폐기물, 관련된 보건 리스크 및 실질적이고 제안된 완화조치에 관해 지역사회와 소통해야 함

오염예방 이슈 현황 파악 및 보완점

남구 조직의 기대활동 중 중요한 과제로 판단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현황 파악과 평가 및 보완점 제시를 해 보면 다음과 같음

오염예방 이슈 평가 기준	현행 사업	평가 및 보완점
1. 남구청 활동의 환경측면 및 영향식별	- 환경보전 중기 종합계획	환경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히 관리되고 있음.
2. 남구청 활동과 관련된 오염 및 폐기물 식별	- 환경보전 중기 종합계획	환경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히 관리되고 있음.
3. 남구지역 물 소비, 폐기물 발생 및 에너지 사용 측정, 기록, 보고	- 불법투기 예방 LED 홍보 로고빔 설치 - 울산 남구청 에너지 계획	전체적인 환경 관리 현황은 환경보전 중기 종합계획에 기술되어 있음.
4. 오염 및 폐기물 예방과 적절한 관리	- 하수도 시설물 정비 - 하천 유입오수 차단시설 유지관리	적절히 관리되고 있음.
5. 오염 배출과 폐기물과 관련된 보건 리스크 관리와 지역사회소통	- 화학물질 선진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적절히 관리되고 있음.

2018 주요사업

환경오염 예방 및 관리

1. 목표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관리로 오염물질 배출 저감
-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쾌적하고 건강친화적인 환경조성

2. 사업내용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 선진환경관리체제 구축
- 무인환경관리 시스템 운영

3. 최근 추진실적

	2017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지도점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점검 691개소, 위반 50건 ※ 민관 합동단속 실시(3회): 점검 41개소, 위반 5건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자동차배출가스 관리 •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5,914대 • 배출가스 무료점검: 14회(자동차 1,500대)
선진환경관리 체제 구축	선진환경관리 체제 구축·운영 • 자율점검업소 지정: 84개소
무인환경관리 시스템 운영	무인악취관리 시스템 운영: 40개소

4. 성과지표추이

- 현행 성과지표

성 과 지 표	측 정 지 표 (성과측정산식)	연도별 실적 및 목표		지표 비중 (100%)
		2017년 실적	2018년 목표	
계				100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지도점검	수질·대기 배출시설 지도점검율 (점검수/점검대상수)×100	100%	100%	30%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실적 {(단속대수/목표대수)×50} + {(무료점검횟수/목표횟수)×50}	100%	100%	30%
선진환경관리 체제 구축	자율점검업소 지정율 (지정수/지정목표수)×100	100%	100%	20%
무인환경관리 시스템 운영	무인악취포집기 및 소음전광판 운영율 (운영수/목표대수)	100%	100%	20%

5. 개선방안

- 현행 성과지표 운영과 함께,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수질, 대기분야) 내용을 연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업무 분장에서도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관리 분담 필요

■ 이슈 2 :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남구의 환경분야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을 위하여 남구청은 다음의 활동을 할 필요가 있음

- 에너지, 물 및 기타 사용된 자원의 출처를 식별해야 함
- 에너지, 물 및 기타 자원의 중대한 사용에 대해 측정, 기록 및 보고를 해야 함
- 남구 지역의 에너지, 물 및 기타 자원의 사용을 줄이는 자원 효율성 조치를 실행해야 함
- 가능한 경우, 재생 불가능 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재생가능한 자원 및 환경에 대한 영향이 적은 자원으로 보완 또는 교체해야 함
- 가능한 한 재활용 재료를 이용하고 물을 재사용해야 함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이슈 현황 파악 및 보완점

남구 조직의 기대활동 중 중요한 과제로 판단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현황 파악과 평가 및 보완점 제시를 해 보면 다음과 같음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이슈 평가기준	현행 사업	평가 및 보완점
1. 에너지, 물 및 자원의 출처 식별	- 울산 남구청 에너지 계획(2017)	환경계획과 에너지계획의 분류상 각각 다루고 있으나, 향후 통합적 관리가 필요함
2. 에너지, 물 및 자원 사용 측정, 기록, 보고	- 울산 남구청 에너지 계획(2017)	환경, 에너지, 자원재활용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히 관리되고 있음
3. 남구 지역의 에너지, 물 및 자원 효율성 조치 실행	- 지속적이고 자립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성 - 남구 행복 에너지센터 운영	데이터의 측정, 기록, 보고는 적절히 되고 있으나, 자원 효율성 조치는 미흡한 상황임. 자원 효율성 조치와 함께 개선 계획 수립이 필요함
4. 재생가능한 자원으로 보완 대체	- 환경보전 중기 종합계획 중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규에 따라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
5. 재활용 재료 이용과 물 재사용	- 환경보전 중기 종합계획 중	자원재활용 관련 법규에 따라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

2018 주요사업

지속적이고 자립가능한 에너지도시 조성

1. 목표

- 정부의 에너지정책 부응과 우리 구의 에너지계획 1년차 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도시 기반 조성
- 기 간 : 2018년 1월 ~ 12월

2. 주요사업

- 1) 저소득층주택 에너지 효율화사업
: 기초수급, 차상위 계층 등 주택 50여 가구에 2~3kw 태양광 설치 지원
- 2) 유희시설 태양광 발전사업
: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기업물류지원센터에 태양광 90kw 지원
- 3) 주민주도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 주택 200가구에 태양광 2~3kw 설치 지원
- 4) 홈 IoT보급
: '주민주도형 에너지자립마을'과 연계 2개 마을 200가구에 IOT 보급

「남구 행복 에너지센터」 설치·운영

1. 목표

- '남구 에너지계획' 추진에 있어 전문 및 비전문영역으로 구분하여 사업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전문 영역에 적합한 운영 조직 필요
- 운영기간 : 2018년 7월부터

2. 주요사업

- 기본사업 : 신재생에너지 교육, 홍보, 컨설팅,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
- 시책사업
 - 에너지설계사 운영(7명) : 에너지진단, 전기요금 컨설팅, 전력수요관리 등
 - 기후학교 운영 :
 - 초중고 각 1개교(500명) : 에너지절약 선도 및 교육 전개
 - 일반인(200명, 2회) : 에너지자립마을 홍보 및 에너지 절약 실천 교육

■ 이슈 3 :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남구의 환경분야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위하여 남구청은 다음의 활동을 할 필요가 있음

■ 기후변화 완화

- 직접적·간접적으로 누적된 온실가스 배출의 출처를 식별하고, 조직의 책임 경계(범위)를 정의해야 함
-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에 따라 남구의 중대한 온실가스 배출을 측정, 기록 및 보고해야 함
- 남구청의 통제 내에서 일어나는 직접적·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최소화시키는 조치를 실행해야 함
- 남구 내에서의 주(significant) 연료 사용의 양 및 유형을 검토하고, 효율성 및 효과성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함
- 에너지 효율 상품 구매, 에너지 효율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포함해서, 남구내의 가능한 모든 곳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현해야 함

■ 기후변화 적응

- 기후변화 리스크를 식별하고, 기후변화 적응을 조직의 의사결정 안에 통합하기 위해, 미래의 글로벌 및 지역의 기후변화 예측을 고려해야 함
- 기후변화와 관련된 피해를 회피 또는 최소화하는 기회를 식별해야 함
- 기존 또는 미래에 예상되는 영향에 대응하는 조치를 실행하고, 조직 영향권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적응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이슈 현황 파악 및 보완점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이슈 평가기준	현행 사업	평가 및 보완점
〈기후변화 완화〉 1. 직접·간접 온실가스 배출의 출처를 식별	- 공공기관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관리하는 지자체별 온실가스 통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2. 남구 온실가스 배출 측정, 기록, 보고	- 공공기관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상동)
3. 직접·간접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최소화 조치	- 울산 남구청 에너지계획 (2017)	온실가스 감축은 에너지 사용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바, 에너지 계획 속에 온실가스 연계 부분을 분석하여 저감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음
4. 주연료 사용의 효율성, 효과성 증진 프로그램 시행	- 생활속 저탄소 녹색생활실천 운동	연료사용 효율성을 다방면에서 추구하고 있으며, 적절히 수행하고 있음

5. 에너지 효율 상품 구매	- 생활속 저탄소 녹색생활실천 운동	에너지 효율 상품 구매는 저탄소를 실현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적절히 수행하고 있음
〈기후변화 적응〉 1. 기후변화 리스크를 식별하고, 기후변화 적응 의사결정	- 울산 남구청 에너지계획 (2017)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 관리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로 진행하나, 남구청 차원에서도 교차 점검이 필요함
2. 기후변화 피해 회피와 최소화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쿨루프 시범사업	다양한 시민참여형 적응대책도 적절히 수행되고 있음
3. 예상되는 영향에 대응하는 조치 실행	- 생활속 저탄소 녹색생활실천 운동	(상동)

2018 주요사업

친환경 녹색생활 활성화

1. 목표

-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녹색생활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남구 건설
- 온실가스 저감으로 저탄소형 생활문화 확산·정착

2. 사업내용

- 탄소포인트제 지속 추진
- 온실가스 배출량 진단행사 실시
- 기후학교 및 녹색생활실천 '그린교실' 운영
- 그린스타트 운동 녹색생활 실천 홍보부스 운영

3. 최근 추진실적

	2017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 수 (세대수)	참가가입세대수 : 32,036
온실가스진단 세대수	진단 세대수 : (481)
기후학교, 그린교실 참여자수	참여자수 : (110)
그린스타트운동 참여자수	참여자수 : (2085)

4. 성과지표추이

- 현행 성과지표

성 과 지 표	측 정 지 표 (성과측정산식)	연도별 실적 및 목표		지표 비중 (100%)
		2017년 실적	2018년 목표	
탄소포인트제 추진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수 /목표세대수)×100	32,036세대 (105.3%)	32,500세대	50
저탄소형 생활문화 확산 위한 홍보활동 강화	홍보 활동지수 (50회)	49회 (122.5%)	50회 이상	50

5. 개선방안

- 현행 성과지표 운영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 등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내용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추가적인 세부사업 발굴 필요
- 관내 기업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이슈 4 : 환경보호, 생물다양성 및 자연서식지 복원

남구의 환경분야 환경보호, 생물다양성 및 자연서식지 복원을 위하여 남구청은 다음의 활동을 할 필요가 있음

-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이 영향을 제거 또는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 환경영향에 대한 비용을 내부에서 처리하기 위한 시장 메커니즘에 참여하며, 생태계 서비스를 보호하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자연생태계 손실을 피하는 데 최우선순위를 두고, 생태계 복구에 다음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
- 사회적으로 공평한 방식으로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는 토지, 물 및 생태계 관리를 위한 통합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함
- 고유종, 멸종 위기에 직면 또는 멸종 위기에 처한 종, 혹은 부정적 영향을 입을 수 있는 서식지를 보존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 자연서식지, 습지, 산림, 야생 생물 통로, 보호 구역 및 농지의 보호를 건물 및 건축 작업 개발에 포함하도록 함

환경보호, 생물다양성 및 자연서식지 복원 이슈 현황파악 및 보완점

남구 조직의 기대활동 중 중요한 과제로 판단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현황 파악과 평가 및 보완점 제시를 해 보면 다음과 같음

오염예방 이슈 평가 기준	현행 사업	평가 및 보완점
1.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	- 환경보전 중기 종합계획(17~21) - 두루미 생태환경연구소 설치 운영	환경보전 중기 종합계획(17~21) 등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계획은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음
2. 생태계 서비스를 보호하면서 경제적 가치 창출	- 향기나는 산책로 조성사업 등	생태계 서비스 보전과 경제적 가치 창출 행정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음
3. 자연생태계 손실 방지와 생태계 복구	- 자연과 함께하는 철새마을 조성	자연생태계 손실방지과 생태계 복구 노력이 적절히 추진되고 있음
4. 토지, 물, 생태계 통합적 관리	- 환경보전 중기 종합계획(17~21)	토지, 물, 생태계가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5. 고유종, 멸종 위기종 서식지 보존	- 삼호 동우리, 사람과 철새를 품다 - 환경보전 중기 종합계획(17~21)	고유종,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존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음
6. 개발과정에서 자연서식지, 습지, 산림, 야생 생물 통로 보호	- 문수 여유만만 여가복지 조성사업	개발과정에서 자연서식지등 생태계가 적절히 보전되도록 계획이 수립되고 있음

2018 주요사업

쾌적하고 건강한 청정도시 조성

1. 목표

-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수거 처리로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
- 환경보호활동 등 주민 자율참여로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

2. 사업내용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 강화
- 주민과 함께하는 청결활동 활성화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3. 최근 추진실적

	201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강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1회), 주민만족도설문조사(1회)
주민과 함께하는 청결활동 활성화	환경시범거리 청소(동별) : 142회 마을청소봉사대청소(동별) : 361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쓰레기 불법투기 합동 단속활동 - 횟수/인원 : 6회 / 229명

4. 성과지표추이

• 현행 성과지표

성 과 지 표	측 정 지 표 (성과측정산식)	연도별 실적 및 목표		지표 비중 (100%)
		2017년 실적	2018년 목표	
계				100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강화	대행업체 관리 실적 (실적수/계획수)×100	25회	25회	50
주민과 함께하는 청결활동 활성화	주민참여 청소 실적 (청소횟수/계획횟수)×100	503회	510회	30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적 (단속횟수/계획횟수)×100	6회	6회	20

5. 개선방안

- 현행 성과지표 운영과 함께,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내용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쾌적하고 건장한 청정도시 건설 계획이 환경보호 및 생태계 보호의 관점에서 이뤄지도록 업무 연관 범위 재설정하고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5. 공정운영

■ 공정운영 관행

- 공정 운영관행은 울산 남구청과 관련된 다른 조직에 대한 윤리적 행동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 여기에는 남구청의 파트너, 공급자, 계약자, 고객, 남구청 내의 협회 등이 포함.
- 공정 운영관행 이슈는 반부패, 공공 영역에서의 책임 있는 참여, 공정 경쟁,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 다른 조직과의 관계 및 재산권 존중에서 발생.



〈사진8〉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들의 현황과 애로점 청취

■ 공정운영 관행 이슈 1 : 반부패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남구청은

- 부패 리스크를 식별하고, 부패 및 부당 행위 근절을 위한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표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남구청 고위층의 격려 및 모니터링 활동이 이행될 필요가 있음
- 부패 및 부패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남구청 구성원 및 계약자 및 공급자를 대상으로 반부패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이행 필요
- 부패에 맞서기 위한 효과적인 반부패 제도와 시스템을 수립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 부패 및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보고와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보고 및 신고자에 대한 보호 활동 필요
- 남구청의 민간위탁을 받는 파트너, 공급자, 계약자 등이 반부패 의지표명과 효과적인 제도 및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필요

반부패 이슈 현황파악 및 보완점

반부패 이슈 평가 기준	현행 사업	평가 및 보완점
1. 반부패 의지표명 및 고위층 모니터링 활동	- 부패 모니터링 및 부패 행위에 대한 보고 및 처리 프로세스에 관한 전결규정	남구청 내 전결규정에 의한 반부패 보고 프로세스 및 피드백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반부패 청렴 선포를 통한 강력한 의지표명 필요
2.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확립 - 공직자 '청렴연극' 교육 실시 - '청렴 문자 알리미' 운영	청렴 반부패에 대한 인식제고 교육이 마련되어 있으며, 지역민과의 소통으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었음
3. 효과적인 반부패 제도 및 시스템	- 바른 감사로 조직 역량 강화 - 계약심사제 운영으로 부실공사 방지 및 예산절감 - 실효성 있는 예방적 감사운영 - 투명한 지방보조금 관리운영 - 소통과 공감의 감사행정 운영 -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내실화	예방적 감사를 통해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건설, 지방보조금 등에 대한 부패방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반부패 제도 및 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남구 주민이 참여하는 명예구민 감사관제 확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4. 반부패에 대한 보고 및 신고 기반	-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확립	부패 및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반부패 신고자 보호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의 법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5. 타 조직에 대한 반부패 장려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현재 조달업체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의한 반부패 장려 활동 이행 중

2018 주요사업

바른 감사로 조직역량 강화

1. 목표

- 예방감사와 체계적인 감사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활기찬 공직풍토 조성

2. 사업내용

-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도시관리공단 등 종합감사
 - 민간단체 보조금, 일상경비 회계감사 등 특정감사
 - 비위 개연성이 높은 취약분야 복무감찰
 - 명예구민감사관제 및 대형공사구민감시관제 운영 등 투명 감사운영

3. 최근 추진실적

	2017
종합감사	- 감사대상 : 보건소, 신정 1·2·3동, 삼산동, 삼호동, 무거동, 선암동, 고래문화재단 - 감사결과 : 총100건(시정42, 주의58, 재정상 16건/1,625천원)
특정감사	- 분 야 : 민간단체보조금, 민원사무, 사회복지시설, 재무감사(2) - 감사결과 : 총41건(시정17,주의24, 재정상 11건/1,465천원)
복무감찰	- 감찰시기 : 설·추석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 감찰중점 : 지속·반복적 등 비위 개연성이 높은 분야
투명감사 운영	- 명예구민감사관제 운영 : 종합감사 참관 14회 - 대형공사구민감시관제 운영 : 10개소 - 감사결과 공개 : 14회(종합감사 9회, 특정감사 5회)

4. 성과지표추이

• 현행 성과지표

성 과 지 표	측 정 지 표 (성과측정산식)	연도별 실적 및 목표		지표 비중 (100%)
		2017년 실적	2018년 목표	
감사활동 실적률	종합감사실적 (연간감사실적/연간감사계획)×100	100%	100%	50
감사활동 실적률	특정·재무감사 실적 (연간감사실적/연간감사계획)×100	100%	100%	20
감찰활동 실적률	복무감찰 실적 (연간감찰실적/연간감찰계획)×100	100%	100%	20
공개적이고 투명한 감사운영 실적률	공개적이고 투명한 감사운영 실적 (연활동실적/연활동계획)×100	100%	100%	10

5. 개선방안

- 남구청의 다양한 기능에서의 행정활동(건축 및 공사, 예산 집행 등)에 대한 예방적 감사를 통하여 남구청 내 반부패 및 청렴문화 확산 강화 필요
- 남구 주민이 참여하는 명예구민감사관제 및 대형공사구민감시관제의 강화를 통하여 구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행정을 이행하여 구민의 감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는 활동 중심의 지표가 아닌 울산 남구 주민의 반부패 및 청렴 수준에 대한 평가 또는 만족도 등의 결과지표가 추가될 필요가 있음

계약심사제 운영으로 부실공사 방지 및 예산절감

1. 목표

- 부실공사 및 용역 방지
- 예산절감과 집행의 효율성 극대화

2. 사업내용

남구 본청, 보건소, 동, 의회사무국, 구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계약심사

- 각종공사(건설, 전기, 소방, 통신공사 등)
- 용역(건설기술, 학술연구, 일반용역)
- 설계변경(건설, 전기, 소방, 통신공사 등)
- 물품구매 및 제조

3. 최근 추진실적

	2017
공사	67건(예산절감 578백만원/15,470백만원, 3.74%)
용역	52건(예산절감 117백만원/ 2,975백만원, 3.93%)
설계변경	26건(예산절감 75백만원/ 5,516백만원, 1.36%)
물품구매	10건(예산절감 3백만원/ 369백만원, 0.81%)

4. 성과지표추이

- 현행 성과지표

성 과 지 표	측 정 지 표 (성과측정산식)	연도별 실적 및 목표		지표 비중 (100%)
		2017년 실적	2018년 목표	
계약심사제 운영 실적률	예산절감률 2.1% (절감액/총사업비)×100	100%	100%	100

5. 개선방안

- 계약 평가 시 계약 우선협상자 대상으로 반부패 및 청렴 수준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체계 수립 필요
- 계약 심사 시 계약 금액과 과업활동 간에 차이가 심할 경우 공모 및 연루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 부패 및 부정 행위를 조사하는 활동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 조달업체 선정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이에 성과지표 또한 부패 및 부정 행위 확인 등 결과 지향적 지표가 추가될 필요가 있음

■ 공정운영 관행 이슈 2 : 책임 있는 정치 참여

책임 있는 정치 참여를 위하여 남구청은

- 정치적 중립 등 책임 있는 정치 활동에 대해 남구청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인식 제고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이행이 필요함
- 선거 기간 중 정치적 중립 및 허위정보, 허위표시, 강요 등 금지 활동에 대한 남구청 구성원의 활동 가이드라인 정립과 책임 있는 정치활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 및 정책 수립이 필요함

책임 있는 정치 참여 이슈 현황파악 및 보완점

책임 있는 정치 참여 이슈 평가 기준	현행 사업	평가 및 보완점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이행	-	정치적 중립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을 방지하 기 위한 교육훈련이 개발되어 실행될 필요가 있음
가이드라인 및 제도/정책	- 공직감찰을 통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선거개입, 정치적 중립 훼손방지를 위한 감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2018 주요사업

공직감찰을 통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1. 목표

- 성희롱, 갑질, 선거개입 등 공무원 비리발생 취약분야 사전예방
- 사회안전과 일자리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 분야 중점 관리

2. 사업내용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6. 13. 지방선거」 대비 공무원 정치적 중립 훼손행위 감찰
 - 공무원의 성희롱, 갑질, 조직화합 저해 등 대인감찰 상시 추진
 - 지시사항 불이행, 직무태만 등 지방공무원법 위반행위 근절
 - 휴가철, 명절,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특별감찰
- 사회안전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감찰활동 전개
 - 안전 취약분야 안전감찰 실시
 - 지진·태풍 등 재난 대응체계 점검
 - 하절기, 동절기, 해빙기 등 시기별 안전점검
 - 공공시설물 하자 및 유지관리 특별점검(연 2회)
 - 시설물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공공시설물 순찰 강화(매월 운영)
 - 서민생활 안정 분야 특별점검 실시
 - 공공근로사업, 녹색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 점검
 - 빈곤층 등 취약계층 지원,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등 점검
- 감찰활동 자료 수집을 통한 특별감찰 실시
 - 언론매체, 각종 민원 등을 통한 감찰활동 자료수집 강화
 - 구정업무 및 공무원 관련 사회적 이슈에 대한 특별감찰 실시

3. 개선방안

- 울산 남구 주민들이 공직사회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강력한 감찰활동을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감찰 결과와 이에 대한 제재안 등을 구민들과 공유하여 구민 신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감찰활동을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찰 및 조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이행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공정운영 관행 이슈 3 : 공정 경쟁

책임 있는 정치참여를 위하여 남구청은

- 경쟁, 법률 준수 및 공정 경쟁의 중요성에 대한 남구청 구성원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이행 필요
- 남구청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에 관여 또는 연루 및 공모에 대한 예방을 위한 제도 및 정책 수립 필요
- 남구 내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및 유도하는 제도 및 정책 수립 필요

공정 경쟁 이슈 현황파악 및 보완점

공정 경쟁 이슈 평가 기준	현행 사업	평가 및 보완점
1. 공정경쟁 교육훈련 이행	-	공정경쟁 교육훈련 개발 및 이행 필요
2. 구청 구성원에 대한 공정경쟁 제도 및 정책	- 공정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	계약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사회적 약자 기업을 보호하고 있음
3. 남구 내 공정경쟁 지원 제도 및 정책	- 구민만족의 전통시장 조성 - 공정하고 투명한 구금고 지정	구청 권한 내에서 공정하고 균형 있는 경쟁을 지원하고 있음

2018 주요사업

구민만족의 전통시장 조성

1. 목표

- 쾌적하고 편리한 쇼핑 공간 조성
- 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특화시장 육성

2. 사업내용

- 전통시장 시설 개선 및 현대화
-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

3. 최근 추진실적

	2017
전통시장 시설 개선 및 현대화	2017년도 전통시장 시설 개선 및 현대화 사업 [사업비 1,159백만원]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	2017년도 전통시장 경영 혁신[사업비 1,019백만원]

4. 성과지표추이

• 현행 성과지표

성 과 지 표	측 정 지 표 (성과측정산식)	연도별 실적 및 목표		지표 비중 (100%)
		2017년 실적	2018년 목표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현대화	2018년 시설개선 및 현대화사업 완성도 (추진실적/8개사업)×100%	100	100	50
전통시장 경영 혁신	2018년 경영 혁신 사업완성도 (추진실적/5개사업)×100%	100	100	50

5. 개선방안

- 공정한 경쟁 제고를 위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 등 지원대상 범위 확대 필요
- 성과지표가 활동 중심이 아닌 전통시장 매출액 향상, 시장 방문객 향상 등 결과지향적 지표 추가 필요

■ 공정운영 관행 이슈 4 : 가치사슬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 촉진

가치사슬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 촉진을 위하여 남구청은

- 남구청의 파트너, 공급사 등 남구청 가치를 창출하는 사슬에 참여하는 모든 조직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장려하는 제도 수립 필요
- 남구청의 파트너, 공급사 등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수립과 이행이 필요
- 남구청 파트너, 공급사 등이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교육훈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

가치사슬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 촉진 이슈 현황파악 및 보완점

가치사슬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 촉진 이슈 평가 기준	현행 사업	평가 및 보완점
1. 사회적 책임 이행 장려 제도 수립	-	‘청렴이행 서약서’와 같이 사회적 책임 확산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남구청 조달 및 파트너 기업의 사회적 책임 촉진 필요
2. 사회적 책임 이행 모니터링 체계 수립	-	조달 및 구매 계약 지속 여부를 위하여 조달 및 구매와 관련된 조직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수립 필요
3.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	-	조달 및 구매와 관련된 조직의 사회적 책임 인 식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필요

■ 공정운영 관행 이슈 5 : 재산권 존중

재산권 존중을 위하여 남구청은

- 남구청 주민들의 재산 및 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정책 수립 필요
- 남구 공유 재산에 대한 보호와 공정한 보상 등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이 필요하고, 공유 재산 관리 시 주민의 요구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재산권 존중 이슈 현황파악 및 보완점

가치사슬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 촉진 이슈 평가 기준	현행 사업	평가 및 보완점
1. 주민재산 보호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 부동산 거래질서 선진화 구현 	주민 소유의 토지재산에 대한 공정한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과 부동산 중개거래 지도를 통하여 주민 재산에 대한 보호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2. 공유재산 관리 및 주민 니즈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남구 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수립되어 이행되고 있으며, 각 부서별로 민원 청취 후 공유재산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2018 주요사업

부동산거래질서 선진화 구현

1. 목표

- 실소유자 중심의 거래질서 확립
- 지역경제 안정화

2. 사업내용

-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도 및 점검
- 부동산실명법 운영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제도 운영
- 부동산 등기해태 조사
- 부동산 관련 법률 및 제도 적극적 홍보

3. 최근 추진실적

	2017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 자체점검 2회, 합동점검 1회 ▶ 점검대상 : 903개소 ▶ 점검결과 : 행정처분 11개 업소 부동산중개업 실명제 운영 ▶ 대형사진 제작·배부 : 182개소 ▶ 명찰 제작·배부 : 421개소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명법위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 3건, 474,582천원
모범부동산 중개업소 운영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업소 현황 : 23개소(7개소 지정취소) ※ 매년 5개소 지정(격년제 시행)
부동산 실 거래신고 위반자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거래신고 위반혐의 조사 : 144건 과태료 부과 : 55건, 19,200천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자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기해태자료 조사 : 808건 과태료 부과 : 21건, 5,038천원

4. 성과지표추이

- 현행 성과지표

성 과 지 표	측 정 지 표 (성과측정산식)	연도별 실적 및 목표		지표 비중 (100%)
		2017년 실적	2018년 목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률	중개업소지도점검률 (점검 업소수/추출 업소수)	100%	100%	50
부동산 등기해태 및 실거래신고지연행위 조사	등기해태 및 지연신고 조사율 (추출자료 조사건수/RTMS 추출건수)	100%	100%	50

5. 개선방안

-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신고의 회피수단으로 쉽게 악용될 수 있는 대물변제 계약과 채권담보양도 계약을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에 포함하여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도입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함
- 법률의 처벌규정 상 미비점을 악용하여 중개거래를 하고도 거래당사자간 직접 거래한 것으로 위장하여 거래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가격 거짓신고를 통해 세금절감으로 얻는 이익이 거짓신고가 적발되어 납부하여야 하는 과태료에 비해 수배 이상 크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고자 하는 심리가 만연되어 있음)
- 한편, 토지, 부동산 등 물적 재산권뿐만 아니라 지적 재산권, 저작권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한 존중과 보호 정책을 수립 이행할 필요가 있음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1. 목표

- 공유재산의 활용 증대를 통한 세외수입 확충
- 공유재산 관리체제 정비

2. 사업내용

-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
- 공유재산 유휴지 발굴 대부
- 보존 부적합 재산의 적극 매각 추진

3. 최근 추진실적

	2017
공유재산 관리실태 전수조사	3,111필지
대부로 수납금액	- 시유재산 : 50건 219,213천원 - 구유재산 : 14건 14,258천원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 시유재산 : 1건 38,725천원 - 구유재산 : 8건 1,910,732천원

4. 성과지표추이

성 과 지 표	측 정 지 표 (성과측정산식)	연도별 실적 및 목표		지표 비중 (100%)
		2017년 실적	2018년 목표	
공유재산 전수조사 및 유휴지 대부	• 재산 관리실태 전수 조사 건수 ※ 전년도 재산수량 3,111건 • 대부 수입금액(세외수입 목표금액 150백만원)	100%	100%	60%
보존 부적합 재산 발굴 및 매각 추진	•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금액 (세외수입 목표금액 3억)	100%	100%	40%

5. 개선방안

- 공유재산 관리 담당 인력을 1~2명으로 공유재산의 정확한 실사는 물론 방대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인사이동이 빈번하여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음에 따라 공유재산 관련 전문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함(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해서는 등기업무, 등기부상의 소유권 변동이나 권리분석, 지적도면의 해독, 각종 소송업무의 수행 등 전문지식이 필요하며, 부동산 시장분석, 감정평가, 도시계획 등 각종 법규제한의 검토, 부동산/금융 등에 관한 자산운용 및 공간계획 능력 등이 요구됨)
- 공유재산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의 의사 및 요구사항을 면밀하게 확인 후 이를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함

6. 소비자

- 소비자에 대한 남구청의 책임은 교육 및 정확한 정보 제공, 공정하고 투명하며 도움이 되는 정책 정보 및 계약 프로세스의 이용, 지속가능소비 촉진, 모두에게 접근성을 제공하고, 적절한 경우, 취약 및 불리한(disadvantaged) 자의 요구에 맞춘 행정 서비스의 설계를 포함
- 소비자라는 용어는 남구청의 행정 활동의 산출물을 사용하는 개인 및 집단을 말하며, 반드시 돈을 지불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책임은 행정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것을 포함
- 다른 조직과 같이 남구청은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으며, 남구청은 소비자의 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안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

■ 소비자 이슈 1 : 공정 마케팅 사실적이고 치우치지 않은 정보와 공정계약 관행

공정 마케팅, 사실적인 정보와 공정계약 관행을 위하여 남구청은

- 남구 주민에게 핵심정보를 누락하거나 주민을 속이고 기만 또는 불공정, 모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책임 회피성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필요
- 남구의 다양한 종교, 인종 등 다문화 특성을 고려하여 정확하고 이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

현황 파악 및 보완점

공정마케팅 사실적이고 치우치지 않은 정보와 공정계약 이슈 평가 기준	현행 사업	평가 및 보완점
1. 정확한 행정정보 제공	- 구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 - 주민과 소통하는 친숙한 공사장 추진	주요정책을 적기에 홍보하고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제도가 수립되어 있음
2. 다문화 특성을 고려한 정확하고 이해 가능한 정보 제공	-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운영을 통하여 다문화를 고려한 홍보활동과 지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2018 주요사업

구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

1. 목표

- 구정 주요정책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전파
- 차별화된 맞춤형 정보 제공
- 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기회 제공

2. 사업내용

- 보도자료 제공
- 홍보매체 활용을 통한 정보 제공
- 새로운 미디어를 통한 구정 홍보

3. 최근 추진실적

	2017
보도자료 제공 및 구청 브리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보도 2,568회, 역점시책 등 특집보도 : 55회 • 정례브리핑 : 48회, 현장브리핑 5회
홍보매체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MS문자 발송 : 34회 1,168,183명(대통령선거 안내 문자 등) • LED전광판 활용 : KTX울산역사 등 7개소 3개 분야 • 구정소식지 발행 : 4회 160,000부(분기 1회) • 신문광고 : 서울신문 등 10개사 19회 • 방송사 스포츠 광고 : ubc울산방송 등 7개사 5개 분야 • 신문사 홍보 광고 : 경상일보 등 16개사 4개 분야
뉴미디어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이스북 구정 홍보(개설일 : 2015년 3월) - 게시건수/구독 수 : 2,411건/좋아요 6,709명 • 블로그 구정 홍보(개설일 : 2016년 3월) - 포스팅 수/1일 방문자 수 : 343건/2,010명 • 문화행사 등 홍보 이벤트 : 7회(페이스북 4회, 블로그 3회)

4. 성과지표추이

성 과 지 표	측 정 지 표 (성과측정산식)	연도별 실적 및 목표		지표 비중 (100%)
		2017년 실적	2018년 목표	
신속 정확한 보도자료 제공	(보도자료 제공건수/270일×4건)×100	100%	100%	40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소식지 제작횟수/3회)×50 + (SMS문자 홍보 대상자/58,000명)×50	100%	100%	30
뉴미디어 구청홍보	(페이스북 콘텐츠 게시 건수/1,080건)×50 + (블로그 홍보콘텐츠 포스팅 건수/270건)×50	-	100%	30

5. 개선방안

- 지자체 행정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함께 가치를 창출하는 이해관계자를 정의하여 보다 나은 행정가치 창출을 위한 협력방안을 수립하여 이행할 필요가 있음
- 행정의 최종 고객인 주민의 고객만족도평가 개선을 위해 인프라, 접점에서의 서비스, 시스템과 제도 등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지표를 도출 및 정의하여 정기적인 평가와 함께 지속적인 개선으로 고객 행정 만족도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잘못된 정보 제공에 대한 신고 및 이에 대한 처리절차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
- 과정 중심의 성과지표가 아닌 구정 정보제공 및 홍보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같은 결과 지표 관리 필요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1. 목표

-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생활, 가족돌봄, 사례관리 등 다채롭고 세분화된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

2. 사업내용

- 한국생활 적응에 꼭 필요한 기본정보와 다문화 관련 최신정보를 13개 언어로 제공



- 다양한 생활정보, 교육정보 취업 및 채용정보, 다문화이해에 대한 정보 제공 과 다문화 콜센터, 국제 결혼 피해상담 등 다문화 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 제공



3. 개선방안

- 다문화지원센터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다문화지원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2010년 최상희, 김진욱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 프로그램 미참여 사유가 시간제약, 임신과 출산, 교통 불편 등으로 나타났음. 이에 인터넷 활용을 극대화한 프로그램 활성화와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증대, 교육장까지의 교통편의 제공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다문화지원센터의 일방적 서비스가 아닌 다문화가족의 자조모임을 활성화한 사회적 참여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 이슈 2 : 소비자의 보건과 안전 보호

소비자의 보건과 안전 보호를 위하여 남구청은

- 남구 주민의 일반적 생활환경에서의 안전 위협 및 재난 요소를 식별하고 식별된 요소 별로 주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건축, 토목, 도시재생, 교통 등 남구청의 다양한 행정활동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위협에 대비하여 주민 보호와 안전에 대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이행하는 것이 필요
- 일반인보다 안전 위협에 취약한 취약집단(어린이, 노인 등)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안전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사진9〉 실버 건강 프로그램 발표회

소비자의 보건과 안전 보호 이슈 현황파악 및 보완점

소비자의 보건과 안전 보호 이슈 평가 기준	현행 사업	평가 및 보완점
1. 생활환경 안전위험 및 재난 요소 식별 및 보호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안전체험관 건립공사 -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 옥동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 재난 대응의 안정적 운영기반 - CCTV 확충으로 안전도시 조성 	생활환경에서의 재난과 안전위험에 대한 식별이 이루어져 있고 식별된 사항에 따른 방안이 잘 정립되어 있음
2. 행정활동에 의한 안전위험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장 침수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추진 - 건축공사 도로변 안전 보행환경 조성 - 안전한 도시환경을 위한 건축물 지도 점검 	건축, 토목 등 행정활동에 의한 안전위험 대책이 잘 정립되어 있음
3. 취약집단 안전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망 구축 	취약집단에 대한 안전대책 잘 정립되어 이행되고 있으나 어린뿐만 아니라 고령자, 장애인 등을 위한 교통안전 정책 수립과 이행 고려 필요
국가지속가능발전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발생률 - 자연재해 피해 - 사고사망만인율 	

2018 주요사업

재난 대응의 안정적 운영기반 강화
<p>1.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장비의 고도화 • 효율적인 재난대응 <p>2. 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보용 CCTV 설치 • 재해문자전광판 설치 • 주요 장비, 부품 분해 정비 공사 • 충전재 교체

3. 최근 추진실적

	2017
삼산, 여천 배수펌프장	엔진·모터·펌프 분해정비 신정배수펌프장 펌프제어반 및 비상발전기 교체
아파트, 선암호수공원 등	재난 예·경보방송시설 보강(25개소) 재난 관측용 CCTV 추가 설치(2개소)
재난 예경보방송시설 추가 설치	7개소

4. 성과지표추이

성 과 지 표	측 정 지 표 (성과측정산식)	연도별 실적 및 목표		지표 비중 (100%)
		2017년 실적	2018년 목표	
예·경보 방송시설 및 재난관측용 CCTV 설치	재난 예·경보 방송시설 및 CCTV 7개소 (사업실적/사업계획)×100	100%	100%	30
재해문자전광판 설치	재해문자전광판 1개소 설치 (사업실적/사업계획)×100	-	100%	20
삼산, 여천 배수펌프장 엔진, 펌프 정비 공사	엔진 정비 2대 펌프 정비 3대 (사업실적/사업계획)×100	100%	100%	40
삼산, 여천 배수펌프장 쿨링타워 충진재 교체	삼산배수장 1개소 교체 여천배수장 내 2개소 교체 (사업실적/사업계획)×100	-	100%	10

5. 개선방안

- 재난 대응 후 재난관련 담당자에게는 감사라는 후폭풍에 시달리게 되어 재난부서는 근무하기 가장 꺼려하는 기피부서로 인식되는 것이 현실, 이에 재난 현장 대응자의 입장에서 신속한 재난대응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재난대응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재난대응 우선순위에 대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며,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전보 제한제를 시행하고, 기술직(전산직 및 통신직 등) 직원을 충원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의 연구에 의하면 재난관리 교육 프로그램 도입에 대하여 단체장 및 의회, 일선공무원들은 긍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자치단체장에 대한 재난관리 교육 필요성에 대하여는 긍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재난관리 교육 프로그램의 설계 및 운영 방안에 대한 마련이 요구됨
- 일반 생활환경에 대한 재난 및 안전위협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으나 산업재해에 대한 안전대책 및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와 같이 결과 중심의 지표 관리가 필요

교통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1. 목표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로 어린이 교통안전망 구축
- 대중교통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해 동형 버스승강장 확충

2. 사업내용

- 승강장 설치: 5개소
-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 2개소

3. 최근 추진실적

	2017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	- 대 상: 4개소(신정동 크로바아파트 앞, 신정동 극동스타클래스 앞, 달동 주공아파트 앞 2개소) - 내 용: 마을버스형 승강장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 대 상: 2개소(대현초등학교, 월평초등학교) - 내 용: 안전표지, 안전펜스 설치 등

4. 성과지표추이

성 과 지 표	측 정 지 표 (성과측정산식)	연도별 실적 및 목표		지표 비중 (100%)
		2017년 실적	2018년 목표	
버스승강장 교체	버스승강장 교체 개수 (실적/목표)×100	3개소	5개소	40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개소수 (실적/목표)×100	2개소	2개소	60

5. 개선방안

-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근 지자체와 근접하여 행정적으로만 분리 되어 있고 주민의 왕래나 활동에는 큰 구분이 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지자체들이 모여 독자적인 예산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인근 지자체와 교통안전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교통안전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음
- 울산 남구의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관·기업·언론·공익단체 등이 힘을 합쳐 사업을 수행하면서 울산 남구의 교통안전 대책 마련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이에 첫 번째로 울산 남구의 교통안전에 대한 사례 분석을 실시하고, 두 번째로 교통안전에 관한 매뉴얼(민·관·기업·언론·공익단체 등의 역할 정의)을 작성하며, 세 번째로 시민단체 등 교통안전 실행팀과 교통안전 간담회 진행과 함께 교통안전에 관한 선포식을 시작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 이슈 3 : 지속가능소비

지속가능소비를 위하여 남구청은

- 자원의 재활용과 효율적인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캠페인을 개발하여 보급시킬 필요가 있음.
- 울산광역시 남구 내 조직 및 단체의 제품 및 서비스가 보건 및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 또는 최소화하고 덜 해로우며 더 효율적으로 제공되도록 지원 및 유도하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울산광역시 남구 내 조직 및 단체는 원산지 표시, 에너지 효율성, 유전자 변형 또는 나노입자 이용 등 원자재 정보, 동물복지 관련 정보 제공 등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 제공과 환경개선과 에너지 효율 심사 같은 검증제도 및 라벨링 제도 등을 통한 환경 및 에너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지속가능소비 이슈 현황파악 및 보완점

지속가능소비 이슈 평가 기준	현행 사업	평가 및 보완점
1. 지속가능소비 관련 인식제고 캠페인 개발 및 보급	- 재활용 종말품 발생억제 추진대책	재활용 종말품 발생억제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이행하고 있음
2. 보건 및 환경에 대한 제도 정책 마련	- 비유가성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계획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울산자원센터 설립 운영으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수립 및 이행을 하고 있음
3. 환경개선 및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정보 제공	- 스마트 커뮤니티 구축을 통한 에너지 도시 조성	저탄소 고효율 친환경에너지 산업도시 구현과 지속적이고 자립 가능한 에너지 도시 구축을 위한 인프라 설치 및 운영을 계획하여 이행준비단계에 있음
국가지속가능발전 지표	- 생활 및 일반폐기물 발생량 - 폐기물 재활용률	

2018 주요사업

재활용 종말품 발생억제 추진대책

1. 목표

- 재활용품 선별 후 발생하는 종말품을 발생억제 추진대책에 따라 발생량을 줄이고자 함

2. 사업내용

- 운영방법 : 민간위탁
- 위탁업체 : 대영기업(대표 김영호)
- 소재지 : 남구 여천로 174(여천동)
- 위탁기간 : 2017. 3. 1. ~ 2018. 12. 31(1년 8월)
- 위탁비 : 2018년(354,099,490원)

3. 추진계획

- 재활용 자원의 체계적 관리
 - 소형폐가전 수거함 관리 : 258개소
 - 폐전자, 폐형광등, 폐식용유 수거함 관리 : 668개소
 - 재활용 사업장 관리
 - 다량배출자 재활용품 분리보관 지도·점검 : 130개소
 - 재활용업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 지도·점검 : 37개소
 - 과대포장 및 1회용품 사용규제업소 관리 : 12,162개소
- 분리배출 활성화 유도
 - 재활용 가능자원 교환창구 운영
 - 폐휴대폰, 폐컴퓨터, 폐전자, 폐형광등, 우유팩
 - 홍보물 배부, 캠페인 추진 등
- 자원재활용 주민홍보 실시
 - 태화강 나눔장터 운영 : 4~10월(월 2회)
 -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요원 운영 : 4~11월
 - 재활용 홍보교육 및 선별장 현장견학 실시 : 3~11월

4. 개선방안

- 수거·운반과정에서 압착하여 상차함에 따라 재활용품이 쓰레기로 전락하고, 주민의식 부족으로 재활용품이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되어 종말품 과다 발생함에 따라 자원낭비 및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등에 대한 주민 인식전환 지속적인 정보 제공 필요
- 한편 재활용품 수거 및 운반 시 일반 폐기물과 혼합되는지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병류를 그물망 재활용품과 별도로 수거 하는 등 효율적인 분리수거를 위한 수거체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스마트 커뮤니티 구축을 통한 에너지도시 조성

1. 목표

-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에너지 보급 확대와 발굴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분야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인 시책 추진 등 친환경 에너지도시 기반 조성에 활용하고자 함
- 신청부의 에너지정책에 부응하고,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기술의 확대·보급과 투자유치, 에너지빈곤층의 지원을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2. 세부 실행계획

전략	번호	단위사업	kWh(환산) 5년간	tCO ₂ 5년간	2030년 총사업비	5개년 구사업비
1. 에너지 문화도시	①	울산 남구 에너지센터 설립·운영	-	-	3,500	2,000
	②	에너지설계사·복지사 양성(일자리 창출)	-	-	600	100
	③	에너지 교육과 체험의 기후학교	-	-	975	125
	④	에너지테마파크	7,300	3.30	1,300	500
	⑤	에너지 생산 및 전환 거리	3,066	1.38	1,620	270
	⑥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구축	-	-	6,500	1,000
	⑦	울산 남구민 에너지협동조합	-	-	13,100	100
	⑧	에너지복지 구민기금 조성	-	-	3,000	100
2. 에너지 효 율도시	①	중소기업 에너지 컨설팅 지원단	-	-	1,170	50
	②	주택에너지효율화(WAP)	270,000	122	3,000	200
	③	건물에너지효율화 및 효율등급인증	27,000,000	12,196	29,000	500
					7,800	1,500
	④	AMI 및 홈 IoT 보급	2,700,000	1,220	14,190	900
3. 에너지 생 산도시	⑤	에너지 구민 인증제 도입	-	-	200	100
	①	태양광 대여사업 (사회적 기업) 500kw/년	3,193,750	1,443	13,000	625
	②	주택 및 상가 햇빛발전	가정 : 300kw/년	866	7,800	600
			상업 : 100kw/년	289	2,600	200
	③	유흥시설 태양광 발전사업 : 500kw/년	3,193,750	1,443	13,000	1,250
	④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 200kw/년	1,290,000	577	10,400	800
계	⑤	Sun Roof Belt 구축사업 : 400kw/년	2,555,000	1,154	10,400	0
	18		42,767,866	19,313	143,155	10,920

■ 소비자 이슈 4 : 소비자 서비스, 지원 및 불만과 분쟁 해결

소비자 서비스, 지원 및 불만과 분쟁 해결을 위하여 남구청은

- 남구청의 행정고객들이 행정서비스 불만을 제기하지 않도록 고객만족 행정을 통한 고객 불만을 예방하는 제도 및 시스템을 수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고객들이 불만을 제기할 경우 이를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및 시스템을 수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행정활동으로 인한 고객 피해 발생 시 이를 해결하거나 구제 받기 위한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이를 고객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

소비자 서비스, 지원 및 불만과 분쟁 해결 이슈 현황파악 및 보완점

고용 이슈 평가 기준	현행 사업	평가 및 보완점
1.고객만족 행정을 통한 고객 불만 예방 제도 및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뜻한 지원과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 추진 - 홈페이지 개편 및 통폐합 - 고객이 감동하는 친절 남구 만들기 - [맞춤형 원스톱] 가족관계등록 서비스 - OK생활민원 기동대 운영 	고객 불만 예방 차원에서 여러 부서의 다양한 고객 불만 예방 제도 및 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음
2.고객불만 대응 제도 및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행정 제도개선 계획수립 및 추진 - 생활민원처리 종합 계획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 민원 및 전자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민원에 대한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음
3.행정활동 피해에 대한 구제 프로세스 마련 및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보상법에 의한 처리 	행정활동에 의한 주민의 피해 시 국가보상법을 기반으로 한 구제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국가지속가능발전 지표	- 온라인 신청가능 민원종류	

2018 주요사업

따뜻한 지원과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 추진

1. 목표

- 주민과의 소통행정 실현
- 주민 단체 역량강화

2. 사업내용

-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 실현
 - 올림픽 관람 지원
 - 구민대상 포상 추진
- 주민단체 지원을 통한 역량 강화

3. 최근 추진실적

	2017
소통을 통한 열린 자치행정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과의 신년인사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장소 : 2017. 1. 9.(월) ~ 1. 12.(목) / 14개동 주민센터 - 참석인원 : 동별 70명 - 주요내용 : 주민과의 신년인사 및 2017년 구정주요 업무 설명
협력단체 운영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운동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추진: 92개 단체 479백만원 • 국민운동 단체 역량강화 교육 : 3개 단체 349명 • 적극적이고 성실한 회원 활동 : 9개 단체 2,625명

4. 성과지표추이

성 과 지 표	측 정 지 표 (성과측정산식)	연도별 실적 및 목표		지표 비중 (100%)
		2017년 실적	2018년 목표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 실현	소통행정 실적 : (운영실적/운영목표)×100	4개 사업 (100%)	3개 사업 (100%)	50
무인환경관리 시스템 운영	사회단체 활동 지원율 : (지원액/지원목표액)×100	475,616천원 (100%)	476,826천원 (100%)	50

5. 개선방안

-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회 등을 주관할 수 있는 ‘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의 참여 기구와 집행부의 대표와 주민의 대표가 참여하여 수렴된 주민들의 의견을 예산으로 반영하기 위해 심의·확정하는 ‘민관협의체’와 같은 참여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러한 지원에 관한 남구의 적극적인 활동의 심의, 조정하는 기수로서 독립 위원회 조직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한편 사회단체 지원을 위한 간접지원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며, 단체 활동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통신요금 지원, 경영지원 등에 대한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과정 중심의 지표 외 소통행정과 지원에 대한 만족 수준을 확인하여 사업의 개선을 이룰 수 있는 결과중심의 지표 관리 필요

■ 소비자 이슈 5 : 소비자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

소비자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를 위하여 남구청은

- 행정활동을 위한 남구청 주민 개인 데이터의 수집과 사용은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자발적인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
- 주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합한 보안수단을 도입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실행할 전문가를 보유하고 전문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주민 개인 데이터 활용 및 보안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며, 주민이 자신의 데이터 존재 유무 확인 및 데이터의 주된 용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제공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소비자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 이슈 현황파악 및 보완점

소비자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 이슈 평가 기준	현행 사업	평가 및 보완점
1. 개인 데이터 수집 및 사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및 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동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적합한 보안 수단 도입	- 사이버 침해 대응센터 구축	사이버 침해 대응센터는 통합로그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 APT(지능형지속위협, Advanced Persistent Threat)를 포함한 다양한 사이버 침해를 대비하여 실시간 탐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3. 정보보안 정책 공개 및 개인 정보 용도 설정 권한제공	- 개인정보 파일 일제 정비계획	개인정보 수집은 최소한의 필요에 의해서만 수집하며, 정보 이용 후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즉시 파기

2018 주요사업

사이버 침해 대응센터 구축
1.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킹 바이러스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조치 • 구민의 정보자산 보호

2. 사업내용

- 통합로그관리 시스템
- 연계시스템 구축

3. 최근 추진실적

- 정보통신 보안장비 설치 및 예산확보

4. 성과지표추이

성 과 지 표	측 정 지 표 (성과측정산식)	연도별 실적 및 목표		지표 비중 (100%)
		2017년 실적	2018년 목표	
통합로그관리시스템	사업추진율 (실적공정/계획공정)×100	-	100%	80
연계시스템 구축	사업추진율 (실적공정/계획공정)×100	-	100%	20

5. 개선방안

-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이버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엔드포인트 위협 탐지 및 대응으로의 보안 패러다임 변화와 사이버 공격을 예측하기 위한 유기적인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함
- 가상화폐 채굴형 악성코드, 랜섬웨어 등 주요 사이버공격 방법 및 동향을 분석하고, 실제 지자체 및 민간 침해 사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사이버위협 대응 및 보안관리 수준 제고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 수립 필요
- 사이버 침해 건수 및 방지율 등 성과 결과중심 지표 관리 필요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및 처리방침 개정사항

1. 개요

- 개인정보 수집 동의절차 변경 사항 등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17.2.14.수립)」의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고자 함.

2. 개정내용 신구비교

내부관리계획 [시행 2017.2.14., 일부개정]	내부관리계획 [시행 2018.2.23., 일부개정]
(신 설)	7.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휘·감독 하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신 설)	제6조(개인정보 보호조직 구성 및 운영)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수행하고 유사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조직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운영한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pre> graph TD A[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B[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정보화 부서)] A --- C[분야별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보유부서)] A --- D[분야별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보유부서)] A --- E[분야별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보유부서)] C --- F[개인정보취급자] D --- G[개인정보취급자] E --- H[개인정보취급자] </pre> </div>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역할과 책임)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6. (생략)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역할과 책임) ①----- ----- ----- -----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7. (생략) ② ~ ④ (생략)	10.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장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안전 조치	제4장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
제12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① 분야별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① 분야별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접속기록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해당 접속기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 ② (생략)	제2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분야별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내용 및 명확한 표시방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참고)
③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개인정보 침해대응) ① ~ ⑦ (생략)	제27조(개인정보 침해대응) ① ~ ⑦ (현행과 같음)

■ 소비자 이슈 6 : 필수서비스에 대한 접근

필수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위하여 남구청은

- 필수 서비스에 대한 비용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서비스에 대한 일괄적인 중단을 하지 않을 필요가 있으며, 빈곤 및 취약계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요금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필수서비스 이슈 현황파악 및 보완점

필수서비스 이슈 평가 기준	현행 사업	평가 및 보완점
필수서비스 중단 여부 및 취약 집단	- 공공요금 긴급복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국가지속가능발전 지표	-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 소비자 이슈 7 : 교육과 인식

교육과 인식을 위하여 남구청은

-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안전 교육, 행정 피해 발생 시 분쟁 해결 및 구제를 위한 방법 및 정보 제공, 원자재 및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교육, 재활용 및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등에 대한 교육 및 캠페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필수서비스 이슈 현황파악 및 보완점

교육과 인식 이슈 평가 기준	현행 사업	평가 및 보완점
소비자 이슈에 대한 인식제고에 대한 교육 개발 국가지속가능발전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연과 함께하는 건강한 삶 -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 관리 - 음식문화 개선 사업 적극 추진 - 식중독 제고, 선제적 예방관리 -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소비자 이슈 전반에 대한 인식제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2018 주요사업

금연과 함께하는 건강한 삶

1. 목표

- 금연성공률 제고
- 금연구역 지도 점검 확대

2. 사업내용

- 금연클리닉 운영
- 금연 환경조성
- 금연교육 및 홍보

3. 최근 추진실적

	2017
6개월 금연 성공률	(6개월 금연성공자 1,123명/6개월 경과자 2,426명) × 100 = 46.3%
금연구역 지도/점검률	(금연구역 지도·점검 건 수 15,629건/목표 14,300건) × 100 = 109.3%

4. 성과지표추이

성 과 지 표	측 정 지 표 (성과측정산식)	연도별 실적 및 목표		지표 비중 (100%)
		2017년 실적	2018년 목표	
6개월 금연 성공률	(6개월 금연성공자/6개월 경과자) × 100	46.3%	47.0%	50
금연구역 지도·점검률	(금연구역 지도·점검 건 수/목표 16,200건) × 100	109.2%	100.0%	50

5. 개선방안

- 보건분야와 어린이 등 일부 취약집단에 대한 인식제고뿐만 아니라 소비자 이슈 전반에 관한 다양한 인식제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필요
- 주민복지, 다문화인식 개선, 남구 환경개선 등 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분야를 정립하고 교육 요구사항을 정량 및 정성적으로 분석하여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

7.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

■ 이슈 1: 지역사회 참여

남구는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와 관련한 중요한 정책이나 사업을 결정할 때,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다양한 그룹과 협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취약집단이나 차별받는 그룹, 지역사회의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는 소수집단,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이나 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구성원 등 대표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그룹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선택과 권리가 확대되고 존중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취약집단이나 차별받는 그룹 등 대표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소수집단의 선택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토착민을 포함한 다수집단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음
- 울산 남구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지역주민조직 등 다양한 조직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는 과정에 뇌물수수 또는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업무와 관련된 조직의 대표자 및 구성원과 투명한 관계가 유지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지역주민이 지역사회 서비스 발전을 위해 남구청의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지역주민이 정책 형성과 발전 프로그램의 수립, 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지역사회 참여 이슈 현황 및 보완점

지역사회 참여 평가 기준	현행 사업	평가 및 보완점
정책 결정 시, 대표적인 지역사회 그룹과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따뜻한 지원과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 추진 현장중심의 살아있는 정책개발 민간전문가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위원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그룹과의 협력 체계를 잘 구축하고 있음 분야별로 다양한 민관협력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다소 형식적인 협력에 그치는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실질적인 협력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뇌물수수 또는 부적절한 영향력 없이, 업무와 관련된 조직 및 정치 대표자와 투명한 관계 유지(반부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른 감사로 조직 역량 강화 실효성 있는 예방적 감사운영 투명한 지방보조금 관리운영 소통과 공감의 감사행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처리 과정에 부적절한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감시 및 확인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조직운영과 관련하여 상당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
지역주민의 참여장려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구 구민대상 제정 기쁨이 넘치는 자원봉사 문화 확산 주민주도형 Happy 문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소수의 주민이 참여를 독점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2018 주요사업

민간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위원회 운영

1. 목표

- 남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계획 수립과 평가, 주요 용역계약 체결 등 주요 업무에 대한 지역주민과 민간 전문가의 참여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 구정 운영에 지역주민의 욕구가 반영되고, 민간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2. 사업내용

- 모든 실국의 주요업무와 관련된 위원회에 지역주민과 민간위원의 참여를 광범위하게 보장함
- 실국별 업무와 관련된 주요 결정사항은 담당공무원과 지역주민,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한 후 각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친 후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지역주민 및 민간위원과 주요 사업의 계획수립 및 추진현황을 공유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하나의 독립된 사업의 형태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남구청의 업무 전반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이 남구청의 업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 최근 추진실적

- 본 사업은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의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 사업 실적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함. 위원회에 따라 위원의 임기는 1년~2년까지 다양하며, 실국별로 다양한 위원회를 두고 있음
- 공무원과 민간위원의 구성인원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음

	계	당연직(공무원)			위촉직(민간위원)		
		남	여	계	남	여	계
기획예산실	190	35	1	36	93	61	154
감사관	11	8	0	8	3	0	3
행복기획단	76	13	1	14	50	12	62
총무과	72	39	6	45	19	8	27
자치행정과	65	17	1	18	27	20	47
민원여권과	15	9	0	9	3	3	6
고래관광개발과	25	3	1	4	16	5	21
세무과(1과 & 2과)	34	14	0	14	11	9	20
복지지원과	56	8	9	17	23	16	39
어르신장애인복지과	30	9	1	10	9	11	20
여성가족과	129	27	0	27	46	56	102
일자리정책과	26	6	0	6	14	6	20
위생과	8	2	1	3	2	3	5
안전총괄과	101	29	0	29	64	8	72
건설과	62	14	0	14	39	9	48
공원녹지과	9	3	0	3	4	2	6
교통행정과	33	4	1	5	5	23	28
건축허가과	80	10	0	10	53	17	70
도시창조과	50	8	0	8	32	10	42
토지정보과	59	27	1	28	17	14	31
보건소	21	1	2	3	8	10	18
합 계	2,208	559	45	604	1,041	563	1,604

4. 개선방안

- 형식적으로는 지역주민과 민간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하고 있으나, 각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자문과 심의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 주요결정은 공무원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민간위원들은 형식적인 심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보다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기쁨이 넘치는 자원봉사 문화 확산

1. 목표

- 자원봉사의 환경 변화에 따른 자원봉사 활성화 인프라 구축
- 자원봉사 자율적 참여 확대로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서비스 증대 기여

2. 사업내용

- 자원봉사활성화지원사업
자원봉사자 교육(기초과정, 전문과정)
자원봉사박람회 개최, 통합자원봉사의 날 운영
- 자원봉사단체 지원
남구자원봉사센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원
여성자원봉사회 활동 지원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 사업
행복공동체 아파트봉사단 운영
공무원 및 전문봉사단 운영
- 자원봉사자 사기양양 시책 추진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확대 운영
자원봉사자 대회, 우수자원봉사자 표창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및 자원봉사리더 전문교육 실시

3. 최근 추진실적

사 업 명	내 용
자원봉사활성화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자 교육 실시: 42회 2,487명 • 해피남구자원봉사박람회 개최: 1회, 참석자 1,000명 • 통합자원봉사의 날 개최: 1회, 참석자 444명
자원봉사단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자원봉사회 밀반찬 지원사업 지원: 3회, 90명 • 우수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 7개팀 • 가족봉사단 운영: 9회, 598명 • 청소년 자원봉사단 운영: 11회, 820명 • 기업체 봉사활동: 11회, 775명 • 공무원 자원봉사 운영: 40개 부서, 80회, 1,204명 • 아파트 봉사단: 2개소, 40명
자원봉사자 사기양양시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자증 발급: 신규 6,771명(등록인원: 86,920명) • 우수자원봉사자 표창: 42명 •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운영: 258개소 • 자원봉사자 리더 워크숍 개최: 1회, 75명 참석 • 자원봉사자 대회 개최: 2회, 950명 참석 •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21,055명

4. 개선방안

- 자원봉사활동 내용 및 대상자의 중복 및 누락 방지 방안 모색 필요
- 일회성 자원봉사활동을 지양하고, 정기적·지속적 봉사활동 강화
- 유급자원봉사활동의 확대를 지양하고,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등 사기양양시책 확대

■ 이슈 2: 교육 및 문화

- 지역 고유의 문화를 보존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인 동시에 사회와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남구청은 다음과 같은 활동의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 모든 수준의 교육을 촉진하고 지원하며, 교육의 질은 물론 접근성 향상, 토착지식의 촉진, 문맹퇴치 활동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 특히, 취약집단과 차별받는 집단의 학습기회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오랜 기간 동안 불이익을 받았던 집단의 문화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인권 교육 촉진 및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함
-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조직을 운영해야 함

교육 및 문화 이슈 현황 및 보완점

교육 및 문화 평가 기준	현행 사업	평가 및 보완점
모든 수준의 교육 촉진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움을 통한 창의적 인재 육성 • 오늘 하루, 도서관에서 놀자! • 배우는 즐거움, 보람으로 성장하는 평생학습 • 책으로 소통하며 미래를 여는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학전아동과 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 있으며, 도서관을 거점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 모두에게 적절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음
취약집단에 대한 학습기회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림스타트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지만, 장애가 있는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문화활동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나는 변화 즐거운 구립교향악단 • 문화로 하나 되는 즐거운 축제 • 지역문화의 자생적 기반 조성 • 고객맞춤형 체육·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 「2018 울산고래축제」 개최 • 장생포 예술 창작소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 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축제와 인프라를 잘 구축하고 있음 •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축제는 지역의 문화적 전통을 계승하고, 다양한 문화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실적보다는 현실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일회성 행사보다는 일상적인 문화 활동을 촉진하는 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인권 교육 촉진 및 인식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없는 공정사회를 위한 성평등 사회 실현 • 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내실화 • 안전하고 건강한 아동성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아동 등 주요 집단의 인권에 대한 인식제고 노력은 활성화 되어 있지만, 보편적인 인권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은 제한적임
인권 교육 촉진 및 인식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수군 역사문화의 요람 개운포성 정비 • 신화예술인촌 붐업 시키다 • 아트스테이 문화 변용, 장생포 예술 르네상스 실현 • 태화강 동굴피아 시설 개선사업 • 장생포 새뜰마을 사업 • 장생옛길 복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산을 단순히 보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보존과 활성화의 적절한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음

2018 주요사업

배우는 즐거움, 보람으로 성장하는 평생학습

1. 목표

- 평균수명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
- 맞춤형 평생교육 실시로 행복남구 구현

2. 사업내용

- 남구 한마음대학
 - 교육기간: 3월 ~ 11월
 - 교육대상: 남구 주민
 - 사업내용: 건강, 인문,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 초청 소양 교육

- 평생학습동아리지원
 - 교육기간: 4월 ~ 11월
 - 지원대상: 성인 10인 이상, 남구민 7인이상으로 구성된 학습동아리
 - 사업내용: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 지원
- 좋은 아버지 교실
 - 교육기간: 3월 ~ 11월
 - 교육대상: 자녀를 둔 아버지
 - 사업내용: 아버지 행복테라피, 워킹맘 & 워킹대디 부모교육, 부부 행복교육, 붕어빵 가족프로그램, 남성 프로그램
- 배달강좌
 - 교육기간: 10월 ~ 11월
 - 교육대상: 5인 이상의 학습모임
 - 사업내용: 공간 확보가 가능한 학습모임을 대상으로 강사 파견

3. 최근 (2017년) 추진실적

구분	운영기간(횟수)	참여인원
계	연 중	2,957명
남구 한마음대학	3월~11월(8회)	2,000명
평생학습동아리지원	4월~11월	200명
좋은 아버지 교실	4월~12월(13회)	582명
배 달 강 좌	10월~11월	175명

4. 성과지표추이

성 과 지 표	측 정 지 표 (성과측정산식)	연도별 실적 및 목표		지표 비중 (100%)
		2017년 실적	2018년 목표	
계	세부사업의 평균 성과목표 달성률	120%	100%	100
남구 한마음대학 (운영계획: 8회)	(운영횟수/운영계획)×100	100%	100%	25
평생학습동아리지원 (참여계획인원: 180명)	(참여인원/참여계획인원)×100	110%	100%	25
좋은 아버지 교실 (운영계획: 10회)	(운영횟수/운영계획)×100	130%	100%	25
배 달 강 좌 (참여계획인원: 124명)	(참여인원/참여계획인원)×100	140%	100%	25

5. 개선방안

- 강좌의 세부 프로그램을 결정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욕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정기적인 욕구조사와 진행된 사업에 대한 강의만족도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전단지과 현수막은 물론, 홈페이지와 SNS 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강좌 및 동아리 활동의 질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교육과 봉사활동을 연계함으로써 교육의 성과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아트스테이 문화 변용, 장생포 예술 르네상스 실현

1. 목표

- 장생포를 문화, 예술, 창작활동을 위한 복합문화 거점공간으로 활용
- 장생포 문화예술 르네상스 시대를 열고 확장시켜 남구문화를 육성

2. 사업내용

- 장생포 아트스테이 운영
 - 오픈 스튜디오: 500여명 참여
 - 입주작가 창작 지원: 6명 3~5개월
 - 작은 음악회, 작품 전시회 개최: 2회
- 창작 프로그램 지원
 - 아트캠핑: 아트스테이 및 장생포 홍보, 50여명
 - 문화인 및 문화단체 초청 특별프로그램 운영: 10개 단체 및 동아리
- 지역주민과 관광객 연계
 - 명사초청 인문학 콘서트: 3회
 - 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3. 최근 추진실적

- 장생포 창작스튜디오 '장생포 고래로 131' 설치
- 레지던시 공간 및 갤러리 조성
- 예술가 레지던시 운영: 8명(1기 4명, 2기 4명)
- 입주작가 발표전 개최
- 전시기획: 장생포마을주민 100인 인물전, 갤러리 오픈 지역자가 초대전 개최

4. 성과지표추이

성 과 지 표	측 정 지 표 (성과측정산식)	연도별 실적 및 목표		지표 비중 (100%)
		2017년 실적	2018년 목표	
계				100
장생포 아트스테이 운영 (입주작가창작지원 6명)	(운영실적/목표실적)×100	-	100%	40
창작 프로그램 지원 (특별프로그램운영 1회)	(운영실적/목표실적)×100	-	100%	30
지역주민과 관광객 연계 (골목길조성 1개소)	(운영실적/목표실적)×100	-	100%	30

5. 개선방안

- 아트스테이와 예술가 창작 프로그램 지원 등 인적·물적 인프라 강화 활동은 활성화 되어 있지만, 이러한 활동이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정에 대한 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에 대한 관심은 부족함
- 실적위주의 평가보다는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에 대한 관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스토리텔링을 통해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문화·관광사업과 연계를 통해 경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지역의 예술가, 특히 취약계층 예술가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 선정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 이슈 3: 고용 창출 및 기능 개발

남구는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빈곤 감소 및 사회발전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야 함

- 정책결정이 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경제적으로 실행가능하다면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빈곤 완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기술 선택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실행가능하다면 고용기회를 극대화하는 기술을 선택할 필요가 있음
- 임시 근로 방식을 이용하기보다는 가능한 직접 고용 방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 내에 기능개발 프로그램이 부족할 경우, 지역사회 내 다른 조직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기능개발 프로그램 개발을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함
- 고용 및 역량구축에 대해 취약한 집단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고용 창출에 필요한 프레임워크 조건의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함

고용창출 및 기능개발 이슈 현황 및 보완점

고용 창출 및 기능 개발 평가 기준	현행 사업	평가 및 보완점
고용창출을 통한 빈곤완화 및 고용창출효과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 일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강화 • 저소득 장애인 자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 특히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직접고용 강화 (임시근로방식 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적 공공일자리 창출 만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뿐 아니라 공공 일자리에 직접 고용하는 노력도 강화하고 있음
기능개발프로그램 운영 (인턴십,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능 인증 제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용업 영업주 해외 선진기술 견학 • 일반음식점 영업주 음식문화 견학 •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개발이 필요한 전문직,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기술 연수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외유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사업의 질 관리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다른 조직과 파트너십을 통한 기능개발 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구 장애인 행복일자리 지원센터 건립 • 지역공동체 행복을 위한 창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과 저소득 계층, 지역의 공동체를 지원하는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있음

2018 주요사업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1. 목표

- 일자리 아이디어 발굴 및 전파
-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 공모 추진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2. 사업내용

-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 개최기간: 2018년 7월
 - 사업내용: 지역에서 추진가능한 공동체 등 일자리 창출관련 창업 아이디어 공모
 - 시상내역: 총 5명 500만원(최우수1명 200, 우수2명 100, 장려2명 50)
 - 사업화 지원: 원스탑 기업지원 시스템 연계, 우수 아이디어 전파, 남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큐베이팅
- 일자리 창출 국제 심포지엄
 - 개최시기: 2018년 4월
 - 수행기관: 울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사업내용: 일자리 창출 전략모색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 추진기간: 2018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
 - 공모내용: VR콘텐츠 허브 구축사업 등 3개 사업
- 사회공헌활동 일자리 지원사업
 - 추진기간: 2017년 12월 ~ 2018년 12월
 - 사업내용: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공모
 - 공모내용: 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이 비영리기관 등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3. 최근 (2017년) 추진실적

구분	투입 예산(천원)	취·창업 인원
계	198,357	40명
VR 콘텐츠 허브 구축	108,000	20명
비계(죽장, 발판)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사업	43,812	16명
울산 대나무를 활용한 죽공예가 양성사업	46,545	4명

4. 성과지표추이

• 현행 성과지표

성 과 지 표	측 정 지 표 (성과측정산식)	연도별 실적 및 목표(%)		지표 비중 (100%)
		2017년 실적	2018년 목표	
계				100
일자리 아이디어 발굴건수	(발굴건수/목표건수)×100 목표건수: 5건	-	100	50
지역산업맞춤형 취·창업인원	(취업인원/목표인원)×100 목표인원: 50명	100	100	25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취·창업인원	(취업인원/목표인원)×100 목표인원: 50명	-	100	25

5. 개선방안

- 적극적인 사업 홍보를 통한 공모 신청건수 증대
- 자유로운 공모 방식과 기획 공모 방식을 함께 운영: 기업과 구직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사업내용을 기획 후 운영주체를 공모 방식으로 선정

■ 이슈 4: 기술 개발 및 기술접근성

남구청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술 개발 및 기술에 대한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야 함

- 지역사회의 사회문제와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다면, 해당 지식 및 기술에 대한 지역사회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잠재력 있는 향토지식과 전통지식, 전통기술의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지역사회의 파트너와 과학 및 기술 개발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 또는 연구 실험실 같은 조직과 파트너십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다면 기술 이전 및 확산을 지원하는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기술 개발 및 기술접근성 이슈 현황 및 보완점

기술 개발 및 기술접근성 평가 기준	현행 사업	평가 및 보완점
혁신적인 기술 개발 장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구 행복 에너지센터 설치 운영 • 「수암한우야시장」 공공스마트 WiFi 구축 •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세미나, 토론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 확대, 공공 WiFi망 구축 등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는 기술개발 및 적용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잠재력 있는 전통(항토) 지식과 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래빵 개발 및 상품화 지원 • 고래연구소/고래박물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래도시’라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특산물 개발을 지원하고 있음 • 고래에 관한 전문지식 강화를 위한 연구소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대학과의 파트너십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대학교, UNIST 등 지역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공동 연구 사업이 활성화 되어 있음

2018 주요사업

남구 행복 에너지센터 설치 및 운영

1. 목표

- 남구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 계획 수립 및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사업 추진
-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활용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자립도 향상

2. 사업내용

- 기본사업
 - 신재생에너지 교육 및 홍보
 - 신재생에너지 활용 컨설팅
 - 에너지 절약 캠페인
- 시책사업
 - 에너지 설계사 운영: 에너지 절약 선도 및 교육 실시
 - 기후학교 운영

- 최근 추진실적(2017년)
 - 에너지 센터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 에너지 계획 수립

3. 최근 (2017년) 추진실적

- 에너지 센터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 에너지 계획 수립

4. 성과지표추이

- 현행 성과지표

성 과 지 표	측 정 지 표 (성과측정산식)		연도별 실적 및 목표(%)		지표 비중 (100%)
			2017년 실적	2018년 목표	
계					100
남구 행복에너지센터 설치	실시설계 용역	실시여부	-	100	50
	리모델링	실시여부			
	조례 제정	제정 여부(20%)	-	100	50
남구 행복에너지센터 운영	센터직원 채용	(채용인원/목표인원) × 20%			
	에너지설계사 모집 (목표: 7명)	(모집인원/목표인원) × 20%			
	기후학교 운영 (목표: 700명)	(참여인원/목표인원) × 40%			

5. 개선방안

- 센터 설치지역 선정 시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해야 함
- 지역주민의 욕구를 고려하여 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센터의 추진사업 결정 등 운영에 대한 결정과정에 지역주민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참여 통로를 확보해야 함

■ 이슈 5: 부 및 소득 창출

남구는 지역 경제의 발전 및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야 함

- 지역사회의 기존 경제 활동의 다양성을 활발히 하는 적절한 이니셔티브를 지원해야 함
- 가능한 지역 공급자로부터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고, 지역 공급자의 발전을 지원하는 활동을 강화해야 함
- 생산성 향상, 기업가 정신을 고취함에 있어 지역사회 구성원, 특히 사회적으로 불리하고 취약한 그룹을 돕는 프로그램 및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지역사회 조직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조달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조직 및 개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함



〈사진10〉 지역 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견 수렴

부 및 소득창출 이슈 현황 및 보완점

부 및 소득 창출 평가 기준	현행 사업	평가 및 보완점
지역사회의 다양한 경제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시장 발전 지원 강화 • 산업 및 의료관광 특화사업 추진 •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운영 활성화 • 고래문화특구 모노레일 건립 • 어린이고래테마파크 건립 • 장생포고래로 워터프론트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시장 활성화, 관광산업 및 의료관광 활성화 등 제조업 중심의 지역경제를 다각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관광인프라 확대를 통해 새로운 시장의 개척을 지원하는 등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지역 공급자 강화 및 발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 입찰 시 공급자 지역제한 • 농업생산성 증대 농자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물품 구매 및 용역 사업 추진 시 지역의 공급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음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및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 계층 및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있음
지역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조직 및 개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농업체험공간 및 도시농업 육성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및 지역의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되는 기업과 개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실제 고용 창출 효과에 대한 점검을 통해 효율성 및 효과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2018 주요사업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운영 활성화

1. 목표

- 고래문화특구 인프라 확충 및 운영활성화로 고래도시 정체성 확보
- 고래테마 관광도시 브랜드 정착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2. 사업내용

- JSP웰리키즈랜드 및 모노레일 도입으로 관광활성화 도모
-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관광객 편의 제공
- 융복합 콘텐츠 유지관리
- '내손안의 장생포' 앱 운영관리
- 고래문화특구 시설물·조형물 유지관리
- 고래문화특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3. 최근 (2017년) 추진실적

- 고래문화특구 시설물 및 조형물 유지관리
 - 수시 유지보수 및 분기별 정기 대청소 실시
- 고래문화특구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 관리
- 특구 활성화를 위한 대안 모색
 - 모노레일 도입 타당성 검토
 -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방안 모색

4. 성과지표추이

성 과 지 표	측 정 지 표 (성과측정산식)	연도별 실적 및 목표(%)		지표 비중 (100%)
		2017년 실적	2018년 목표	
특구지역 관광객 증가율	(2018년 유료 방문객 수/ 2017년 유료 방문객 수)×100%	100 (98만명)	110 (108만명)	100

5. 개선방안

- 고래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계 관광상품 개발
- 고래축제 등 지역축제와 연계한 홍보 및 관광객 유치활동 강화

산업 및 의료관광 특화사업 추진

1. 목표

- 의료관광 특화사업 추진으로 의료관광의 수도권 편중현상 해소
- 의료관광과 연계한 관광산업 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2. 사업내용

- 의료, 기업연수 프로그램 운영(몽골, 카자흐스탄, 중국 등 대상)
- 해외마케팅을 위한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
- 의료관광 해외 홍보 설명회 및 해외 팸투어 추진

3. 최근 (2017년) 추진실적

- 의료관광 홍보물(리플릿, 책자) 및 PT 제작
- 몽골 관광(의료/기업연수) 홍보 설명회
- 남구의료관광 진흥 실무협의회 구성
- 몽골/카자흐스탄 울산의료관광 세일즈콜
- 몽골, 중국 관광 관계자 팸투어(3건, 40명)

4. 성과지표추이

성 과 지 표	측 정 지 표 (성과측정산식)	연도별 실적 및 목표(%)		지표 비중 (100%)
		2017년 실적	2018년 목표	
다양한 해외홍보 마케팅 실시	(추진실적/추진목표)×100	100 (3건)	100 (5건)	100

5. 개선방안

- 의료관광 특화 분야 설정을 통해 잠재적 수요층에 대한 선택과 집중 강화
- 관광 상품 및 관광 인프라와 연계한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

■ 이슈 6: 보건

남구는 지역사회의 공공보건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의 보건 증진, 건강 위협요인 및 질병 예방을 통한 지역사회 피해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야 함

- 건강하지 않은 제품 및 물질의 소비 억제를 포함한 건강한 생활방식을 권장함으로써, 보건 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건강 위협요소 및 주요 질병과 이의 예방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을 강화해야 함
- 질병 예방의 수단으로서 필수 의료서비스, 깨끗한 물, 적절한 위생에 대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보편적인 접근의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함

보건 이슈 현황 및 보완점

보건평가 기준	현행 사업	평가 및 보완점
건강한 생활방식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이(齒)와의 평생 동행·구강건강관리 • 음식문화개선 사업 적극 추진 • 함께하는 Well aging 건강생활실천 • 건강한 소통, 행복한 울림 정신건강관리 • 금연과 함께하는 건강한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별 건강한 생활방식 권장을 위해 다양한 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금연 및 구강건강 촉진을 위한 특화 사업을 잘 운영하고 있음
건강 위협요소 및 주요 질병에 대한 예방(인식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억회춘 치매안심센터 운영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 감염병 없는 청정남구 Y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질병 및 건강위협 요소에 대한 사전적 예방활동이 활성화 되어 있음 •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예방효과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필수 의료서비스, 깨끗한 물 및 적절한 위생에 대한 보편적 접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생태관광지 「드론방역」 운영 • 건강한 식품안전도시 조성 • 식중독 제로, 선제적 예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깨끗한 물과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 모두에게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2018 주요사업

그 이(齒)와의 평생 동행 구강건강관리

1. 목표

- 생애주기별 구강보건교육을 통한 건강한 치아 관리 환경 조성
- 미취학 아동 대상 불소도포를 통한 충치 예방

2. 사업내용

- 생애주기별 구강보건교육
 - 대상: 생애주기별 지역주민(미취학아동, 학생, 노인, 장애인 등)
 - 방법: 생활터별 방문 또는 보건소 내소자 개별 교육
 - 내용: 치아의중요성, 구강관리요령 등
- 어린이 불소도포
 - 대상: 미취학아동(5세 이상) 및 초등학교
 - 방법: 기관방문 또는 보건소 내소
 - 내용: 바른 칫솔질 체험 교육 후 불소바니쉬 도포

3. 최근 추진실적

구분		참여기관 수(개소)	참여인원(명)
계		213	24,261
생애주기별 구강보건교육	미취학 어린이	110	6,527
	초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25	7,014
	성인	-	3,613
어린이 불소도포	미취학 어린이	53	2,884
	초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25	4,223

4. 성과지표추이

- 현행 성과지표

성 과 지 표	측 정 지 표 (성과측정산식)	연도별 실적 및 목표(%)		지표 비중 (100%)
		2017년 실적	2018년 목표	
계				100
구강보건교육 참여율 (목표인원: 17,560명)	(교육참여자수/목표인원)×100	100.9	100	50
어린이 불소도포 수혜율 (목표인원: 7,460명)	(불소도포수혜자수/목표인원)×100	101.5	100	50

5. 개선방안

- 사업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치과의사의 지속적인 참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정규직 치과의사를 확보하거나 치과의사협회 등과의 협약을 통해 치과의사의 지속적인 참여를 확보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
-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한 지역주민 참여 확대

■ 이슈 7: 사회적 투자

남구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사회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과 프로젝트에 투자함으로써 사회적 측면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노력을 강화해야 함

- 지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조달 또는 아웃소싱을 늘림으로써, 시민을 위한 기회를 넓히는 활동을 강화해야 함
-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하고, 상호보완적인 자원, 지식 및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 정부, 기업 또는 NGO를 포함한 다른 조직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함
- 취약계층, 차별받는 집단, 저소득층을 위한 식량 및 기타 필수제품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사회적 투자 이슈 현황 및 보완점

사회적 투자평가 기준	현행 사업	평가 및 보완점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조달 또는 아웃소싱 강화 (지역사회 의존을 고착화시키는 활동 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조직 판로 활성화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강화 • 취약계층 및 장애인 생산제품 우선구매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할 경우 비용 효율성에 우선하여 사회적 경제조직 및 취약계층 생산제품을 구매하고 있음 • 지역의 장기적 긍정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의도적인 아웃소싱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의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음
다른 조직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사회적 투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지원제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필품 확보가 제한적인 취약계층에게 현금 또는 현물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2018 주요사업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및 강화

1. 목표

- 지역 특성에 맞는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조직 발굴·육성
- 사회적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에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2. 사업내용

- 지역맞춤형 사회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사업
- '남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 사회적기업 판로 활성화
- 공공기관 내 사회적기업 생산제품 우선구매 추진

3. 최근 추진실적

구분		참여기관 수(개소) 또는 운영횟수	참여인원(명)
계		241	1,776
지역맞춤형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사회적기업	4	-
	예비사회적기업	9	-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92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사업 추진	일자리창출 지원	20	77
	전문인력 지원	15	21
	사업개발비 지원	14	-
	사회보험료 지원	11	1,500
남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창업팀 육성지원	6	-
	사회적경제설립설명회	3	88
	사회적경제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2	90
사회적기업 판로 활성화	위드프리마켓 상설 운영	65	-

4. 성과지표추이

• 현행 성과지표

성 과 지 표		측 정 지 표 (성과측정산식)	연도별 실적 및 목표(%)		지표 비중 (100%)
			2017년 실적	2018년 목표	
계					100
사회적 경제조직 발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개소수	(지정개소/목표개소)×100	100	100	20
	사회적기업 인증 개소	(인증개소/목표개소)×100			
	마을기업 지정 개소	(지정개소/목표개소)×100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 및 육성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금	(집행금액/예산금액)×40	100	100	80
	교육 참여인원	(참여인원/목표인원)×20			
	위드프리마켓 참여인원	(참여인원/목표인원)×30			
	사회적기업 생산제품 우선구매액	(구매실적/구매목표)×10			

5. 개선방안

- 사회적기업 인증 후 실질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역량 강화
-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교육 강화 및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참여 활성화
-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판로 지원

04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적 책임(ISO 26000) 구현을 위한 지속가능성 보고서

사회적 책임수준 진단 및 평가:

SR Toolkit에 의한 수준 평가

1. 개요
2. 조직 거버넌스
3. 인권
4. 노동
5. 환경
6. 공정운영
7. 소비자
8.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

제4장 사회적 책임수준 진단 및 평가: SR Toolkit에 의한 수준 평가

1. 개요

- SR Toolkit 분석은 마틴 노이라이터 교수의 CSR Company International과 Aspon Consulting Ltd.가 공동으로 개발 한 소프트웨어로서, 사회적 책임 분석, 구현 및 관리를 지원하는 고유의 소프트웨어인 “CSR Analytics Pro toolkit”을 사용하여 수행
- Toolkit에는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취해진 조치 및 기대와 관련하여 각 조직의 관리 프랙티스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련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7 대 핵심 주제에 중점을 두고 ISO 26000 표준의 구조를 따르고 있으며, 각 조직 내에서 사회적 가치 활동 상태를 포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전문 사회적 가치 전략 개발을 지원. ISO 26000의 7 대 핵심 주제는 조직의 거버넌스, 인권, 노동 관행, 환경, 공정운영 관행, 소비자 이슈 및 지역 사회 참여 및 개발로서, 전체적으로 313 개의 핵심 고려 사항(Consideration)이 있으며, 각각의 고려사항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짐
- 관련성(relevance) 점수는 0에서 5까지의 점수를 사용하여 등급이 매겨지는데, 조직에 주요 고려 사항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나타냄. 예를 들면, “환경”의 핵심 주제인 “자연 서식지의 환경, 생물 다양성 및 복원 보호”에 대한 항목 하에 있는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을 고려할 때 건설 회사의 경우는 서비스 회사보다 관련성 점수가 높음. 지자체를 예로 들면 소비자 이슈에서 ‘소비자 정보제공(남구 내 주민에게 정책과 행정정보에 대한 제공)’은 지자체 본연의 활동과 역할을 고려할 때 일반기업 또는 NGO 조직보다 관련성 점수가 높다고 할 수 있음
- 그리고 각 고려사항에 대한 중요성(significance) 또한 0에서 5까지의 점수를 사용하여 등급이 매겨지며 0은 의미가 없음(N/A)을 의미하고 5는 매우 중요함을 의미. 이 역시 조직의 특성에 따라 각 고려사

항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결정됨

- 마지막으로 성과 점수(performance grade)는 특정 고려사항에서 조직이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것으로서, 녹색 기계 또는 신기술에 투자한 조직의 경우 “환경”의 핵심 주제 인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에 관심을 갖고 “에너지 소비 효율”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높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임
- 각 고려사항 별로 성과 등급(Grade)은 1에서 5까지(1: Very bad, 2: Bad, 3: Neutral, 4: Good, 5: Very good)임. 이때 등급 별로 색상으로 구분되어 지는데, 각 색상은 특정 핵심 주제에 대한 남구청의 전반적인 성과를 반영
- 남구청에 대한 Toolkit분석 사례를 보면 아래와 같은데, 고려사항 별 평가된 등급(Grade)이 있고 Relevance 옆 Gap은 등급별 색상을 나타냄

Key consideration		Grade	Relevance	Gap
Issue of interest	01. Employment and employment relationships			
Mobbing and Sexual harassment		Neutral	None	
Fair and reasonable disciplinary practices		Good	High	
Recruitment conditions		Good	Very high	
Unfair dismissal		Good	None	
Benefits		Neutral	None	
Respect of individuals with HIV/AIDS in the workplace		Bad	None	
Issue of interest	02. Conditions of work and social protection			
Compliance with national laws		Good	Minimal	
Compliance with ILO conventions and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 laws		Neutral	Minimal	
Promoting working conditions in the supply chain activities including outsourcing practices		Bad	None	
Not engage in or support the use of corporal punishment, mental or physical coercion or verbal abuse		Good	None	
Minority rights		Good	None	
Migrant labour		Neutral	Minimal	
Non conventional home working ("putting-out" system): Home work and informal work		Neutral	None	
Vacation plan		Good	None	
Proportionate balance with family and community activities		Good	None	

- 다음에서는 각 주제별 툴킷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있음

2. 조직 거버넌스

Key consideration		Grade	Relevance	Gap
Issue of interest		01. Ethical conduct		
Communication of values inside and outside of the organization		Good	High	
Code of ethics/conduct		Good	High	
Internal controls		Good	High	
Ethics Program - Implementation		Neutral	Medium	
Issue of interest		02. Transparency		
Full, accurate, complete disclosure		Good	High	
Fair internal and external communication		Neutral	Very high	
Information security		Good	Medium	
Channels of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should provide for equal, timely and cost efficient access to information by users		Neutral	Medium	
Issue of interest		03. Respect of rule of law		
Compliance with all national and local laws and regulations that apply to the organisation		Good	Very high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laws and conventions that apply to the organisation		Good	Very high	
Voluntary compliance with internal and external guidelines complementary to regulatory processes or in the absence of appropriate		Good	High	
Best Management Practices and Business Codes of Conduct		Good	Medium	
Impartial enforcement		Good	High	
Fair legal frameworks		Good	High	
Appeals processes [when applicable]		Good	Medium	
Issue of interest		04. Accountability		
Disclosure of interest		Neutral	High	
Management and governance frameworks		Good	Very high	
Executive remuneration		Good	High	
Risk Management		Neutral	High	
Internal audit		Neutral	High	
Issue of interest		05. Corporate Governance		
Management commitment		Good	High	
Decision making processes		Good	Very high	
Formal committee on sustainability		Neutral	High	
SR reporting		Good	High	
Stakeholder engagement		Neutral	High	
Organisational structure, roles and responsibilities		Good	High	
Gender equity		Neutral	High	
Minority rights		Good	High	
Discrimination and Harassment policies		Good	High	
Board composition		Neutral	High	
Management composition		Good	High	

Key consideration		Grade	Relevance	Gap
Issue of interest		05. Corporate Governance		
Human resources practices		Good	Medium	
Fair recruitment		Good	High	

■ 주제별 총평

- 공공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단체의 장이 선거를 통하여 당선되므로, 주요 의사결정 구조는 의회의 견제 속에서 단체장의 역할과 권한 관련 법률에 의하여 정해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자원, 천연자원, 인적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등 운영상의 개선 여지는 항상 존재함
- 윤리경영 프로그램(Ethics Program),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이해관계자참여(Stakeholder Engagement) 등에서 개선이 필요함이 확인됨. 특히, 내부, 외부 커뮤니케이션(Internal and External Communication) 분야에서 개선 필요성이 도출됨. 의사전달 과정과 절차를 시스템화하지 못하여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인지되지 못한 부분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됨. 또한 성평등(Gender equity)의 관점에서 여성관리직 비율을 더욱 높여나갈 필요가 있고, 중요의사결정을 하는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이슈별 평가

- 윤리적 행동
남구청은 공공기관의 특성상 대부분의 임직원들은 윤리적 행동 규범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음. 윤리적 행동이 체계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조직내의 제도와 문화가 매우 중요함. SR Toolkit 에 의한 남구청 윤리적 행동 측면 평가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 투명성
공공기관의 모든 업무들은 특별히 보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는 국민에서 공개됨. 투명성은 공공기관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 과제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대부분 인터넷 홈페이지나 앱과 눈 등을 통해 공개되는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활발히 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보 공개 정책이 요구됨
- 법규준수
공공기관의 특성상 SR Toolkit 에 의한 남구청의 법규준수 항목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3. 인권

Key consideration		Grade	Relevance	Gap
Issue of interest	01. Due diligence			
Human rights policy in place guiding the company internally		Neutral	High	
Track the performance of the company related to human rights		Neutral	High	
Internal assessment		Neutral	Medium	
Organizational behavior		Neutral	High	
Issue of interest	02. Human rights risk situations			
Assess the human rights risk situation		Neutral	High	
Operating in an area with difficult conditions (e.g., extreme political instability, absence of civil rights, poverty, drought, health challenges, natural disasters)		Neutral	High	
Company activities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 or involve vulnerable groups, including indigenous peoples or children		Neutral	Medium	
Steps to prevent "culture of corruption"		Neutral	Medium	
Extensive security measures		Neutral	High	
Not engage in or support the use of corporal punishment, mental or physical coercion or verbal abuse		Neutral	High	
Issue of interest	03. Avoidance of complicity			
Prevent human rights abuses		Neutral	High	
Special care exercised by companies that may be used to prevent violate human rights		Neutral	Medium	
Offer human rights training for security personnel		Neutral	High	
Not complicit in any human right abuses		Good	High	
Respect the protection of internationally proclaimed human rights		Good	High	
Integrate this process into the due diligence process to avoid complicity		Good	High	
Issue of interest	04. Resolving grievances			
Process of dealing with and resolving grievances transparent		Neutral	High	
Compliance of all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Good	Medium	
Investigate in all complainant		Neutral	High	
Prevent unfair interference with resolving grievances		Good	Medium	
Clear procedures and timeframes of resolving grievances		Neutral	High	
Issue of interest	05. Discrimination and vulnerable groups			
Banning all discrimination		Good	High	
Rights of peoples with disabilities		Good	Medium	
Rights of minorities and indigenous peoples		Neutral	Medium	
Woman's rights		Good	Medium	
Equal employment opportunities		Good	Medium	
Minority groups rights		Good	Medium	
Cultural & religious diversity		Neutral	High	
Internal policies and rules on non-discrimination on grounds of race, sex, religion, colour, political opinion, national extraction, social origin		Good	High	
Procedures to protect against discrimination		Neutral	Medium	

Key consideration		Grade	Relevance	Gap
Issue of interest 05. Discrimination and vulnerable groups				
Empowerment of minority groups		Neutral	High	
Issue of interest 06. Civil and Political Rights				
Consideration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Neutral	High	
Consideration of the lawful use of force		Good	Medium	
Promoting fairness and mutual trust between employers and employees		Neutral	Medium	
The concept of complicity		Good	High	
Right to life and liberty		Good	High	
Right to Information		Neutral	High	
Right to education		Good	Medium	
No torture		Good	Medium	
Freedom of assembly		Good	High	
Right to property		Good	High	
Freedom of speech and other rights found in ICCP		Neutral	Medium	
Right to protection		Neutral	High	
Action for promoting proactive human rights protection		Good	Medium	
Programs to encourage and support employment in community involvement		Neutral	High	
Issue of interest 07.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raining		Good	High	
Basic needs wage		Good	Medium	
Right to adequate housing		Good	High	
Right to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Good	Medium	
Education for children		Good	High	
Presence of child with family - right of child to not to be taken/moved from family home/community for work purposes		Good	High	
Issue of interest 08.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Observance of collective agreements		Good	Medium	
Non-employment of children under minimum age		Very good	High	
Non-employment of under-18s in hazardous work		Very good	High	
Freedom of workers to come and go		Good	Medium	
Not complicit in human rights abuses in the supply chain		Good	High	
Freedom of association and rights to form and to join trade unions for the protection of workers interest and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Good	Medium	
No forced or bonded labor		Good	High	
Organizational respect and commitment to protect Human Rights		Good	Very high	

■ 주제별 총평

- 인권분야는 기관의 활동으로 인한 영향으로 구민 등 외부인이 받는 인권문제와 내부 임직원의 인권문제로 나누어 접근할 필요가 있음. 전체적으로 외부, 내부적으로 중요한 인권 쟁점은 확인되고 있지 않으나, 인권보호 경영시스템은 다른 기관들에 비해 미약한 수준으로 평가됨. 따라서 향후, 가시적인 제도화와 함께 더욱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내부적 인권 쟁점은 노동 분야의 노동기본권과 관련하여 동시에 그리고 교차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인권분야는 인권침해를 사전 예방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직간접적 및 무언의 공모(인권남용에 고의적으로 상당히 개입되는 상황)를 적극 회피하는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지, 조직내 인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치유 메커니즘이 수립되어 있는지, 특히 인권 취약그룹(여성, 장애인, 아동, 원주민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 방지하고 있는지 등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공개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 이슈별 평가

■ 실사

인권 실사 분야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권 정책 수립과 추진 계획 속에서 실사 활동이 펼쳐져야 하기 때문임. 남구청의 경우, 2013년 인권 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2017년 인권증진기본계획(2018~2022)이 수립됨

하지만, 업무 분장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못하고, 2018년 주요사업에 인권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서 업무의 공개성 및 접근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인권 리스크상황

지역사회 복지 차원에서 다양한 인권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인권 리스크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응 수준은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공모회피

공모회피 분야에서도 개선 필요성이 도출되었는데, 공모의 개념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것을 포함하여 남구 차원에서 인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직접, 간접, 이익 공모가 어떤 형태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고충처리

고충처리 이슈는 남구청 내 임직원들의 고충처리 대응분야와 구민들의 고충처리를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로 나누어 접근이 필요함

■ 차별과 취약그룹

이에 대한 대응은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됨

■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분야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됨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분야는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됨

■ 근로에서의 근본원칙과 권리

강제노동, 의무노동, 아동노동 금지 등 근로에서의 근본원칙과 권리 분야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4. 노동

Key consideration	Grade	Relevance	Gap
Issue of interest	01. Employment and employment relationships		
Medical care	Good	None	
Compensation for work-related disease and injury	Neutral	None	
Gender equity	Neutral	Minimal	
Discrimination and Harassment policy	Neutral	Minimal	
Hours of work, weekly rest, annual leave	Neutral	Minimal	
Fair treatment/ dispute resolution	Neutral	None	
Issue of interest	02. Conditions of work and social protection		
Mobbing and Sexual harassment	Neutral	None	
Fair and reasonable disciplinary practices	Good	High	
Recruitment conditions	Good	Very high	
Unfair dismissal	Good	None	
Benefits	Neutral	None	
Respect of individuals with HIV/AIDS in the workplace	Bad	None	
Issue of interest	03. Social dialogue		
Compliance with national laws	Good	Minimal	
Compliance with ILO conventions and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 laws	Neutral	Minimal	
Promoting working conditions in the supply chain activities including outsourcing practices	Bad	None	
Not engage in or support the use of corporal punishment, mental or physical coercion or verbal abuse	Good	None	
Minority rights	Good	None	
Migrant labour	Neutral	Minimal	
Non conventional home working ("putting-out" system): Home work and informal work	Neutral	None	
Vacation plan	Good	None	
Proportionate balance with family and community activities	Good	None	
Recreation rights	Neutral	None	
Compensation	Neutral	High	
Access to information	Neutral	None	
Rehabilitation programs for people hurt at work	Good	High	
Reasonable working hours and overtime	Neutral	Minimal	
Maternity protection	Good	Very high	
Access to affordable childcare	Very good	Very high	
Health benefits programs	Neutral	None	
Issue of interest	04. Health and safety at work		
Facilitation of employees meetings including allowing reasonable time to participate in union affairs	Good	Very high	
Issue of interest	05. Health and safety at work		
Policies and practices provide for safe and healthy working practices	Good	High	
Promotion of the health and safety in the Supply chain activities including outsourcing practices	Bad	None	
Relationship with suppliers and governments	Neutral	Minimal	
Regular training and awareness in health and safety	Good	Very high	
Programs to preserve health and safety	Good	Very high	
Provision of protective and safety equipment	Neutral	None	
Fire protection	Good	None	
Emergency evacuation	Neutral	None	
Security signalization, security colours	Neutral	None	
Security labeling	Neutral	Medium	
Contingency plans	Neutral	None	
Medical assistance and control	Neutral	None	
Sanitary necessities	Neutral	None	
Respect security practices	Good	None	
Cooperation with public inspection and labour administration authorities	Good	Medium	

■ 주제별 총평

- 노동분야는 근로와 관련된 모든 정책 및 관행을 포함하고 있음. 의미 있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고, 국내 노동관련 법규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편이기에, 대부분의 분야에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단, 보수(compensation) 분야에서 높은 개선필요성이 도출되었음.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 문제에 기인하는데, 중앙정부가 높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펼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므로 세심한 사업추진이 권장됨

■ 이슈별 평가

■ 고용 및 고용관계

고용 및 고용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일자리 관련 문제는 사회복지적 차원의 접근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어, 점검상으로는 양호하다고 진단됨. 하지만 경제적 차원의 접근에서는 실질적인 결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판단됨.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적, 행정편의적, 예산의 적법사용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행 일자리 지원체계에 변화를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경제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정부의 지원이 중단되더라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데 초점을 두고, 정부의 중점 지원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시적으로 기초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근로조건 및 사회적 보호

근로조건 및 사회적 보호와 관련된 노동관행 분야는 국내 노동 및 고용 관련 법안이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져 있는 편이고, 중앙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등의 추진으로 점검 상으로는 양호하다고 평가됨. 단, 여성노동과 모성보호를 위한 보육정책은 무상보육의 실행으로 점검상 내용은 큰 문제가 없지만, 저출산 및 인구감소로 인하여,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부모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이 현실이라고 판단됨. 보육료의 현실화가 어려운 시점에서 보육사업에 대한 인식전환을 통하여 남구청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고 인구감소로 인한 보육 공백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 사회적 대화

울산지역의 주요 이슈 중의 하나인 노사 간의 사회적 대화 문제는 남구청의 의미 있는 정책이 실행되고 있어 양호하다고 판단됨. 하지만 노사문제를 사적영역으로 판단하는 사회적 통념이 남아있어, 지역주

민의 대표자로서의 남구청장의 적극적인 중재를 원하는 여론이 존재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개입이 어려운 상태임. 이러한 문제를 사회적으로 합의해 낼 수 있는 여건을 남구청에서 제안하는 것이 권장됨

■ 근로에서의 보건 및 안전

국제안전도시 인증 등 근로에서의 보건 및 안전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됨

■ 작업장에서의 인적개발 및 훈련

작업장에서의 인적개발 및 훈련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됨

5. 환경

Key consideration		Grade	Relevance	Gap
Issue of interest	01. Prevention of pollution			
Emission control technologies		Good	High	
Use of cleaner production practices		Neutral	High	
Sewage treatment		Good	High	
Control and responsible management of solid waste based on the hierarchy of the 3R principles of reduce, reuse, recycle		Neutral	High	
Access to clean, safe drinking water through source water protection and sanitation measures		Good	High	
Implement programs to prevent unintentional releases or spills		Good	High	
Control and reduction in the impact of effluents released to freshwater or marine environments		Good	Very high	
Implement programs to address the public health implications of emissions		Neutral	High	
Implement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policies		Good	Medium	
Reduce emissions through; product stewardship, design for environment, eco-labelling, supply chain management, [including management of transports and logistics], design for environment		Good	Very high	
Issue of interest	02. Sustainable resource use			
Promotion of 3R principles (reduce, reuse, recycle)		Very good	High	
Implementation of eco-design, life cycle approaches		Neutral	High	
Management of surface and groundwater resources		Neutral	High	
Implementation of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Neutral	High	
Adoption of energy efficiency practices		Neutral	High	
Generation or use of renewable energy		Good	High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Good	High	
Reforestation		Good	High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Neutral	High	
Soil conservation		Neutral	High	
Sustainable agricultural practices		Neutral	Medium	
Reclamation of contaminated lands and brownfields		Neutral	High	
Issue of interest	03.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Reduction of the emission of CO2 and other greenhouse gases		Good	High	
Efficient way of using energy resources		Neutral	High	
Recyclable Energy		Neutral	High	
Efficiency of energy consumption		Neutral	Medium	
New energy technologies		Neutral	Medium	

Key consideration		Grade	Relevance	Gap
Issue of interest		03.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Energy-saving products		Neutral	Medium	
Awareness raising		Good	High	
Partnership and collaboration		Good	High	
Issue of interest		04.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biodiversity and restoration of natural habitats		
Habitat creation / protection		Good	Medium	
Establishment of migration corridors		Good	High	
Sustainable management of biodiversity		Good	Medium	
Protection of wetlands, coral reefs and other significant or threatened ecosystems		Neutral	High	
Sustainable Land Use		Good	Medium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Neutral	High	
The right to use natural resources		Good	Medium	
Access to clean water		Neutral	High	

■ 주제별 총평

- 남구청은 공공기관의 특성상 환경관련 법규에 따라 △오염예방 △지속가능한 자원이용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환경보호와 생물다양성 및 자연서식지보전 분야는 전반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구청 홈페이지등 구민을 포함하여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주요사업 항목에 이런 내용들이 다수 빠져 있는 것은 사업 중요도에서 낮게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환경분야의 이슈(쟁점)들은 구민 생활의 기반과 토대가 되는 분야인 만큼 향후 지속적으로 중요도를 높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울산 남구의 경우, 공단지역을 끼고 있고, 인근 다른 구에서 발생하는 환경이슈들이 파급, 확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광역차원에서 동시에 협력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에너지사용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 및 저감활동도 지속적인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환경보고와 지속가능성 분야의 사회 보고가 요구됨

■ 이슈별 평가

- 오염예방
수질, 대기, 폐기물 관리는 환경 분야에서 기본적인 과제인데, 구청 주요사업 계획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이지 못하고 있음.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부분이 많더라도 남구청 차원에서 체계적인 오염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남구 지역 범주에 해당하는 에너지, 물, 자원의 사용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환경 및 에너지 담당 부서 지속가능한 자원이용이라는 관점에서 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친환경디자인 분야, 환경경영시스템 연계 분야, 지속가능한 숲 관리 정책 등에서 개선 필요성이 도출됨

■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국가적으로 온실가스 관리가 중요한 정책과제임. 2018년 주요업무 계획에서 저탄소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많은데,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전체적인 비전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됨. SR Toolkit 평가에 의하면 에너지자원 효율성 제고 등에서 개선점이 도출됨

■ 환경보호, 생물다양성 및 자연서식지 복원

남구청의 경우, 삼호 동우리 사람과 철새의 만남 프로젝트, 여천,무거천 유지관리, 두루미생태환경연구소 건립 등 생태계 보전 노력은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됨. 울산 남구의 경우, 울산대공원, 태화강 인근 지역의 친환경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도시발전(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분야에서는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됨. 특히, 선암호수공원, 태화강변은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음

6. 공정운영

Key consideration		Grade	Relevance	Gap
Issue of interest		01. Anti-corruption		
Inclusion of social and environmental criteria for suppliers and end users		Good	High	
Supply chain procurement standards and ethics		Good	High	
Effective organizational integrity and governance		Good	Very high	
Support of small organizations, including prompt payments		Very good	None	
Activities to counter bribery and collusion		Very good	Very high	
Responsible and transparent lobbying		Very good	None	
Fair contracting		Very good	Very high	
Fair and ethical supply conditions and warranties		Very good	Very high	
Fair and transparent complaints management		Good	Minimal	
Clear and truthful warning notices		Very good	Very high	
Dispute resolution practices		Good	Minimal	
Acceptance of liability for defective, erroneous or incomplete products and services		Very good	None	
Issue of interest		02. Responsible political involvement		
Not provide goods or services to an entity that uses them to carry out human rights abuses		Very good	None	
Inform itself about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in which purchased goods and services are produced; and consider making public, or taking other action indicating that it does not condone acts of discrimination occurring in employment in the		Very good	None	

Promotion of pro-competition public policy	Very good	Very high	
Promotion of employee awareness of importance of compliance with competition legislation	Neutral	Very high	
Awareness raising of sustainable and ethical consumption	Good	None	
Issue of interest	03. Fair competition		
Co-operation with competition authorities	Very good	Medium	
No anti-competitive behaviour or abuse of monopolistic or dominant positions	Very good	Very high	
No price fixing / retail price maintenance	Neutral	None	

Key consideration	Grade	Relevance	Gap
Issue of interest	03. Fair competition		
No bid rigging / collusive tendering	Very good	Very high	
No aggressive pricing	Neutral	None	
Issue of interest	04. Promoting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value chain		
Promotion of sustainable products and services	Neutral	None	
Responsible communication	Very good	Very high	
Respect for consumers' views	Very good	Very high	
Protection of personal data	Very good	Very high	
Controls over sharing personal data	Very good	Very high	
Minimalist and responsible data gathering	Very good	Very high	
Issue of interest	05. Respect for property rights		
Actions to prevent piracy	Good	Very high	
Freedom to contract	Good	None	
Actions to protect copyrights, patents and trademarks	Bad	Minimal	
Respect public property rights	Very good	Very high	
Protect the traditional rights of scholars	Good	None	
International Property Rights (IPRI)	Neutral	None	

■ 주제별 총평

- 공정운영 관행 분야의 각 이슈별 중요성과 현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울산 남구는 매우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남구청과 협력하는 기업 또는 위탁업체 등 가치사슬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 촉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슈별 평가

■ 반부패

남구의 반부패에 대한 보고 및 처리 프로세스는 잘 정립되어 있으나 반부패에 대한 고위층의 강력한 의지표명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높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판단되었음. 이외 반부패에 대한 인식제고 노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효과적인 반부패 제도 및 시스템이 구축되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음. 다만 명예구민 감사관제와 같은 제도가 확대 발전된다면 더욱 효과적인 반부패 제도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 책임 있는 정치 참여

남구청은 자자체로서 책임 있는 정치 참여에 대한 여러 요구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 이에 따라 선거개입, 정치적 중립 훼손방지 등 남구청 구성원의 책임 있는 정치 참여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잘 정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정치적 중립 등 책임 있는 정치 참여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관련 교육이 개발되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공정경쟁

남구청 조달 사업에 대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수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 기업을 보호하는 활동 또한 이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남구 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 또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공정경쟁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 시킬 수 있는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공정한 경쟁을 울산 남구 내에 보다 효과적으로 정착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가치사슬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 촉진

공정운영 관행 분야에서 울산 남구의 가장 취약한 이슈가 가치사슬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 촉진으로 확인되었음. 남구청이 가치사슬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 촉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 확산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남구청 조달 기업 또는 위탁기관들이 사회적 책임 활동에 동참하는 것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음

■ 재산권 존중

남구청은 주민재산 보호를 위한 정책과 공유재산에 대한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재산권 존중을 위한 여러 활동을 이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7. 소비자

Key consideration	Grade	Relevance	Gap
Issue of interest	01. Fair marketing, factual and unbiased information and fair contractual practices		
Life cycle of products	Neutral	None	
Innovation	Good	High	
Ethical consumer practices	Neutral	Minimal	
Comparability with alternative products and services	Good	None	
Labeling (contents, country of origin, energy efficiency, recyclability, etc.)	Good	None	
Readily-accessible information	Very good	Medium	
Accountability and acceptance of liability	Very good	Minimal	
Control, or avoidance of supply or use, of: dangerous, addictive or controversial additives or substances, including those based on specific product interactions	Neutral	None	
Accessibility	Very good	Very high	
Issue of interest	02. Protecting consumers' health and safety		
Full, frank and correct disclosure and labelling regarding content, health aspects, safe use, maintenance, storage and disposal	Neutral	None	
Provision of products and services that are beneficial to consumer health	Very good	None	
Special care in advertising and marketing that is targeted to children, the elderly, the seriously ill, and others who may not have the capacity to fully understand the information with which they are presented	Neutral	None	
Health warning notices	Neutral	None	
Special protection of vulnerable groups - children and the elderly, the seriously ill, and others who may not have the capacity to assess potential dangers	Very good	Very high	
Product and service H&S impact assessments	Neutral	None	
Issue of interest	03. Sustainable Consumption		
Promoting sustainable consumption	Good	Medium	
Optimization of energy use in commercial and public facilities	Very good	Very high	

Key consideration	Grade	Relevance	Gap
Issue of interest	03. Sustainable Consumption		
Undertake initiatives to promote greater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Very good	Very high	
Encourage the development and diffusion of environmentally friendly technologies	Very good	Very high	
Issue of interest	04. Consumer service, support, and complaint and dispute resolution		
Equity in contracts	Very good	None	
Respect for consumer rights	Very good	High	
Product and service systems and support	Very good	High	
Issue of interest	05. Consumer data protection and privacy		
Provision of responsible, truthful and equitable advertising, information and contracts	Good	Medium	
Plain language communications	Very good	High	
Multi-lingual information	Good	High	
Full disclosure of terms and conditions	Neutral	Minimal	
Provision of factual and adequate information on products and services	Very good	Minimal	
Truthful, complete, credible, transparent and assured reporting on SR activities	Good	Medium	
Conflict resolution and redress procedures	Good	Medium	
Issue of interest	06. Access to essential services		
Increase transparency by active information disclosure	Good	High	
Managing and interpreting customer requirements	Good	High	
Issue of interest	07. Education and awareness		
Awareness for action to correct hazards	Good	Medium	
Require contractors to conform to OH&S regulations	Very good	High	
Prompt easy and effective consumer communication with the organization	Very good	Very high	

■ 주제별 총평

- 소비자 이슈는 남구 내 구민에 대한 정확한 행정정보 제공, 지속가능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행정서비스 설계 등과 관련이 있음. 현재 남구는 다양한 채널과 도구를 통하여 정확한 행정정보를 세밀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구민의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계획과 활동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만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잘 정립되어 있으며 불만발생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아울러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과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음. 다만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강화와 구민 대상의 지속가능 소비 및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교육이 강화된다면 소비자 이슈에 대해 보다 더 긍정적 평가가 기대됨
- 소비자 분야의 각 이슈별 중요성과 현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울산 남구는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소비자 즉 남구 주민에 대한 이슈 전반에 대한 인식제고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높은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이슈별 평가

- 공정 마케팅
남구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제도를 수립/이행함으로써 남구 주요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문화 특성을 고려한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소비자의 보건과 안전 보호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재난 요소를 식별하고 재난에 대한 보호를 위한 방안을 수립 및 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활동으로 인한 안전위험에 대한 대책을 잘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고 있음. 또한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 다만 노인, 임산부 등 다른 취약집단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한다면 보다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지속가능소비

지속가능소비를 위해 재활용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환경개선 이행 및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활동이 필요한 데, 이러한 계획과 이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소비자 서비스, 지원 및 불만과 분쟁 해결

고객인 남구 주민에 대한 행정불만 예방과 불만 발생 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가 필요한데 여러 부서에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소비자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

고객의 정보 보호 또한 관련 전문가의 주도 아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사이버 침해 대응센터는 통합로그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 사이버 침해 실시간 탐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

공공요금 긴급복지 서비스를 통하여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계층에게 일시적으로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이행하고 있음. 공공요금 긴급복지는 중앙정부에서 수립된 계획이지만 본 정책의 실행은 구청에서의 실질적인 활동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울산 남구의 특정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교육과 인식

소비자 즉 남구 주민의 건강, 어린이 급식, 음식문화개선 등 다양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다만 에너지 효율적 이용, 환경개선 및 재활용 등에 대한 인식제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보다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8.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

Key consideration	Grade	Relevance	Gap
Issue of interest	01. Community involvement		
Investment in basic infrastructure - schools, hospitals, roads, education etc.)	Good	High	
Social services	Good	High	
Organizational development	Good	Medium	
Institutional development	Good	High	
Minority and women owned development	Neutral	High	
Multi stakeholder orientation to promote inclusiveness	Neutral	Medium	
Non-discrimination in provision of goods and services	Very good	Very high	
Stakeholder engagement programs	Good	Very high	
Complaints and grievance mechanisms	Good	Very high	
Mapping the communities needs, demands and potentials	Good	Very high	
Community self-determination	Good	High	
Citizen participation programs/processes	Good	High	
Public private partnerships	Good	Very high	
Partnerships with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civil society organisations	Neutral	Medium	
Issue of interest	02. Education and culture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Good	High	

Key consideration	Grade	Relevance	Gap
Issue of interest	03. Sustainable Consumption		
Undertake initiatives to promote greater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Very good	Very high	
Encourage the development and diffusion of environmentally friendly technologies	Very good	Very high	
Issue of interest	04. Consumer service, support, and complaint and dispute resolution		
Equity in contracts	Very good	None	
Respect for consumer rights	Very good	High	
Product and service systems and support	Very good	High	
Issue of interest	05. Consumer data protection and privacy		
Provision of responsible, truthful and equitable advertising, information and contracts	Good	Medium	
Plain language communications	Very good	High	
Multi-lingual information	Good	High	
Full disclosure of terms and conditions	Neutral	Minimal	
Provision of factual and adequate information on products and services	Very good	Minimal	
Truthful, complete, credible, transparent and assured reporting on SR activities	Good	Medium	
Conflict resolution and redress procedures	Good	Medium	
Issue of interest	06. Access to essential services		
Increase transparency by active information disclosure	Good	High	
Managing and interpreting customer requirements	Good	High	
Issue of interest	07. Education and awareness		
Awareness for action to correct hazards	Good	Medium	
Require contractors to conform to OH&S regulations	Very good	High	
Prompt easy and effective consumer communication with the organization	Very good	Very high	

■ 주제별 총평

-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 분야의 각 이슈별 중요성과 현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울산 남구는 전체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일부 항목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항목이 양호 또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이슈별 평가

■ 지역사회 참여

남구의 경우 서비스 및 재화를 분배하는 과정의 구조적인 차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진단되어 매우 양호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그 외에 기본적인 인프라에 대한 투자, 사회서비스, 제도적인 발전 등 대부분의 항목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하지만, 소수자와 여성의 발전을 지원하는 노력, 다양한 방법과 기준을 활용하여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노력, 지역의 조직뿐만 아니라 전국, 국제적인 조직과의 파트너십 구축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보통의 평가를 받아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진단되었음

■ 교육 및 문화

기술개발을 위한 훈련, 적절한 교육 훈련 기회 제공을 통한 지역주민의 경력 개발, 지역의 문화 유산에 대한 보호 활동은 모두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하지만, 다른 조직에 모범적인 사례나 정책을 장려하거나, 다른 조직이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활동은 보통의 평가를 받았음

■ 고용창출 및 기능 개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관광 산업 활성화를 통한 부의 창출 등을 통해 고용창출 및 기능 개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하지만, 인적자원 개발 및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은 다른 지역에 비해 특별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진단되었음

■ 부 및 소득 창출

부와 소득 창출을 위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는 노력은 보통으로 평가되어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 기술 개발 및 기술 접근성, 보건, 사회적 투자 분야는 모든 항목에서 양호 또는 매우 양호의 평가를 받았음

05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적 책임(ISO 26000) 구현을 위한 지속가능성 보고서

이해관계자 분석 및 중대성 분석

1. 이해관계자 설문 분석
2. 중대성 분석

제5장 이해관계자 분석 및 중대성 분석

1. 이해관계자 설문 분석

■ 설문개요

울산 남구청의 이해관계자 설문 조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함

설문 조사 자료는 별첨함

- 일시 : 2018.10.10 ~ 10.25
- 대상 : 구민 및 공무원
- 응답 표본수 : (구민) 143, (공무원) 115
- 응답자 구성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음.
 - 구민 (143)
 - 성별 : (남자) 36, (여자) 107
 - 나이 : (20대) 4 (30대) 15 (40대) 43 (50대) 62 (60대) 19 (70대) 0
 - 직업 : (생산직) 5 (상업) 18 (서비스직) 22 (연구직) 1 (사무직) 38 (농축산) 0 (학생) 1 (기타) 58

구분		표본수	비율(%)	비고
성별	남	36	25.2	
	여	107	74.8	
나이	20대	4	2.8	
	30대	15	10.5	
	40대	43	30.1	
	50대	62	43.4	
	60대	19	13.3	
직업	생산직	5	3.5	
	상업	18	12.6	
	서비스직	22	15.4	
	연구직	1	0.7	
	사무직	38	26.6	
	학생	1	0.7	
	기타	58	40.6	
합계		143	100.0	

- 공무원 (115)

- 나이 : (20대) 20 (30대) 40 (40대) 30 (50대) 25 (60대) 0 (70대) 0

- 직급 : (9~8급) 43 (7~6급) 67 (5급이상) 5

구분		표본수	비율(%)	비고
나이	20대	20	17.4	
	30대	40	34.8	
	40대	30	26.1	
	50대	25	21.7	
직업	9급~8급	43	37.4	
	7급~6급	67	58.3	
	5급 이상	5	4.3	
합계		115	100.0	

■ 설문결과

■ 남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관심과 평가

- 남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주민과 공무원들의 관심과 평가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구분		주민		공무원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	아주 많음	21	14.7	22	19.1
	많음	95	66.4	72	62.6
	없음	24	16.8	18	15.7
	매우 없음	1	0.7	3	2.6
직업	아주 잘 이행	10	7.0	24	20.9
	잘 이행	107	74.8	74	64.3
	미흡	25	17.5	13	11.3
	아주 미흡	1	0.7	2	1.7
합계		143	100.0	115	100.0

- 주민 81.1%, 공무원 81.7% 등 대다수의 응답자가 남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주민의 81.8%, 공무원의 85.2%는 남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아래 표는 주민과 공무원들에 대하여 ISO26000 7대 이슈 중 남구의 사회적 책임 이행 관련 관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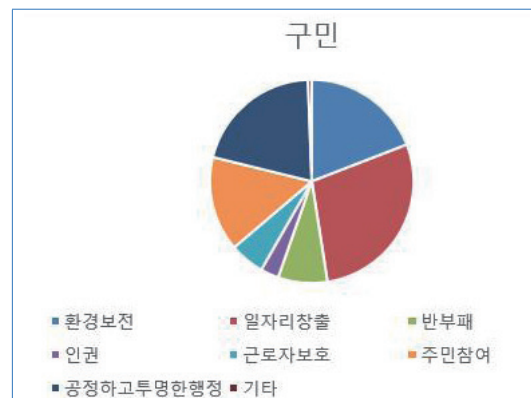
아에 대한 질문의 복수 응답의 결과임

[표 5-1] 분야별 공무원 및 구민 별 관심분야 응답수 및 비율

분야	공무원	비율(%)	구민	비율(%)
환경보전	41	13.1	66	19.1
일자리창출	69	22.0	98	28.4
반부패	39	12.4	27	7.8
인권	16	5.1	10	2.9
근로자보호	21	6.7	19	5.5
주민참여	49	15.6	52	15.1
공정하고투명한행정	77	24.5	71	20.6
기타	2	0.6	2	0.6
소계	314	100	34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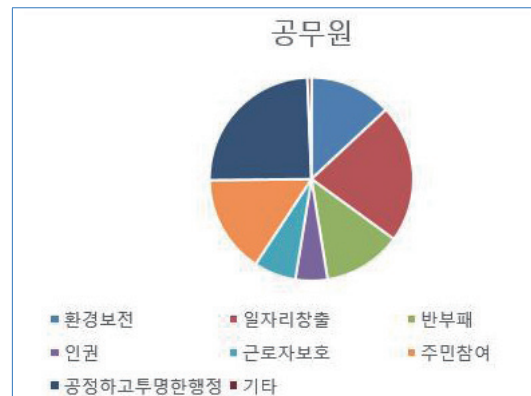
구민 설문 결과

- 구민들은 일자리 창출 이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환경보전, 주민참여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공무원 설문 결과

- 공무원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이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 주민 참여, 환경보전 이슈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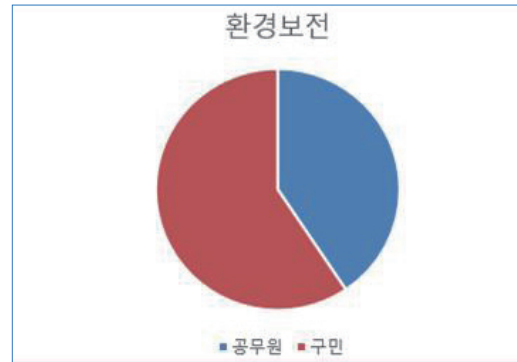


■ 7대 주제별 구민 및 공무원 설문 결과

- 7개 주요 주제별로 나누어 공무원과 구민이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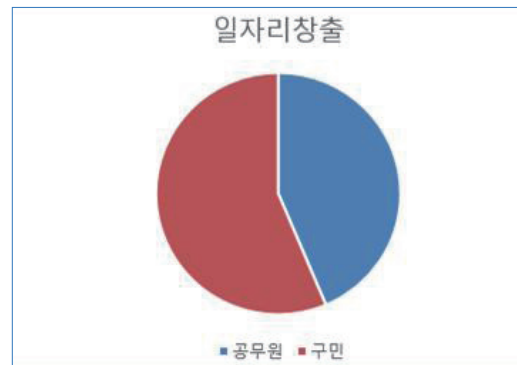
환경보전

- 환경보전분야는 구민 설문에서는 일자리창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에 이어 세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로 나타났고, 공무원 설문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일자리창출, 주민참여 이슈에 이어 네 번째로 중요한 이슈로 확인됨
- 상대적 중요도 분석에서는, 공무원들보다는 구민들이 환경보전 이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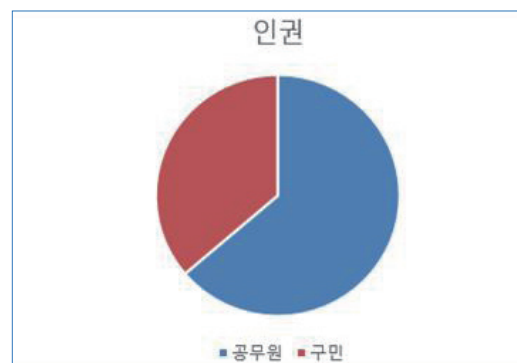
일자리창출

- 일자리창출 이슈는 구민설문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로, 공무원 설문에서는 두 번째로 중요한 이슈로 나타남
- 구민과 공무원의 중요도 비교에서는 구민들이 일자리 창출 이슈에 대해 더 높은 빈도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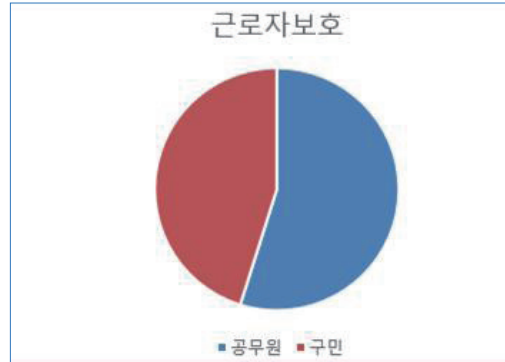
인권보호

- 인권보호 분야는 구민 및 공무원 설문에서 모두 가장 낮은 중요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구민과 공무원의 중요도 비교에서는 공무원들이 조금 더 높게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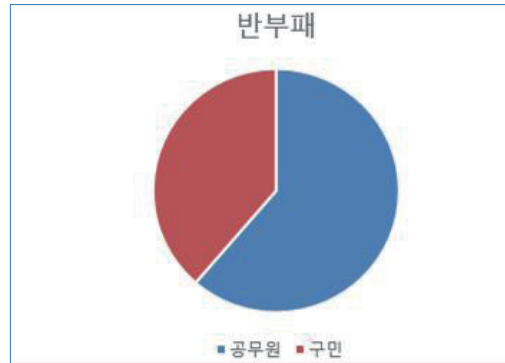
근로자보호

- 근로자보호 분야는 구민 및 공무원 설문에서 각각 여섯 번째의 중요도의 이슈로 나타남. 이는 어느 정도의 노동권 보호가 이루어진 지역적 특징을 반영한 결과로 보임
- 구민과 공무원의 이슈 중요도 비교에서는 공무원들이 조금 더 높게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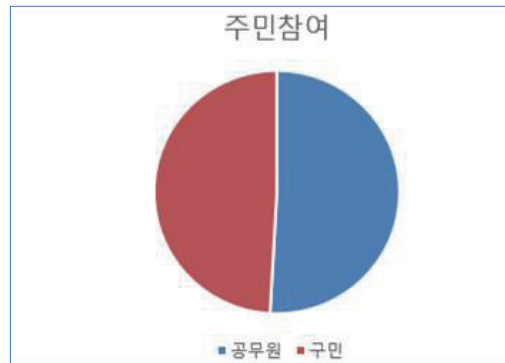
반부패

- 반부패 분야는 구민 및 공무원 설문에서 각각 다섯 번째의 중요도의 이슈로 나타남
- 구민과 공무원의 이슈 중요도 비교에서는 공무원들이 반부패 이슈에 대해 조금 더 높게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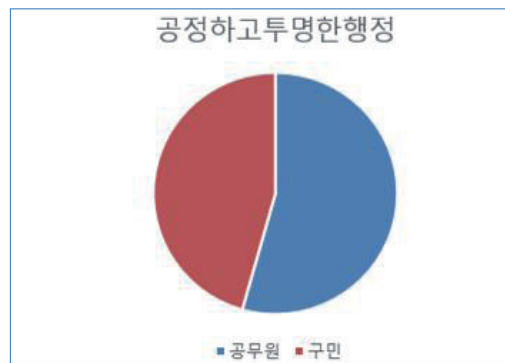
주민참여

- 주민참여 이슈는 구민설문에서는 네번째 중요 이슈로, 공무원 설문 세번째로 중요한 이슈로 나타남
- 구민과 공무원의 중요도 비교에서는 거의 같은 비중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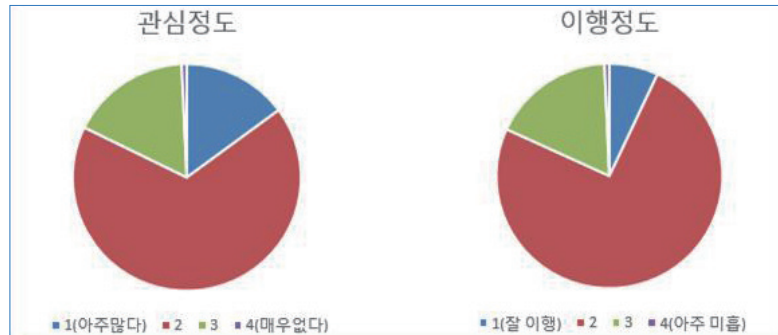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이슈는 공무원 설문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로, 구민설문에서는 두번째 중요 이슈로 답변한 것으로 확인됨
- 구민과 공무원의 중요도 비교에서는 공무원들이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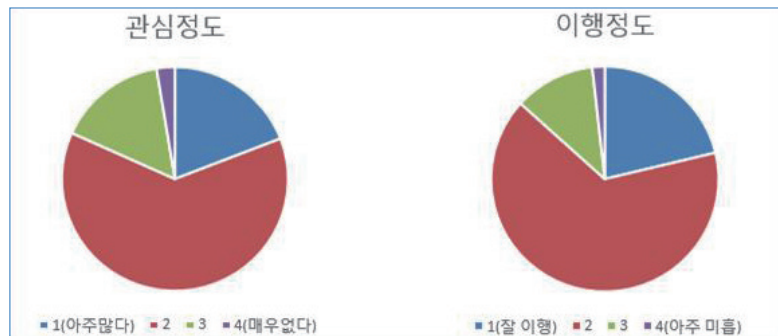


관심도와 이행도에 대한 설문

• 구민



• 공무원



- 관심도와 이행도에 대한 구민과 공무원의 인식은 대부분 중상위(4분위중 상위2분위대) 정도의 관심도와 중상위 수준의 이행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결론 및 시사점

- 구민과 공무원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는 일자리창출 분야로 나타남
일자리창출분야는 구민들 설문에서는 98표로 가장 높았고, 공무원 설문에서도 69표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77표)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관심분야로 선택함
- 구민과 공무원이 동시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번째 이슈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분야로 나타남
- 구민들이 공무원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는 환경보전과 주민참여 분야인데, 주민 참여 분야의 경우는 공무원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주민참여에 대한 민과 관의 인식은 상당한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됨
- 공무원들이 구민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는 반부패와 인권관련 이슈임. 그러나

인권이슈는 공무원 16표와 구민 10표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인권 이슈에 관한 여론이 가시적으로 형성되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수준임

2. 중대성 분석

■ 개요

- 중대성(Materiality)이라 하면, 조직의 중요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반영하는 측면 또는 이해관계자들의 평가와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측면을 말함. 유사한 용어로 ISO26000에서는 중요성(Significance)으로 사용하기도 함
- 조직은 보고서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다양한 이슈에 직면함. 이슈란 조직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반영하거나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잠재적으로 보고서에서 다룰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말함

■ 관련성 및 중대성 결정

- 관련성 결정
 - ISO26000의 모든 핵심주제는 어느 조직이나 관련성이 있음. 조직은 어떤 이슈가 관련 있는가를 식별하기 위해 모든 핵심주제를 검토해야 함. 검토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위해, 적절한 경우, 조직은 아래 항목을 점검해야 함
 - 조직 활동의 모든 범위를 열거함
 - 이해관계자를 식별함
 - 조직 자체 활동 및 조직의 영향권 내에 있는 조직 활동을 식별함
 -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법률을 감안하고, 조직 및 그의 영향권 및/또는 가치사슬 내의 다른 조직이 이러한 활동을 수행할 때 일어날 수도 있는 핵심주제 및 이슈를 결정함
 - 조직의 의사결정 및 활동이 이해관계자 및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의 범위를 조사함
 - 이해관계자 및 사회적책임 이슈가 조직의 의사결정, 활동 및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식을 조사함
 - 매우 구체적 상황에서 때때로 벌어지는 일뿐만 아니라 일상 활동에 관련된 사회적책임의 모든 이슈를 식별함

■ 중대성 결정

- 조직이 자신의 의사결정 및 활동에 관련된 폭넓은 범위의 이슈를 식별했다면, 조직은 식별된 이슈를 주의 깊게 살피고, 조직에게 가장 큰 중대성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이슈가 어떤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련의 기준을 개발해야 함
- 이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됨
 - 이해관계자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슈의 영향 정도
 - 이슈에 대해 조치를 취했을 때 또는 조치를 취하지 못했을 때의 잠재 효과
 - 이슈에 대한 이해관계자 관심의 수준
 - 이러한 영향과 관련한 책임있는 행동에 대한 사회적 기대의 식별
- 일반적으로 특별히 중대하다고 생각되는 이슈로는 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 국제행동규범과 일치하지 않는 것, 잠재적 인권 위반, 삶 또는 보건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관행 및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관행 등이 있을 수 있음

■ 조직의 영향권

- 일반적으로 조직의 영향은 다음과 같은 것에서 비롯됨
- 소유권 및 거버넌스 관련해서는 조직의 지배기구(governing body)에 대한 소유권 또는 대표권의 성질 및 정도를 포함함
- 경제적 관계의 정도 및 양쪽 조직의 관계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을 포함함. 한 조직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은 곧 다른 조직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는 것으로 이어짐
- 법적/정치적 권한인데, 예를 들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의 조항 또는 조직이 타인에게 어떤 행동을 실행시킬 능력을 승인하는 법적 권한의 존재에 기반을 둠
- 여론에 영향력을 미치는 조직의 능력 및 조직이 영향력을 미치고자 노력하는 것에 대한 여론의 영향을 포함함

■ 우선순위 결정

- 조직은 조직 및 조직의 일상 관행 전반에 걸쳐서 사회적책임을 통합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의지를 표명해야 하는데, 우선순위는 중대하고 관련된다고 여겨지는 이슈들로부터 설정함
- 조직은 우선순위를 식별하는 작업에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야 함. 우선 순위는 시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 이슈를 다루는 활동이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는지를 결정할 때에 조직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면 판단하기 용이함

- 법률 준수, 국제표준, 국제행동규범, 최신 기술 및 우수 관행에 대한 조직의 현재 성과
- 이슈가 중요한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직의 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의 여부
- 실행에 필요한 자원과 비교한 관련 활동의 잠재적 효과
-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걸리는 기간
- 신속히 다루지 않으면 상당한 비용이 들 수 있는지의 여부
- 실행의 용이성 및 속도 관련해서는 조직 내에서 사회적책임에 관한 인식 및 행동의 동기유발을 끌어올리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음
- 우선순위의 순서는 조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즉각적인 활동을 위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외에, 조직은 향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의사결정 및 활동과 관련된 이슈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도 있음
- 이 경우, 우선순위 고려사항은 미래 활동에 대한 기획의 일부를 구성하게 될 것임. 그리고 조직은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갱신해야 함

■ 남구청의 중대성 평가 적용

■ 진행개요

- 남구청의 활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 이슈를 발굴하기 위하여 ISO26000 상의 7대 핵심주제와 경제, 환경, 사회 이슈들을 검토함
- 대내외 제반 환경 및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기대와 관심 이슈들을 반영하기 위해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를 진행함
- ISO26000, GRI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UN Global Compact, UN SDGs(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등에서 강조하는 지속가능성 이슈와 국제기구 및 관련 비영리기관이 제기하는 이슈, 미디어를 통해 제기된 이슈 등을 조사하여 도출된 이슈들을 정리함
- 1차 도출된 주요 이슈들에 대하여 일선 담당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검토회의를 진행함
- 임직원과 관련기관 설문조사, 동종기관 벤치마킹, 의사 결정권자인 임원 인터뷰 등 내부 요인 분석을 통해 선정된 중요이슈와 중장기 전략과 사업계획 등과의 연관성을 측정하여 항목을 도출하고 최종 중대성 평가를 시행함

■ 이슈 목록 도출

- 남구청 주요 이슈 목록 작성을 위하여 2018년 중점사업으로 확정된 다음의 6대 과제에서 주요 이슈

를 도출하고, ISO26000에서 제시한 37개 이슈를 울산 남구청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함

- 남구청의 6대 과제에 기반하여 이슈를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경제를 살리는 도시: 일자리 창출, 새로운 먹거리 산업
 - 고용이 먼저인 도시: 일자리를 통한 복지, 맞춤형 일자리 지원
 - 안전이 확보된 도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구민 생명과 안전, 사람 중심
 - 복지가 탄탄한 도시: 소외계층 지원, 포용적 복지사회
 - 문화가 숨쉬는 도시: 문화 관광 생태 남구, 생활문화 시대
 - 행정이 깨끗한 도시: 소통과 참여 기회 확대, 투명한 공직사회 건설

■ 중대성 평가 이슈 목록

- 남구청 6대 사업에서 도출된 이슈와 ISO26000 37개 이슈를 연계하여 최종 확정된 중대성 평가 이슈 목록은 다음과 같음

이슈 항목	중요성 정도
(거버넌스)	
- 기관장의 사회책임 추진 의지	5 4 3 2 1
-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	5 4 3 2 1
- 효율적인 예산집행	5 4 3 2 1
-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5 4 3 2 1
- 조직내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체계	5 4 3 2 1
- 주민과의 의사소통 및 민의수렴체계	5 4 3 2 1
(인권)	
- 인권실태 조사	5 4 3 2 1
- 고충처리	5 4 3 2 1
- 차별금지(여성, 장애인, 아동, 노동, 다문화)	5 4 3 2 1
- 주민기본권보장(언론, 출판, 표현, 집회, 결사)	5 4 3 2 1
(노동)	
- 일자리 창출	5 4 3 2 1
- 근로조건과 사회적 보호	5 4 3 2 1
-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	5 4 3 2 1
- 근로자의 보건과 안전	5 4 3 2 1
- 인적개발과 훈련	5 4 3 2 1
(환경)	
- 환경오염 예방(수질, 대기, 폐기물) 노력	5 4 3 2 1
- 에너지절약과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5 4 3 2 1
- 기후변화 대책	5 4 3 2 1
- 환경 및 생태계 보호	5 4 3 2 1
(공정운영)	
- 부패방지	5 4 3 2 1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책임	5 4 3 2 1
-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업무 처리	5 4 3 2 1
- 산하·협력기관들과의 사회책임 이행 공동노력	5 4 3 2 1

- 재산권 존중 (주민관계)	5	4	3	2	1
-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	5	4	3	2	1
- 주민의 보건과 안전	5	4	3	2	1
-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5	4	3	2	1
- 취약계층에 필수서비스 제공 (복지행정) (지역사회)	5	4	3	2	1
- 남구 지역사회 발전	5	4	3	2	1
- 평생교육 및 문화 창달	5	4	3	2	1
- 일자리 창출 통한 구민 생활 안정	5	4	3	2	1
- 남구 새로운 먹거리 산업 창출	5	4	3	2	1
- 주민 건강과 보건	5	4	3	2	1
- 사회적 기업 활성화 등 사회적투자	5	4	3	2	1

■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

남구청의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크게 3단계로 진행됨

■ 기본자료 분석

- 국제표준분석
- 남구청 업무분장 및 전결사항 분석
- 2018주요업무계획 분석
- 유사기관 보고서 검토

■ 심층 조사, 면접, 분석

- 동종기관 보고서 검토
- 임직원 인터뷰 및 브레인스토밍
- 이해관계자설문조사 (2018.10.10.~25)
- 국제표준분석 (ISO26000 및 GRI 가이드라인)
- 진단 SR Toolkit

■ 중대성 평가 결과

■ 이슈 정렬

- 유사한 이슈들이 나열되면 중요도가 분산되어 우선순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제별로 중요한 이

슈 2~3개를 선정하여 상호 중요도 비교가 되도록 조정함

- 이해관계자 설문에서 도출된 일자리창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주민참여, 환경보호 이슈 등도 최종 중대성 평가 이슈 항목으로 포함하여 진행함
- 중대성 순위 15위 부터는 비슷한 수준의 중요도로 나타나 1~15위 이슈를 중요도 1그룹군이라고 한다면, 16위부터 기타 다른 이슈들은 중요도 2그룹군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이슈 항목	번호	중대성 순위	비고
(거버넌스)			
- 기관장의 사회책임 추진 의지	1	5	
-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	2		
- 효율적인 예산집행	3		
-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4		
- 조직내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체계	5		
- 주민과의 의사소통 및 민의수렴체계	6	6	
(인권)			
- 인권실태 조사	7	7	
- 고충처리	8		
- 차별금지(여성, 장애인, 아동, 노동, 다문화)	9	8	
- 주민기본권보장(언론, 출판, 표현, 집회, 결사)	10		
(노동)			
- 일자리 창출	11	11	(지역사회중복)
- 근로조건과 사회적 보호	12	12	
-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	13		
- 근로자의 보건과 안전	14		
- 인적개발과 훈련	15		
(환경)			
- 환경오염 예방(수질, 대기, 폐기물) 노력	16	9	
- 에너지절약과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17		
- 기후변화 대책	18	10	
- 환경 및 생태계 보호	19		
(공정운영)			
- 부패방지	20	13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책임	21		
-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업무 처리	22	14	
- 산하·협력기관들과의 사회책임 이행 공동노력	23		
- 재산권 존중	24		
(주민관계)			
-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	25		
- 주민의 보건과 안전	26	15	
-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27		
- 취약계층에 필수서비스 제공 (복지행정)	28	4	
(지역사회)			
- 남구 지역사회 발전	29		
- 평생교육 및 문화 창달	30		
- 일자리 창출 통한 구민 생활 안정	31	1	
- 남구 새로운 먹거리 산업 창출	32	2	
- 주민 건강과 보건	33		
- 사회적 기업 활성화 등 사회적투자	34	3	

■ 중요도 1그룹군 이슈 목록

- 1~15위로 평가된 중요도 1그룹군 이슈들을 정렬해 보면 다음과 같음

[표 5-2] 중요도 1그룹군 이슈

순위	이슈명
01	일자리 창출 통한 구민 생활 안정
02	남구 새로운 먹거리 산업 창출
03	사회적 기업 활성화 등 사회적투자
04	취약계층에 필수서비스 제공 (복지행정)
05	기관장의 사회책임 추진 의지
06	주민과의 의사소통 및 민의수렴체계
07	인권실태 조사
08	차별금지(여성,장애인,아동,노동,다문화)
09	환경오염 예방(수질,대기,폐기물) 노력
10	기후변화 대책
11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중복지)
12	근로조건과 사회적 보호
13	부패방지
14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업무 처리
15	주민의 보건과 안전

■ 중대성 평가 메트릭스

이해관계자 관심도

[illegible]

남구청 정책 영향도

■ 결론

- 주제별로 이슈를 그룹핑하기에 따라 영향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평가 취지를 최대한 살려 주제별, 이슈별로 양과 질을 통합적으로 평가함
- 이해관계자 설문 분석에서 중요한 이슈로 제기된 일자리 창출 및 주민참여, 환경보호,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이슈들도 중대성 평가 항목에 포괄하여 진행된 바, 주요 이해관계자 설문 조사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임
- 전체적으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이슈의 중요성을 가장 높게 평가함. 이는 구민 및 공무원 설문 조사 결과와도 상당부분 일치하는 결과임
- 남구청의 경우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업무 및 사무가 법과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조직의 경우 임의적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중대성을 비교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여러 제약이 있고, 그 결과 해석이 업무 현실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 일자리 창출 이슈의 경우, 지역사회 발전 이슈이기도 하면서 노동이슈이기도 한데, 이를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역사회 항목으로 배치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구민 생활 안전’ 항목으로 정책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노동권 보호 및 인권 보호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남구청 차원에서 중요성을 갖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님
- 전체적으로 남구청의 중대성 평가 결론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구민 생활 안정 및 남구 차원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창출하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음
- 그 다음 순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서비스 제공 등 복지행정의 요구와 주민참여행정의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행정조직의 특성상 기관장의 의지가 모든 정책 집행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주민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한 민의 수렴의 필요성이 다시금 확인됨
- 인권보호분야 및 환경 분야와 노동권 보호는 전통적인 담론으로 일관된 중요성을 보이고 있으며, 새 정부 출범이후 부패방지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남구청의 사회적 책임 화두가 확산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06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적 책임(ISO 26000) 구현을 위한 지속가능성 보고서

GRI, UNGC 연계성 분석

1. 지속가능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GRI) 연계 분석
2. UN Global Compact 연계 분석

제6장 GRI, UNGC 연계성 분석

1. 지속가능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GRI) 연계 분석

■ 개요

- 본 연구의 목적은 울산 남구청 ISO26000 인증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보고서 작성과 UNGC 등록도 포함됨에 따라 남구청으로 하여금 GRI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준비된 보고서가 서술하는 GRI 보고 측면과 지표가 ISO 26000 각 절들의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를 돕는 것이 필요함
- 사회적책임에 대한 ISO지침은 피고용인, 지역사회, 투자자, 규제자와 같은 내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회적책임 성과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보고를 하는 가치를 강조하고 있음
- 이러한 가치는 보고에 대한 높은 국제적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며, 또는 경제적, 환경적 및 사회적 성과에 대한 공시를 일반적인 관행으로 만들고자 하는 GRI의 사명과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함
- ISO 26000이 사회적책임 성과 보고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ISO 26000 내용은 GRI 보고 가이드라인에 있는 주제와 유사한 범위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ISO 지침은 조직의 보고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의 활동을 구성하고 구조화하는 데 도움을 줌
- 새로운 ISO 지침에 따른 GRI 프레임워크 연계 사용 법은 울산 남구청이 사회적 책임 정책 및 관행에 대해 측정하고 보고하는 데 있어서 실용적인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음

■ 보고 프로세스에 대한 ISO와 GRI의 지침

- 보고 주제 결정 및 성과지표와 기타 특정 공시 식별
 - ISO 26000은 사회적책임 보고서가 신뢰성을 가지려면, 이해관계자의 관심에 잘 대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조직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챕터는 이러한 점에 대한 몇 가지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함
 - GRI 가이드라인도 “중요성” 원칙을 통해 보고에 있어서 비슷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음. GRI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만약 어떤 이슈들이 조직에 중대한 경제적, 환경적 또는 사회적 영향을 주거나 이해

관계자의 평가와 결정에 심각하게 영향을 준다면 그러한 이슈들은 중요하다고 간주됨

- ISO 26000 지침에 따르면 사회적책임 보고서는 “지속 가능발전 맥락에서 조직의 운영 성과를 보여 주어야.” 함. GRI는 “지속가능성 배경” 원칙에 따라 보다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음. 또한 GRI는 경영방식 공시(DMA)에 대한 가이드라인 조항에 따라 배경 정보의 보다 구체적인 유형을 보고할 것을 권고함
- ISO 26000도 사회적책임 보고서가 “[조직의] 사회적 책임 성과에 대한 완전한 모습”을 표현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GRI의 “완전성” 원칙이 의미하는 바와 유사함
- ISO 26000 지침은 사회적책임의 목표, 성과 및 부족한 점에 대해 의사소통할 것을 요구함. 이것은 조직의 목표 및 성과, 성공 사례 및 결점, 기타 배경 정보를 요구하는 GRI의 프로필 공시와 경영방식 공시의 내용과 유사함

■ 보고 정보의 품질보증

- ISO 26000은 사회적책임 보고서와 기타 의사소통은 비교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있고, 정확하고, 균형적/ 투명하며 시기적절하여야 할 것을 간략히 설명하고 있음
- GRI는 명확성, 정확성, 균형, 적시성, 비교가능성의 원칙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에 신뢰성 원칙을 추가하고 있고, 이러한 원칙들은 모두 보고 정보의 품질을 보증하는 데 도움되는 방향으로 가게 함

■ GRI G4 가이드라인과 ISO 26000 연계표

- ISO 26000과 GRI 가이드라인은 매우 유사한 주제 범위를 다루며, 이 연계표는 ISO 26000 표준 사용을 하고자 하는 울산광역시 남구청이 GRI 가이드라인에 기초해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한 것임. 표의 왼쪽 칸은 GRI의 공시항목, 오른쪽 칸은 GRI의 공시항목과 관련된 ISO 26000의 핵심주제 및 해당 절을 가리킴

GRI G4 가이드라인 공시 – 경영방식(DMA) 또는 성과지표		ISO 26000 사회적책임 핵심주제	ISO 26000 해당절
이해관계자 참여 원칙		지역사회 참여	6.8.3
경계 규약			
1.1	전략 및 분석	가치사슬 내에서의 사회적책임 촉진	6.6.6
1.2			
2.3	조직 프로파일	조직 거버넌스	6.2
4.1- 4.17	지배구조, 책임 및 참여		
3.13	검증		
일반 보고 주석 – 검증		검증	7.5.3
사회 범주(인권, 노동, 제품책임 및 사회 포함)			
인권 DMA		조직 거버넌스 인권	6.2 6.3
HR1	인권보호조항이 포함되거나 인권심사를 통과한 주요 투자협약 건수 및 비율	인권 실사 연루/공모회피 가치사슬 내에서의 사회적책임 촉진	6.3.3 6.3.5
HR2	사업과 관련된 인권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근로자 훈련 시간 및 훈련을 받은 근로자의 비율	인권 연루/공모회피	6.3 6.3.5
HR3	차별 사건의 수와 이에 대한 시정조치	인권 고충 처리 차별 및 취약집단 근로에서의 기본원칙 및 권리 고용 및 고용관계	6.3 6.3.6 6.3.7 6.3.10 6.4.3
HR4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침해하였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사업장 및 공급업체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	인권 실사 인권 리스크 상황 연루/공모회피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 근로에서의 기본원칙 및 권리 고용 및 고용관계 사회적 대화	6.3 6.3.3 6.3.4 6.3.5 6.3.8 6.3.10 6.4.3 6.4.5
GRI G4 가이드라인 공시 – 경영방식(DMA) 또는 성과지표		ISO 26000 사회적책임 핵심주제	ISO 26000 해당절
HR5	아동노동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파악되는 사업장 및 공급업체와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폐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	인권 실사 인권 리스크 상황	6.3 6.3.3 6.3.4
HR6	강제노동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파악되는 사업장 및 공급업체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폐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	연루/공모회피 차별 및 취약집단 근로에서의 기본원칙 및 권리	6.3.5 6.3.7 6.3.10
HR7	사업과 관련된 인권 정책 및 절차에 관한 훈련을 받은 보안요원의 비율	인권 연루/공모회피 고용 및 고용관계 가치사슬 내에서의 사회적책임 촉진	6.3 6.3.5 6.4.3 6.6.6

HR8	원주민 권리 침해 사건의 수와 이에 대한 조치	인권 고충처리 차별 및 취약집단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 재산권 존중	6.3 6.3.5 6.4.3 6.6.6
HR9	인권검토 또는 인권영향평가 대상인 사업장의 수와 비율	인권 고충처리 차별 및 취약집단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 재산권 존중	6.3 6.3.6 6.3.7 6.3.8 6.6.7
HR10	인권기준에 의해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 비율	인권 실사	6.3 6.3.3
HR11	공급망 내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인권영향과 이에 대한 조치	연루/공모회피 고용 및 고용관계 가치사슬 내에서의 사회적책임 촉진	6.3.5 6.4.3 6.6.6
HR12	공식 고충처리제도에 의해 접수, 발견, 해결된 인권고충 건수	인권 고충 처리	6.3 6.3.6
사회 DMA		조직 거버넌스 공정 운영관행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	6.2 6.6 6.8
SO1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영향평가, 개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사업장의 비율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 고용 창출 및 기능 개발 부 및 소득창출 재산권 존중	6.3.9 6.8 6.8.5 6.8.7* 6.6.7
SO2	지역사회에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	공정 운영관행 반부패	6.6 6.6.3
SO3	부패 위험을 평가한 사업장의 수 및 비율과 파악된 중요한 위험		
SO4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공지와 훈련		
SO5	확인된 부패 사례와 이에 대한 조치		
SO6	기부한 정치자금의 총 규모(국가별, 수령인/수혜자별)	공정 운영관행 책임있는 정치적 참여 지역사회 참여	6.6 6.6.4 6.8.3
SO7	경쟁저해행위, 독과점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의 수와 그 결과	공정 운영관행 공정 경쟁 재산권 존중	6.6 6.6.5 6.6.7
GRI G4 가이드라인 공시 - 경영방식(DMA) 또는 성과지표		ISO 26000 사회적책임 핵심주제	ISO 26000 해당절
SO8	법률 및 규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및 비금 전적 제재 건수	공정 운영관행 재산권 존중 부 및 소득창출*	6.6 6.6.7 6.8.7
SO9	사회 영향 평가기준을 이용하여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의 비율	공정 운영관행 공정 경쟁	6.6 6.6.5
S10	공급망에서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사회에 미치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과 이에 대한 조치	공정 운영관행 공정 경쟁 재산권 존중	6.6 6.6.5 6.6.7

S11	공식 고충처리제도에 의해 접수, 발견, 해결된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충 건수	인권 고충 처리	6.3 6.3.6
노동 DMA		조직 거버넌스 노동관행 근로에서의 기본원칙 및 권리	6.2 6.4 6.3.10
LA1	신규 채용 근로자와 이직 근로자의 인원수 및 비율(연령별, 성별, 지역별)		
LA2	주요 사업장별 임시직 또는 시간제 근로자에게는 제공되지 않고 상근직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	노동관행 고용 및 고용관계 근로조건 및 사회적 보호	6.4 6.4.3 6.4.4
LA3	경영상 변동에 관한 최소 통지기간(단체협약상의 명시 여부 포함)		
LA4	경영상 변동에 관한 최소 통지기간(단체협약상의 명시 여부 포함)	노동관행 고용 및 고용관계 근로조건 및 사회적 보호 사회적 대화	6.4 6.4.3 6.4.4 6.4.5
LA5	산업보건안전 프로그램의 모니터 및 자문을 지원하는 노사공동보건안전위원회가 대표하는 근로자 비율	노동관행 근로에서의 보건 및 안전	6.4 6.4.6
LA6	부상 유형, 부상 발생률, 업무상 질병 발생률, 휴직일수 비율, 결근률, 업무 관련 사망자 수(지역별, 성별)		
LA7	업무상 질병 발생률 또는 발생 위험이 높은 근로자		
LA8	노동조합과의 정식 협약 대상인 안전보건 사항	노동관행 근로에서의 보건 및 안전	6.4 6.4.6
LA9	근로자 1인당 한 해에 받는 평균 훈련시간(성별, 근로자 범주별)	노동관행 작업장에서의 인적 개발 및 훈련	6.4 6.4.7
LA10	지속적인 고용을 유지하고 은퇴 후 관리를 도와주는 직무교육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노동관행 작업장에서의 인적 개발 및 훈련 고용 창출 및 기능 개발	6.4 6.4.7 6.8.5
LA11	업무성과 및 경력개발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받은 근로자 비율(성별, 근로자 범주별)	노동관행 작업장에서의 인적 개발 및 훈련	6.4 6.4.7
LA12	범주별 거버넌스 기구 및 근로자의 구성 현황(성별, 연령별, 소수집단별, 기타 다양성 지표별)	차별 및 취약집단 근로에서의 기본원칙 및 권리 노동관행 고용 및 고용관계	6.3.7 6.3.10 6.4 6.4.3
LA13	남성 대비 여성의 기본급여 및 보수 비율(근로자 범주별, 주요 사업장별)	차별 및 취약집단 근로에서의 기본원칙 및 권리 노동관행 고용 및 고용관계 근로조건과 사회적 대화	6.3.7 6.3.10 6.4 6.4.3 6.4.4
LA14	노동관행 기준에 의해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 비율	노동관행 고용 및 고용관계	6.4 6.4.3
LA15	공급망 내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노동관행에 미치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과 이에 대한 조치	가치사슬 내에서의 사회적책임 촉진	6.6.6

LA16	공식 고충처리제도에 의해 접수, 발견, 해결된 노동관행에 관한 고충 건	노동관행 고용 및 고용관계 사회적 대화 인권 고충 처리	6.4 6.4.3 6.4.5 6.3 6.3.6
GRI G4 가이드라인 공시 - 경영방식(DMA) 또는 성과지표		ISO 26000 사회적책임 핵심주제	ISO 26000 해당절
제품책임 DMA		조직 거버넌스 공정 운영관행 소비자 이슈	6.2 6.6 6.7
PR1	개선을 위해 안전보건 영향을 평가한 주요 제품 및 서비스군의 비율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가치사슬에서의 사회적책임 촉진	6.3.9 6.6.6
PR2	제품생명주기 동안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보건 영향에 관한 법률규정 및 자율규정을 위반한 사건의 수(처분 결과)	소비자 이슈 소비자의 보건 및 안전 보호 지속가능소비	6.7 6.7.4 6.7.5
PR3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 정보와 라벨링 절차에 요구되는 제품 및 서비스 정보 유형, 그리고 해당 정보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군의 비율	소비자 이슈 공정 마케팅, 사실적이고 편중되지 않은 정보 및 공정 계약 관행 소비자의 보건 및 안전 보호	6.7 6.7.3 6.7.4 6.7.5
PR4	제품 및 서비스 정보와 라벨링에 관한 법률규정 및 자율규정을 위반한 사건의 수(처분 결과)	지속가능소비 소비자 서비스, 지원과 불만 및 분쟁 해결 교육 및 인식 제고	6.7.6 6.7.9
PR5	고객 만족도 조사결과	소비자 이슈 소비자의 보건 및 안전 보호 지속가능소비 소비자 서비스, 지원과 불만 및 분쟁 해결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 교육 및 인식 제고	6.7 6.7.4 6.7.5 6.7.6 6.7.8 6.7.9
PR6	금지되거나 논란이 있었던 제품의 판매	소비자 이슈 소비자의 보건 및 안전 보호	6.7 6.7.4
PR7	광고, 프로모션, 후원 등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법률규정과 자율규정을 위반한 사건의 수(처분 결과)	소비자 이슈 공정 마케팅, 사실적이고 편중되지 않은 정보 및 공정 계약 관행 소비자 서비스, 지원과 불만 및 분쟁 해결 교육 및 인식 제고	6.7 6.7.3 6.7.6 6.7.9
PR8	고객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고객정보 분실 사실이 입증된 불만 건수	소비자 이슈 소비자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	6.7 6.7.7
PR9	제품, 서비스공급 및 사용에 관한 법규 위반에 대한 주요 벌금의 액수	소비자 이슈 소비자 서비스, 지원과 불만 및 분쟁 해결*	6.7 6.7.6

경제 범주			
경제 DMA		조직 거버넌스	6.2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	6.8
EC1	직접적인 경제가치 발생과 분배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	6.8
		지역사회 참여	6.8.3
		부 및 소득창출	6.8.7
		사회적 투자	6.8.9
EC2	기후변화가 조직의 활동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및 기타 위험과 기회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6.5.5
EC3	조직의 확정급여형 연금제도 채무 총당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	6.8
		부 및 소득창출	6.8.7
EC4	정부의 재정지원	조직 거버넌스	6.2
EC5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최저 임금과 비교한 성별 기본 초임 임금 비율	근로조건 및 사회적 보호	6.4.4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	6.8
EC6	주요 사업장의 현지에서 고용된 고위 경영진의 비율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	6.8
		고용 창출 및 기능 개발	6.8.5
		부 및 소득창출	6.8.7
EC7	사회기반시설 투자와 지원 서비스의 개발 및 영향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6.3.9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	6.8
		지역사회 참여	6.8.3
		교육 및 문화*	6.8.4
		기술 개발 및 기술접근성* 부 및 소득창출	6.8.5
		사회적 투자	6.8.7
			6.8.9
EC8	영향 규모 등 중요한 간접 경제효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6.3.9
		가치사슬에서의 사회적책임 촉진	6.6.6
		재산권 존중 필수 서비스 접근*	6.6.7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	6.7.8
		고용 창출 및 기능 개발	6.8
		기술 개발 및 기술접근성*	6.8.5
		부 및 소득 창출	6.8.6
		사회적 투자	6.8.7
			6.8.9
EC9	주요 사업장에서 현지 공급업체에 지급하는 지출 비율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	6.8
		지역사회 참여	6.8.3
		부 및 소득 창출	6.8.7
		가치사슬 내에서의 사회적책임 촉진	6.6.6
환경 범주			
환경 DMA		조직 거버넌스	6.2
		환경	6.5
EN1	사용한 원재료의 종량이나 부피	환경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6.5 6.5.4
EN2	재생투입 원재료 사용 비율		
EN3	조직 내 에너지소비		
EN4	조직 밖에서의 에너지소비		
EN5	에너지 집약도		
EN6	에너지소비 감축		
EN7	제품 및 서비스의 에너지 요구량 감축		
EN8	수원별 총 취수량		
EN9	취수에 의해 중요한 영향을 받는 수원		
EN10	재생 및 재사용 용수의 비율과 총량		

EN11	보호 지역 및 보호지역 밖의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지역 또는 그 인근에서 소유, 임대, 관리하는 사업장	환경 환경 보호, 생물다양성 및 자연 서식지 복원	6.5 6.5.6
EN12	보호 지역 또는 보호지역 밖의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지역에서의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활동, 제품, 서비스가 미치는 중요한 영향에 대한 설명		
EN13	서식지 보호 또는 복구		
EN14	사업장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역에 서식지를 둔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의 멸종위기 종의 수 및 국가 보존 종의 수(멸종 위기단계별로)		
EN15	직접 온실가스(GhG) 배출(ScOpe 1)	환경	6.5
EN16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GhG) 배출(ScOpe 2)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6.5.5
환경 DMA		조직 거버넌스	6.2
		환경	6.5
EN17	기타 간접 온실가스(GhG) 배출(ScOpe 3)	환경 오염예방	6.5 6.5.3
EN18	온실가스(GhG) 배출 집약도		
EN19	온실가스(GhG) 배출 감축		
EN20	오존파괴물질(ODS) 배출		
EN21	NOX, SOX, 및 기타 중요한 대기 배출물	환경 오염예방	6.5 6.5.3
EN22	수질 및 도착지별 총 방류량		
EN23	유형 및 처리방법별 총 폐기물 중량		
EN24	중요한 유해물질 유출 건수 및 유출량		
EN25	바젤협약2 부록 I, II, III 및 VIII의 조건에 따라 유해물로 간주되는 폐기물 중 운송, 수입, 수출 또는 처리된 폐기물의 중량 및 국제적으로 출하되는 운송 폐기물의 비율	환경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환경 보호, 생물다양성 및 자연 서식지 복원	6.5 6.5.4 6.5.6
EN26	조직의 방류와 지표유출로 인해 중요한 영향을 받는 수역 및 관련 서식지의 성격, 크기, 보호상태, 생물다양성 가치		
EN27	제품 및 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완화 정도		
EN28	판매된 제품 및 그 포장재의 재생 비율 (범주별)	환경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지속가능소비	6.5 6.5.4 6.7.5
EN29	환경법 및 규정 위반으로 부과된 주요 벌금의 액수 및 비금전적 제재조치의 수	환경	6.5
EN30	사업 운영을 위한 제품, 기타 재화, 재료의 운송과 인력 구성원 수송이 환경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	환경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가치사슬에서의 사회적책임 촉진	6.5 6.5.4 6.6.6
EN31	환경보호를 위한 총 지출과 투자(유형별)	환경	6.5

EN32	환경 기준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 비율	환경	6.5
		오염예방	6.5.3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6.5.4
		가치사슬에서의 사회적책임 촉진	6.6.6
EN33	공급망 내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환경영향 및 이에 대한 조치	환경	6.5
		오염예방	6.5.3
EN34	공식 고충처리제도를 통해 제기, 처리, 해결된 환경영향 관련 고충 건수	환경	6.5
		인권	6.3
		고충 처리	6.3.6

2. UN Global Compact 연계 분석

- 유엔글로벌콤팩트 분야의 원칙들과 ISO26000 핵심 주제의 연계

유엔글로벌콤팩트 이슈 영역	ISO26000조항	ISO26000핵심주제 / 이슈
인권	6.3	인권
	6.3.3	충분한 주의의무
	6.3.4	인권 위험 상황
	6.3.5	공모의 지양
	6.3.6	고충처리
	6.3.7	차별 및 약자집단
	6.3.8	시민권 및 정치권
	6.3.9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6.3.10	직장에서의 기본권
	Box 7	아동노동
노동	6.3	인권
	Box 7	아동노동
	6.3.3	충분한 주의의무
	6.3.4	인권 위험 상황
	6.3.7	차별과 약자집단
	6.3.8	시민권 및 정치권
	6.3.10	직장에서의 기본권
	6.4	노동관행
	6.4.3	고용 및 고용관계
	6.4.4	근로조건 및 사회적 보호
	6.4.5	사회적 대화
	6.4.6	직장에서의 보건 및 안전
	6.4.7	인적 개발 및 직장 내 훈련
	6.6	공정운영 관행
	6.6.4	책임있는 정치참여

환경	6.5	환경
	6.5.3	오염 방지
	6.5.4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6.5.5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6.5.6	자연환경의 보호 및 복원
	6.6	공정운영 관행
	6.6.4	책임있는 정치참여
	6.6.6	영향권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 제고
반부패	6.6	공정운영 관행
	6.6.3	부패 방지
	6.6.4	책임있는 정치참여
	6.6.6	영향권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 제고

- 유엔글로벌콤팩트 원칙의 실행을 촉진시키기 위한 ISO26000의 적용

인권

유엔글로벌콤팩트 원칙 1-2	ISO 26000 인권(6.3), 영역 1-8
원칙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1. 충분한 주의의무
	2. 인권 위험 상황
	3. 공모 지양
	4. 고충 처리
원칙 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5. 차별 및 약자집단
	6. 시민권 및 정치권
	7.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8. 직장에서의 기본권

ISO26000에서 다루어진 인권 영역의 모든 부문은 유엔글로벌콤팩트 첫 두 가지 원칙에 다 포함이 되어 있음. ISO26000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을 어떻게 지지해야 하는가와 인권남용 연루방지를 위한 지침을 제공해 줌

■ 이슈 1. 충분한 주의의무 (6.3.3)

- ISO26000은 기업들이 업무나 관계상 실제로 일어나는 문제들과 잠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인권 관련 리스크에 대해 주도적인 행동을 취하라고 제안함. 그중에서 주요 요소로서 회사가 활동하는 국가의 상황과 아울러 회사의 주요 관계들이 고려되어야 함. 충분한 주의의 과정은 지속적이고 분석적으로 평가되어야 함

■ 이슈 2. 인권위험 상황(6.3.4)

- ISO26000은 잠재적인 인권침해의 리스크 평가를 감안하여 고려사항에 관한 체크리스트를 추려내었음. ISO26000은 조직들이 특정산업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전에 인권문제를 평가할 때 도움을 주며, 기업들이 인권침해의 잠재적 리스크가 있는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언을 줌

■ 이슈 3. 공모의 지양(6.3.5)

- 유엔글로벌콤팩트의 2번째 원칙이 이 이슈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연루의 범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기 위해, ISO26000은 공모를 3가지로 나누고 있음
 - 직접적 공모: 직접적 공모는 조직이 인권침해를 알면서 돕는 것을 의미함
 - 혜택공모: 혜택공모는 다른 사람이 행한 인권남용으로부터 조직이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 것임
 - 암묵적 공모: 암묵적 공모는 체계적이거나 지속적인 인권문제에 대해 관련 당국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이슈 4. 고충처리(6.3.6)

- 필요한 모든 절차가 구비되어 있더라도, 기업의 인권문제의 영향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이런 논쟁문제를 다루기 위한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

■ 이슈 5. 차별 및 약자집단(6.3.7)

- 인종, 피부색, 성, 나이, 또는 국적 등의 불공정한 이유로 인한 차별의 금지는 인권법의 근본을 이루는 원칙임. 기업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ISO26000은 여성, 장애인, 아동, 원주민, 이주민 등 약자집단의 관리에 특별히 초점을 두고 있음

■ 이슈 6. 시민권 및 정치권

- 시민권과 정치권에 포함되어 있는 권리들은 ISO26000의 다음과 같은 문구에 기술되어 있음: “생존의 권리, 고문으로부터의 자유, 안전의 권리, 재산 소유의 권리, 자유 및 integrity에 대한 권리, 형사 고발 직면 시 적법절차와 공정한 청문회를 거칠 권리. ISO26000은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의견과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공공서비스 접근, 투표 참여의 자유 등도 포함되어 있음.”

■ 노동

유엔글로벌콤팩트 원칙 3-6	ISO 26000 인권(6.3), 영역 1-8
원칙 3: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한다.	8. 직장에서의 기본권
원칙 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한다.	ISO26000 노동관행 (6.4.) 이슈 1-5
원칙 5: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한다.	1. 고용 및 고용관계
원칙 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2. 근로조건 및 사회적 보호
	3. 사회적 대화
	4. 직장에서의 보건 및 안전
	5. 인적 개발 및 직장 내 훈련

유엔글로벌콤팩트와 ISO 26000에서, 일과 노동관행의 영역에서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규약, 선언, 그리고 기준들이 기반이 됨

■ ISO 26000, 인권(6.3)

■ Issue 8. 직장에서의 기본권 (6.3.10)

- ISO 26000, 인권, 이슈 8 “직장에서의 기본권”은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제3~6원칙과 동일하다. ISO 26000 이슈와 유엔글로벌콤팩트 원칙들은 단체결사의 자유, 강제노동의 제거, 아동노동의 폐지, 그리고 고용과정과 직업 내 차별 제거를 다루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근로상의 기본원칙과 권리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f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에 기반을 두고 있음

■ ISO 26000, 노동 관행 (6.4)

■ Issue 1,2. 고용 및 고용관계 (6.4.3), 근로조건 및 사회적 보호 (6.4.4)

- “고용 및 고용관계” 이슈는 기업들에게 강제, 의무노동을 피하기를 당부하는 글로벌콤팩트의 제4원칙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이는 또한, “직장에서의 기본권”에도 언급된다고 볼 수 있음. (ISO 26000 6.3.10) 기업들은 자식들이 강제, 의무노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음. 이는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도급업자들과 공급자들과의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일인데, 다른 나라들의 법률체계의 폭이 널 넓거나 합법적으로 고용관계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일임. 강제, 의무노동을 폐지할 수 있는 방법 중 한가지는 바로 통제되고 합법적인 고용과 고용관계를 통하는 것임. “근로조건 및 사회적 보호” 이슈는 임금, 작업시간, 휴식기간, 휴

일, 징계관행, 해고관행, 산모보호, 그리고 복지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음. 이런 조건들의 박탈은 강제 노동이 생기게 만듦. 이 이슈는 글로벌 콤팩트 제 4원칙과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

■ Issue 3. 사회적 대화 (6.4.5.)

- ISO 26000는 이 이슈를 이렇게 정의함 : “경제나 사회적인 이슈에 관련된 정부대표자, 고용자, 노동자들의 공통관심사를 다루는 모든 종류의 협상, 상의, 또는 정보교환.”(6.4.5.1.) 단체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권리를 다루는 글로벌콤팩트 제3원칙과 분명한 연관성을 볼 수 있음

■ Issue 4. 직장에서의 보건 및 안전(6.4.6)

- 이 이슈는 직원들의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 보건과 안전을 기업들이 보호하도록 권함. ISO 26000은 질 높은 근로 보건과 안전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합동 노사 보건 및 안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같은 수의 경영진과 직원 대표들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임

■ Issue 5. 인적 개발 및 직장 내 훈련(6.4.7)

- 이 이슈는 기업들이 직원들의 자기충족감과 고용가능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직원들에게 능력과 기술을 더욱 넓힐 수 있도록 기회들을 제공하도록 당부함. ISO 26000은 이런 정책들이 남녀평등 개선과 건강 및 복지 증진 등을 통해 인력 개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함

■ 환경

유엔글로벌콤팩트 원칙 7-9	ISO 26000 인권(6.5), 영역 1-4
원칙 7: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한다.	1. 오염 방지
	2.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원칙 8: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한다.	3.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4. 자연환경의 보호 및 복원
원칙 9: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ISO 26000과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기업들에게 더욱 친환경적인 비즈니스 관행을 도입하도록 가이드함. 글로벌콤팩트의 환경원칙들은 ISO 26000도 언급하고 있지만 제 9원칙은 따로 언급되지 않고 “친환경적인 기술과 관행 이용”의 한 부분으로서 제시됨

■ Issue 1. 오염 방지 (6.5.3)

- ISO 26000가 언급하는 오염에는 공기오염, 물로 버려지는 배출물, 독성화학물도 있는가 하면 소리, 진동, 감염성 요소들과 방사선도 포함됨. 이 이슈는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처하여 예방적인 자세를 제안하는 글로벌콤팩트 제 7원칙과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Issue 2.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 (6.5.4.)

- ISO 26000은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에 있어 3가지에 초점을 둠 : 에너지 효율성, 물 소비, 물과 자원 접근의 효율성. 유엔글로벌콤팩트 제 8원칙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더 나은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특정 제품이나 물질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혁신적인 생산과정이나 제품을 개발해야 함

■ Issue 3.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6.5.5)

- ISO 26000은 기업들이 온실가스(GHG)의 직간접적인 출처를 찾아내고 그 영향권을 조사할 것을 제안함.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 기록, 그리고 보고해야 하며 계속해서 그 양을 줄이고 최소화하여야 한다. 하지만 감소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함. 기업들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의 메커니즘을 동원해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ISO 26000은 또한 기업들은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사회적 영향과 건강, 번영, 그리고 인권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해 봐야함

■ Issue 4. 자연환경의 보호 및 복원(6.5.6.)

- 이 이슈는 기업들이 생태계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과 서비스들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함. 기업운영으로 인해 생태계가 악영향을 받게 될 경우 회복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시행하는 것은 물론, 손상된 생태계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음. ISO 26000은 구체적으로 생물 다양성을 소중하게 여기고 보호할 것을 제안함

■ 반부패

유엔글로벌콤팩트 원칙 10	ISO 26000 공정운영 관행(6.6), 이슈 1,2,4
원칙 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공정운영 관행)
	1. 부패 방지
	2. 책임있는 정치참여
	4. 영향권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 제고

- 부패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큰 걸림돌이 되고 특히 빈곤한 공동체 내에서 더더욱 큰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인식됨. 부패가 민간부문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데 이는 경제성장을 방해하고 공평한 경쟁을 왜곡시키며, 법적으로나 평판에 큰 리스크를 가져다 줌. 특히 전세계적으로 기업 거버넌스 규정들이 개발되면서, 기업들도 평판과 주주 이익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스스로 반부패 방침들을 세우도록 압력이 가해지고 있음
- 유엔글로벌콤팩트는 반부패를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핵심적인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 ISO 26000은 반부패를 다른 관련 이슈 중 하나로 인식하면서, “공정한 운영관행”의 맥락에서 다루고 있음. ISO 26000은 공정한 운영관행은 한 기관이 타인과의 관계상 윤리적 행동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함. 이는 정부기관, 기업, 또는 다른 기관들과의 관계를 모두 포함하는데 이에 공급자, 계약자, 경쟁자, 그리고 자식들이 직접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도 포함됨

■ Issue 1. 부패 방지 (6.6.3)

- ISO 26000에 의하면, 부패는 위탁된 권력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것을 말함. 부패는 두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는 적극적인 부패, 즉 뇌물을 건네는 것과 수동적인 부패, 즉 뇌물을 받는 것임. 부패는 물론 여러 가지의 형태를 가질 수 있는데 국내 또는 국외 공무원 관련 뇌물과 민간부문 내의 뇌물, 이해의 상충, 사기, 돈 세탁, 영향 행사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ISO 26000은 또한 부패가 다른 문제들과도 연관성을 가짐을 인식함. “부패는 인권침해, 정치적 과정의 왜곡, 그리고 환경파괴로도 이어질 수 있다. 부패는 또한 경쟁, 부의 분배, 그리고 경제성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ISO 26000, 6.6.3.1)

■ Issue 2. 책임있는 정치참여 (6.6.4)

- 정치적 또는 사회적 지지단체들에 대한 재정적, 현물 지급의 지원 형식과 마찬가지로, 불공평한 경쟁 또는 일방적인 영향을 피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투명성임

■ Issue 4. 영향권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 제고 (6.6.6.)

- 이 이슈는 ISO 26000과 같은 안내기준의 필요성과 유엔글로벌콤팩트 원칙들의 적용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내용임. 언급된 내용은 모든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들이 자사의 기업운영과 공급망에 있어서 기업의 책임에 관한 원칙들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기본적인 기대사항임. 이슈들의 우선순위는 유엔글로벌콤팩트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 ISO 26000 이슈는 기업들이 원칙에 입각하여 언급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이에 따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 해줌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 인권 Human Rights

- 원칙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 원칙 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 노동 Labour

- 원칙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 원칙 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 원칙 5: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 원칙 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 환경 Environment

- 원칙 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 원칙 8: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 원칙 9: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 반부패 Anti-Corruption

- 원칙 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07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적 책임(ISO 26000) 구현을 위한 지속가능성 보고서

정책 제언

1. 조직 거버넌스
2. 인권
3. 노동
4. 환경
5. 공정운영
6. 소비자
7.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

제7장 정책 제언

이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사회적책임 국제표준인 ISO26000에서 제시하고 있는 7대 핵심주제별로 이슈를 평가하고, 각 이슈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1. 조직 거버넌스

- ISO26000에서는 조직 거버넌스 분야에 별도의 이슈를 두지 않고, 12개 항목에 걸쳐 조직의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구조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하고 있음. 12개 항목 가운데 중요도가 높은 5개 항목에 대하여 이슈 평가를 해 보면, 아래와 같음

조직 거버넌스 이슈	이슈 평가	제언
1. 최고책임자의 의지표명과 전략, 목표 및 세부목표 수립	• 남구청 비전 및 방침, 규정지표에 최고 책임자의 의지가 잘 반영되어 있음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보다 더 다양한 방식으로 구민들과 소통해 나갈 필요가 있음
2. 경제적 및 비경제적 인센티브 시스템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 2항) 및 일과 성과중심의 활력있는 조직 운영 계획에 반영되어 있음	사회적 가치 및 사회적 책임 수행과 관련한 성과급(인센티브) 제도가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시행될 필요가 있음
3. 재무, 자연, 인적자원의 효율적 사용	• 재무 예산 운영 현황 및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그리고 일과 성과중심의 활력있는 조직 운영 계획에 잘 반영되어 있음.	공공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역할이며, 적절히 잘 수행되고 있음
4. 여성 임직원 승진 기회 촉진	• 남구청 직급별 여성비율 자료 등에 여성 임직원 현황이 나와 있음. 2018.5월 현재, 5급이상 여성 비율이 3명으로 전체 (37)의 8.1%로 매우 낮은 수준임	향후 여성비율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여성 임직원들을 위한 승진 기회 촉진 제도는 더 보완이 필요함.
5. 의사결정을 하는 권한, 책임, 역량 균형과 위원회 활동	• 본청 전결 사항 및 업무분장, 그리고, 열린 제안제도 활성화 계획 등에서 관련 내용이 확인됨. 특히, 위원회 조직의 심의, 의결 프로세스를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이 활발함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잘 운영되고 있음. 다양한 위원회 구성은 구민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의 창구가 됨. 보다 내실 있는 운영과 내·외부에 적극적인 내용 공지와 공유가 요구됨

■ 조직 거버넌스 제언

■ 최고책임자의 의지표명과 전략, 목표 및 세부목표 수립 분야

- 울산 남구청은 사회책임경영을 위하여 최고책임자의 의지표명과 전략, 목표, 세부목표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특히, 6개의 구정지표와 2018년 주요업무 계획을 통하여, 적절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인권, 노동, 환경, 공정운영, 소비자, 지역사회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 확인됨
- 향후 한단계 더 높은 사회책임경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고책임자를 비롯하여 사회책임전담부서장 등 전 임직원이 사회책임 가치 체계와 구성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남구청 행정에 응용하고 실행하는 노력이 필요함
- 2018년부터 전국의 각급 지자체에서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행정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회적 책임은 최적의 방법론이 될 수 있음
- 〈참고사례〉 : 공공기관의 ISO26000 활용 촉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과제 연구 보고서 및 경기도시공사, 천안시시설관리공단 등 적용사례

■ 경제적 및 비경제적 인센티브 시스템 분야

- 남구청은 현재 다양한 경제적 및 비경제적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사회적 책임 활성화 측면에서 추가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함
- 2018년 들어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있는 만큼, 일자리, 인권, 노동, 환경, 상생협력, 공동체발전 등에 기여한 공무원 및 그 프로그램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재무, 자연, 인적자원의 효율적 사용 관련

- 남구청 행정 운영을 보면, 관련 법 제도와 규정에 따라 재무 건전성을 점검하고, 물자와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양항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 확인됨
- 울산 남구의 구의회 또한 지속적인 감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남구청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공무원 등 인적 자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특히, 주민참여 예산제도 등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직접적인 정책 수요자인 주민들의 판단과 참여도 매우 중요하며, 주민 참여형 감시 시스템을 통하여 예산 및 자원, 인적자원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여성 임직원 승진 기회 촉진 관련

- 조직 거버넌스 분야 기대사항에서 여성 및 취약계층들을 대변할 수 있는 임직원들의 수와 비율은 특히 중요함
- 남구청은 2018년 8월 현재, 1급부터 9급까지 총 7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 여성 근로자 숫자는 372.5명으로 비율로 보면 52.2%에 달함
- 그러나, 5급이상 여성 상위직은 5명으로, 비율로 보면 8.1%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 비율을 앞으로 단계적인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높여나가는 계획과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함

■ 의사결정을 하는 권한, 책임, 역량 균형과 위원회 활동 관련

- 남구청의 의사결정과 관련한 권한, 책임 및 역할 전반에 관한 사항은 '본청 전결 사항 및 업무 분장' 규정 등에 따라 적절히 운영되고 있음
- 남구청과 같은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정책 수요자인 주민을 정책의 중심에 둔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임. 특히 위원회 활성화하는 것은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정책을 심의하게 하는 방법임
- 현재, 사회적책임과 관련성이 많은 위원회도 상당수 활동중인데, 조직의 거버넌스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가치 및 사회적책임의 관점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남구청의 사회적 책임관련 정책 결정시 해당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구정의 주요의사결정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참고사례〉 :
 - 서울시 은평구, 서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 제정. 은평구 협치회의 및 협치조정관 제도 운영
 - 대기업의 경우, CSR위원회 조직을 기반으로 임직원들의 역할과 책임(R&R)을 시스템화하는 경우가 많음. 공공기관의 경우, 최근 사회적책임(SR)위원회 보다는 사회적가치위원회를 구성하는 사례가 많음(예금보험공사, 서부발전, 남부발전, 한국마사회, 농어촌유통공사 등)

2. 인권

인권 분야 이슈	이슈 평가	제언
1. 실사	•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3) 및 인권증진기본계획 (2018~2022) 등을 통해 기본 계획은 수립되어 있음	인권정책을 공공기관의 기본적 책무로 인식하고 인권 관련 사항을 업무분장에 명시하고, 남구청 주요 사업계획에도 포함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인권 리스크 상황	• 남구청 차원에서 (유사시) 인권 리스크 상황을 예상하고, 점검하고, 대처하는 프로세스가 미흡함	남구 차원에서 인권정책과 인권리스크 상황에 대한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3. 연루/공모회피	• 인권증진기본계획 (2018~2022) 등에서 포괄적인 관리는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추진 프로그램이 요구됨	인권 이슈 관련 연루/공모회피를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규정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고충처리	• 인사위원회와 함께 고충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중임 • 내부 직원 고충처리제도가 있으나, (외부) 구민을 위한 고충처리 프로세스가 인권경영 차원에서 부재함	인권정책을 공공기관의 기본적 책무로 인식하고, 구민을 위한 고충처리 메커니즘을 통합적인 인권경영 차원에서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5. 차별 및 취약집단	• 인권보장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등 취약집단을 위한 제도는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 지원,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프로그램 등은 잘 운영되고 있음	다양한 사업계획을 통해 차별 및 취약집단에 대한 보호 정책은 적절히 시행되고 있음 이러한 정책들이 남구청 차원의 인권경영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면 더욱 효과적임
6.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	• 공공기관으로서 남구청의 행정 업무 과정이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이슈를 기본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남구청의 인권선언, 시민기본권 선언 및 조례 시행 등을 통해 시민들과 보다 활발히 소통하면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7. 정치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구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신장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은 확인됨	인권정책 내지 인권경영이라는 큰 틀에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가 제고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8. 근로에서의 근본원칙 및 권리	• 공공기관으로서 남구청의 행정 업무 과정에서 근로에서의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으며, 관련 법을 준수하고 있음이 확인됨	남구 전체 인권경영 차원에서 구현되도록 시스템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인권 이슈 1 : 실사

-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남구는 남구청의 활동 또는 남구청과 관계를 갖는 사람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실질적 또는 잠재적 인권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하며, 다루기 위해 실사를 수행할 책임이 있음.
- 현재 인권증진기본계획(2018~2022)이 수립되어 있으나, 종합적이고 정확한 기초 조사와 실사 프로세스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인권도시를 지향하기 위한 남구청의 역량과 구민들의 인권의식 및 문화, 남구의 인권 행정체계, 시민사회의 조직 및 활동역량, 인권의 제도화 수준 등 지역의 총체적인 인권 현황에 대한 진단이 필요함
- 인권현황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별도의 실사(due diligence) 진행해야 하며, 이 경우 인권 취약 분야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여 통합적인 인권경영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참고사례> :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참고. 대전시 산하 14개 공공기관 인권 경영 추진 사례 및 한 국가스공사 인권존중 건설현장 구현 사례 등

■ 인권 이슈 2 : 인권 리스크 상황

- 남구청은 인권 관련 도전 및 딜레마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인권 침해의 리스크가 악화될 수 있는 특정 상황 및 환경에 처할 수 있음. 이러한 리스크 상황은 다음과 같은 극단적 상황을 포함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총돌 또는 극단의 정치 불안, 민주 또는 사법 시스템의 실패, 정치권 또는 시민권의 부재
 - 빈곤, 가뭄, 극단의 보건 위험 또는 자연재해
 - 물, 산림, 대기 같은 자연자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혹은 지역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사건과 사고
 - 지역사회의 오랜 원주민의 인권 리스크 상황
 - 부패 문화
 - 법적보호 없이 비공식 토대위에서 이루어지는 근로를 수반하는 복잡한 가치사슬
- 인권리스크상황 인식 및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인권 실사나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인권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해관계자와 공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제정되어 있는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본격 시행하고 인권증진기본계획의 내용도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인권 이슈 3 : 공모 회피

- 연루/공모는 법적 및 비법적 의미를 가짐. 법적 맥락에서, 일부 사법권은 연루/공모를 해당 불법행위를 알거나 불법행위의 원인이 되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범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데 실질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 또는 부작위 당사자라고 정의하고 있음. 연루/공모는 불법행위 또는 부작위의 원조 및 교사 개념과도 연관됨. 비법적인 맥락에서, 연루/공모는 광범위한 사회의 기대 행위로부터 나오기도 함

- 남구청은 이러한 인권침해와 관련한 여러 형태의 연루/공모를 회피하는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음
- 공모회피를 위한 제도화 및 이행을 위해서는 조직 내 인권 실사나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조직 전체 걸쳐 통합적 인권경영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인권 이슈 4 : 고충 처리

- 일반적으로, 고충처리와 관련한 제도가 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일지라도, 조직의 의사결정 및 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은 발생할 수 있음
- 남구청의 고충처리 이슈는 조직 내의 임직원들의 고충처리와 구민들의 고충처리로 구분되는 바, 임직원들의 고충처리에 대한 절차와 규정은 잘 되어 있는데, 주요 이해관계자인 구민들의 고충처리 프로세스는 민원처리 형태로 처리되고 있음
- 남구청 전체의 인권경영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고충처리 및 민원처리 방식 및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함
- 이 과정에서, 고충처리 제도의 독립성, 투명성, 공정성, 접근가능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인권 이슈 5 : 차별과 취약그룹

- 차별은 대우 또는 기회의 동등을 효력없게 만드는 모든 구분, 배제 또는 선호를 포함하며, 이는 정당한 근거보다는 편견에 기반하고 있어서 시정이 필요함
- 차별금지법 제정 시 가장 근본적인 원칙 중 하나임. 취약집단을 포함해, 모든 집단을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사회에 참여시키고 포함하는 것은 관련자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그 기회를 증가시키는 것임
- 차별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근거는 인종, 피부색, 성별, 나이, 언어, 재산, 국적 또는 출생국가, 종교,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경제적 기반, 장애, 임신, 토착민 소속, 노동조합 가입, 정치적 소속 등으로 인한 것임
- 남구청의 경우, 여성, 장애인, 아동, 다문화 가정(이주자), 소수인종, 노인, 난민 등 소수집단의 인권 및 차별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남구청의 경우, 차별금지와 취약그룹 보호 정책 등에서 인권보호 규정이 아니라도 관련 위원회 활동과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회, 지역복지 사업의 형태로 차별금지와 취약그룹 보호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 남구청의 경우, 차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독립된 조사과정을 확립하고, 조사결과를 구체적인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바, 이는 남구청의 인권경영시스템

구축 과정 속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인권 이슈 6 :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는 생명권, 존엄하게 살 권리, 고문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안전할 권리, 재산 소유권, 개인의 자유 및 존엄성, 형사상 기소에 처했을 때 정당한 법 절차, 항변권 같은 절대적 권리를 포함함
- 더 나아가 언론 및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종교 선택 및 종교생활의 자유, 신앙의 자유, 프라이버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한 임의적 간섭으로부터의 자유, 명예 또는 명성에 대한 공격으로부터의 자유, 공공서비스 접근권 및 선거참여권을 포함하기도 함
-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는 헌법과 법률로 다양하게 보호되고 있지만, 사회책임(SR)과 인권경영을 남구청 차원에서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음
- <참고사례> : 서울시 인권위원회 사례, 충청남도 인권위원회의 비상임 인권보호관 위촉 사례

■ 인권 이슈 7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존엄성 및 개인 발전을 위한 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가짐
- 이는 교육의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에서 일할 권리,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 적절한 건강수준에 대한 권리, 본인이나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보건 및 행복에 적절한 생활수준을 영위할 권리, 의식주, 의료,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망, 고령 또는 기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생계수단 결핍에 따른 필요한 사회적 보호 권리, 종교 및 문화 관행에 대한 권리 등을 포함함
- 남구청의 경우, 인권정책,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선언 및 관련 조례 제정등을 통해 이들 기본권이 보다 강화해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특히,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 노력도 병행되어야 함
- 주민들의 침해 여부(또는 향유정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이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업무분장이 필요함
- 다른 인권 이슈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보호 또한 남구청 차원의 인권경영시스템 구축 과정 속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인권 이슈 8 : 근로에서의 근본원칙과 권리

- 근로에서의 근본원칙 및 권리는 인권 이슈이자 노동 이슈로 분류되고 있음. 이러한 원칙 및 권리는

기본 인권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채택되었기에 인권 부분에서 다루고 있음

-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는 근로에서의 근본권리를 오랫동안 확인해 온 바 있는데, 이는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인 인정,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또는 의무노동의 제거, 아동노동의 효과적인 폐지, 고용 및 직업에서의 차별 제거 등임
- 남구청의 경우, 공무원 노조의 결성 및 활동 편의 제공과 교섭권 보장 관점에서도 이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음. 강제노동, 의무노동 금지, 아동노동 철폐 등에 있어서는 잘 키지고 있다고 판단은 되지만, 국제 규범을 준수하고 있음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확인해 보일 필요가 있음
- 장애인, 여성, 청년, 고령근로자 등의 고용 취약집단 보호를 위한 차별 제거 정책이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함

3. 노동

공정운영 이슈	이슈 평가	제언
1. 고용 및 고용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다만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과거의 사업시행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는 것이 권장됨 	서류상의 성공적인 정책시행 결과가 실질적인 취·창업률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분야 제한 해소, 규제완화 및 상시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정책 추진
2. 근로조건 및 사회적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이 펼쳐지고 있음 •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등 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정책이 펼쳐지고 있음 • 무상보육으로 대표되는 모성보호 정책이 펼쳐지고 있음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으로 성공적이라 평가할 수 있으나, 실질적 지표개선과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단기적 고용부진에 대한 적극적 노력 필요
3. 사회적 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대화를 위한 최선의 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나 노사관계라는 사적영역에 대한 직접적 개입은 쉽지 않음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중재역할에 대한 고민과 일자리가 없는 청년층에게는 이전 세대가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일종의 기득권층이 되고 있다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정책구상 필요
4. 근로에서의 보건 및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안전도시 인증 등 제도적 측면은 우수하나, 실질적인 사고사망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함 	화학 공업단지가 모여있는 울산남구의 경우 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 정책 수립이 권장됨
5. 직장에서의 인적개발 및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개발 및 훈련 관련 정책은 꾸준히 시행되고 있음 	실질적인 인적개발이 되어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정책수립 권장

■ 노동 이슈 1 : 고용 및 고용관계

- 고용은 현재 각 분야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임
- 예산의 적법한 사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존의 창업 지원정책은 창업 지원사업 지원기간이 끝나면, 내년에 지원을 권장하는 등 상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개선해야 함. 또한 현재 국가가 지정한 사업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적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이 가능한 업종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장됨
- 국가지정 사업이 아니어서 금전적인 지원은 불가능 하더라도, 창업과 관련된 기초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어야 다양한 창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예를 들어,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카페/요식업 등에 대한 기초적인 지원이나, 정부의 지원사업은 아니지만 지속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무역, 금융, 부동산 분야와 관련된 창업에 관해서도 기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권장됨
- 일본 후쿠오카시의 창업지원센터의 예를 보면 지원제한 항목이 거의 없고, 금전적 지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지원기간 없이 상시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참조할 것을 권장
- 지난 정책의 실패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되며,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단기간의 실적확보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장기적인 문제해결에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현 창업지원 정책은 경제정책이라기보다는 사회복지적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는 충분하지만, 실질적 경제성 확보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부족하여 지원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를 자주 보게되고, 그러한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됨. 이러한 상황에서 창업을 장려하기 보다는 창업을 할 사업가들을 남구에 등록시키는 정책으로 변질되는 측면을 경계해야 함
- 마지막으로 파산제도에 대해 청년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청년들이 사업실패를 미리 걱정하여 창업을 초기부터 회피하는 현상을 완화하는 것이 권장됨. 파산제도는 사업가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인식전환을 통하여 몇 번 실패하더라도 경험을 통하여 지속적인 창업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사회분위기 형성에 힘쓰는 것이 권장됨
- 실업해소를 위한 공공근로와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은 구청의 성과지표로는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고용률/실업률 지표에 개선을 가져오지는 못하고 있음.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사업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울산대학교와의 장/단기 인턴십 연계를 통하여 학점화를 통한 보다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권장됨

- 공공근로의 경우 사회복지성 성격이 강하므로 이러한 사업을 경제적 정책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노동 이슈 2 : 근로조건 및 사회적 보호

- 사회적경제 기업은 일반 기업과 달리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조직되지 않고 사회 서비스 제공이나 일자리 창출 또는 시민적 유대 등 사회적 목적을 위해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수익이 조직의 사회적 가치와 목적 사업에 재투자되는 비영리적 순환구조를 가지고 있음
- 사회(공동체)의 보편적 이익과 구성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 노동중심의 수익배분, 사회 및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자원의 배분, 생산, 소비, 교환, 분배하는 조직들로 구성된 하나의 경제영역임
- 설립목적과 근거에 따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있음. 제3섹터로서 사회적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들 조직이 사회경제 부분에 공익과 선순환 구조를 가지려면 세제혜택 뿐만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역량강화 사업 및 재정지원 사업들을 수행하고 중간 조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등의 판로지원 확대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 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경제조직은 정부의 지원이 중단될 경우 경제적 자립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경제성에 대한 재고찰도 권장됨. 예를 들어 울주군에 있는 삼성SDI의 경우 협력업체인적자원컨소시엄을 통해 1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연간 1000명을 교육시키고 있는데 반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에 가깝다고 보여지는 울산의 한 센터의 경우 4억의 예산으로 연간 40명을 교육시키고 있음
- 일반기업과 사회적기업 사이에서 효율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교육의 질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1인당 50배가 넘는 비용과 다른 여러 비교점은 일정한 시사점을 주고 있음.
- 삼성SDI의 경우 2018년 전담직원을 4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전담직원 1명의 인건비로 책정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예산 4천만원을 정부에 반납하고 있으나, 사회적기업의 경우 자발적 인원축소와 예산반납은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적을 것이라고 판단됨
- 삼성SDI에서 전담직원을 줄인 이유는 직원들이 본인의 인적자본 축적에 컨소시엄전담직원 업무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며, 삼성SDI의 경우 국비로 직원 1명을 비용 없이 고용할 수 있음에도, 효율성을 고려하여 고용을 하지 않는데 반하여, 사회적 기업에서는 이러한 판단자체가 고려대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됨
- 사회적기업의 경우 사회적기업이라는 도덕적 우월성을 근거로 장기적으로 방만한 경영에 가까운 행

태를 보이게 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견제장치가 장기적으로는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함

-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방법의 하나로 사회적 경제조직의 확대를 고려할 수 있으나, 공공기관의 대부분의 업무가 사회적 사업이라는 점과, 제한된 인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량의 한계를 고려할 때, 사회적 경제조직의 확대 보다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내실있는 수행에 집중하는 것이 공공기관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에 가까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을 권장함
-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자립, 취, 창업 연계를 위해서는 기존기업의 사회공헌센터의 설립/확장 및 연계를 통하여 사업추진을 할 것이 권장됨. 사회적 경제 육성 방안은 엄밀히 말해 경제적 사업이라기보다 사회복지적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사회복지성 사업은 실적확보와 복지적 의미부여에는 적합하나 경제성 측면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따라오기 어렵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사회적 경제조직의 실적을 근거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에 대한 경계가 필요함
- 또한 사회적 기업 우선 구매정책의 경우 다른 청년 창업가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혜를 주는 것을 너무 쉽게 정당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함
- 무상보육 정책은 현재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또한 여성을 보육교사로 고용하여 여성취업율의 상승까지 꾀하려 하는, 하나의 정책을 통하여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하려 했던 측면이 있음
- 우리나라의 저출산 극복정책이 출산율의 실질적 상승보다는 태어난 아이를 지자체에 더 많이 등록시키는 것에 실질적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어린이집 등록원아 수는 점점 더 줄어들 것이라 예상됨. 결국 어린이집의 경영악화와 보육의 질 하락이 향후 예상되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는 단기적 극복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됨
- 보육료의 현실화가 어렵다고 생각될 때, 어린이집은 시장논리에 의해 한계어린이집의 폐업을 통하여 정리가 될 확률이 높는데, 그러한 상황에서의 보육공백 등의 문제를 남구청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또한 현 보육료 하에서의 실현가능한 보육수준에 대한 홍보 및 대화를 통한 학부모 인식전환 사업이 권장됨. 마지막으로 여성취업율의 상승과 맞물려 집에서 아이를 보는 여성에 대해 “일을 하지 않는 여성”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전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권장됨

■ 노동 이슈 3 : 사회적 대화

- 사회적 대화는 노동 이슈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며, 울산지역의 노사문제는 강성노조 문제와 맞물려 전국적인 관심사임

- 최근 젊은 세대는 노동운동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지고 있으며, 지역민의 대표자인 구청장 등에게 보다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에 구청의 사회적 책임을 재고하는 것이 권장됨
- 또한 실질노동소득 분배율 등을 측정하여 합리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 권장됨. 노사문제는 기업 내의 사적인 영역이라는 사회통념적 법률적 제한을 지역민의 대표행정기관인 남구청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숙고하는 것이 권장됨

■ 노동 이슈 4 : 근로에서의 보건 및 안전

- 남구청은 국제안전도시 공인 등 보건과 안전에 관한 우수한 제도를 구비하고 있음. 내부적으로는 남구청 공무원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것이 권장됨. 또한 공무원들이 민원인으로부터 당할 수 있는 불쾌한 경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마련이 권장됨
- 국제안전도시 공인이 작업장에서의 사고사망율 등 실질지표와 연관이 되도록 추진하는 것이 권장됨.
- 울산 지역은 많은 중화학 공업단지가 모여 있으며, 지진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과거 설립된 공단 등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등, 견잡을 수 없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홍보하며 관련 안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권장됨

■ 노동 이슈 5 : 직장에서의 인적개발 및 훈련

- 직장에서의 인적 개발 및 훈련은 남구청에서 꾸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분야라고 평가됨. 고용과 일자리 창출 자체가 더 중요해진 현 시점에서 상대적인 중요성이 적어 보일수 있으나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분야임
- 장애인 자립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가 문제가 되지 않은 사업으로의 확장이 권장됨

4. 환경

환경 분야 이슈	이슈 평가	제언
1.오염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예방과 관련해서는 환경보전 중기 종합계획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울산 남구청 에너지 계획, 하수도 시설물 정비, 하천 유입오수 차단시설 유지관리, 화학물질 선진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계획에서도 추진 상황이 확인됨 	<p>환경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히 관리되고 있음</p> <p>중앙 행정기관 위임사무 이행 수준을 넘어, 남구청과 관련되는 환경오염 사항이면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측정, 기록, 보고하는 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p>
2.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 에너지, 자원 등 관련 자료가 울산 남구청 에너지 계획(2017) 및 환경보전 중기 종합계획등에 수록되어 있음 • 세부사업계획으로도 지속적이고 자립가능한 에너지도시조성 계획과 남구 행복 에너지센터 계획등에서 관련 내용 확인됨 • 현재, 환경부 물환경 선도도시 시범사업으로 지정 추진. 향후 타 지역으로 확대 예정 	<p>환경, 에너지, 자원재활용 관련하여 환경 계획과 에너지계획의 분류상 각각 다루고 있으나, 향후 통합적 관리 방안이 필요함</p>
3.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계획과 울산 남구청 에너지계획(2017)에서 기본 계획은 확인됨 • 세부사업계획으로는 생활속 저탄소 녹색생활실천운동,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쿨루프 시범사업 등이 있음 • 현재, 14개 동 그린리더 단체 구성되어 있으며,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p>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관리하는 지자체별 온실가스 통계를 적극 활용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p> <p>온실가스 감축은 에너지 사용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바, 에너지 계획 속에 온실가스 연계 부분을 분석하여 통합적 저감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음</p>
4.환경보호, 생물다양성 및 자연 서식지 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내용은 환경보전 중기 종합계획(17~21)에서 확인가능함 • 세부 추진 계획으로 두루미 생태환경연구소 설치운영, 향기나는 산책로 조성사업, 자연과 함께 하는 철새마을 조성, 문수 여유만만 여가복지 조성사업 등이 확인됨 • 현재 선암호수공원, 태화강변 등 2개소는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음 	<p>환경보전 중기 종합계획(17~21)에서 환경보호, 생물다양성 보전 계획은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다양한 실행 계획 수립과 실천이 요구됨</p>

■ 환경 이슈 1 : 오염예방

- 남구는 지리적으로 공단을 인근에 두고 있어서 환경오염 예방 이슈와 관련이 많은 지역임. ISO26000에서는 오염예방을 위해, 대기, 수질, 폐기물, 독성 및 유해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고 있음. 남구청의 경우, 직접적인 오염물질 배출보다는 관할 지역(남구)내의 모든 대기오염 발생을 총괄한다는 측면에서 더 큰 사회적 책임을 지님
- 지역 차원에서의 오염예방을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과 사업도 중요하지만, 남구지역의 중대 오염 발생원, 오염감소, 물소비, 폐기물 발생 및 에너지 사용에 대해 측정, 기록 및 보고를 체계적으로 하는

프로세스가 중요함. 남구청의 경우, 환경보전 중기 종합계획(17~21)을 수립하고 있지만, 널리 확산하고 실효성 있는 추진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확인됨

- 환경 관련 법규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의 위임 사무에 귀속되는 측면이 있지만, 남구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상황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구민들은 물론, 지역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에게 공개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음
- 〈참고사례〉 : 전국 차원, 울산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계획들 중 남구지역 관련성 높은 자료 및 정보는 별도로 체계화하여 홈페이지등에 제공할 필요가 있음(서울시 미세먼지 측정소 확대 등)

■ 환경 이슈 2 :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은 국가적 거대 담론이이기도 하지만, 작은 변화가 전체를 바꾸어 가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분야임
- 미래에 자원의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의 소비 및 생산의 방식 및 규모는 지구의 수용능력 내에서 운영되도록 해야 함. 재생가능한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은 자연적으로 다시 보충되는 속도보다 느리거나 같은 속도로 이용되는 것을 말함
- 에너지 효율에 있어서는 건물, 수송, 생산 프로세스, 기기 및 전자장비, 서비스 제공 또는 다른 목적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물문제와 관련해서는 식수의 안전하고 믿고 마실 수 있는 공급 및 위생 서비스에 관한 접근을 강조하는데, 이는 인간의 근본적인 니즈이고 기본 인권임
- 원자재 이용에서의 효율성 제고와 제품의 자원 사용 최소화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음.
- 남구청의 경우, 남구청 에너지 계획(2017)을 통해 에너지 수급 및 효율성 계획,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됨
- 자원 이용 분야에서는 환경보전 중기 종합계획 내용 중 자원재활용 관련 정책을 통해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는 있으나,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이라는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음. 앞으로 에너지, 물, 기타 자원 분야의 연계성을 살려 중장기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음
- 〈참고사례〉 : 서울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추진 정책, 폐기물 줄이기 및 재활용 확대 정책 등

■ 환경 이슈 3 :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은 전 인류적 과제임.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및 아산화질소(N₂O) 같은 인간의 활동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은 자연 및 인간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임

- 남구청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게 됨. 남구청 등 모든 조직의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완화) 및 변화하는 기후에 대한 기획(적응)의 두 측면은 조직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며, 기후변화에 적응한다는 것은 보건, 번영 및 인권에 대한 영향의 형태로 사회 구성원에게 다가옴
- 남구청은 공공기관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에너지계획, 생활 속 저탄소 녹색생활실천운동 등을 통해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음
- 앞으로 이러한 정성적인 활동에 덧붙여 사업 수행 효과의 정량적 평가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기후 변화 완화 노력의 중요성을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온실가스 감축은 에너지 사용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바, 에너지 계획 속에 온실가스 연계 부분을 분석하여 상호 연동하는 저감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음

■ 환경 이슈 4 : 환경 보호, 생물다양성 및 자연 서식지 복원

- 일반적으로 조직은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서식지 및 (식량, 물, 기후조절, 토양형성 및 휴양 기회와 같은) 생태계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 및 서비스를 복원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필요함
- 남구는 생물다양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노력을 해야함. 여기서, 생물다양성은 모든 형태, 단계 및 조합에서의 생물의 다양성을 말하는 것임
- 조직은 생태계 서비스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생태계는 식량, 물, 연료, 홍수 조절, 토양, 가루반이 매개체, 자연 섬유, 휴양, 오염 및 폐기물 흡수와 같은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안녕에 기여하고 있음. 생태계가 퇴화 또는 파괴되면서, 생태계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을 잃게 되면, 그 영향은 인간에게까지 미치게 됨. 토지 및 자연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환경 친화적인 도시 및 농촌 개발 촉진도 이러한 관점에서 매우 중요함
- 남구청의 경우, 이와 관련하여 두루미생태환경연구소 설치 운영, 향기나는 산책로 조성사업, 문수 여유만만 여가복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환경보호, 생물다양성, 자연서식지 복원 관련한 세부 계획들을 좀더 다양하게 만들어낼 필요가 있음
- 〈참고사례〉 : 현재 남구 지역의 선암호수공원, 태화강변 등이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데, 환경보전 중기 종합계획(17~21)에서 생물다양성, 토지, 물, 생태계의 통합적 관리 방안 수립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환경부 등과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음(충남 보령 소항 사구 해양경관보호구역 지정, 서울시 난지 한강공원 야생동물보호구역 지정 등)

5. 공정운영

환경 분야 이슈	이슈 평가	제언
1. 반부패	• 반부패에 대한 정책수립과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명예구민감사관제를 건축, 세무, 조경 등 전문분야로 구분하고, 각 전문분야별로 선발된 명예구민감사관의 역할 명확화와 확대를 통한 구민참여형 반부패제도 강화 권고
2. 책임 있는 정치 참여	• 선거 기간에 선거개입 또는 정치적 중립 훼손에 대한 감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남구청 구성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인식제고 교육은 선거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정치적 중립에 대한 자체적인 교육운동을 통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강화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함
3. 공정경쟁	• 계약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와 남구 내 공정하고 균형 있는 경쟁 지월 통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음 • 다만 공정 경쟁에 대한 저변확대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인식제고 교육이 필요함	공정경쟁이 필요한 이유와 공정경쟁을 통해 발생하는 긍정적 요소들에 대한 교육 운영 권고
4. 가치사슬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 촉진	• 현재 남구청의 협력기업, 위탁기관 등의 사회적 책임 촉진 제도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남구청의 협력기업 위탁기관 등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책임 활동 이행에 대한 <u>모니터링과 평가체계</u> 구축이 필요
5. 재산권 존중	•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부동산 거래질서 선진화 구현 등 주민재산 보호활동과 주민의 니즈를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음	

■ 공정운영 이슈 1 : 반부패에 대한 제언

- 부패는 사적인 이득을 위해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하는 것으로 부패는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음. 부패의 보기는 공직자 또는 민간부문 사람이 개입된 뇌물수수(금전 또는 현물 뇌물의 요구, 공여 및 수취), 이해관계 상충, 사기, 자금세탁, 횡령, 은폐 및 법 집행 방해 그리고 영향력이 행사된 거래를 포함함. 부패는 남구청의 효과성 및 윤리적 명성을 훼손하며, 인권 침해, 정치 프로세스의 붕괴, 사회의 궁핍화 및 환경 훼손을 초래할 수 있으며, 또한 경쟁, 부의 분배 및 경제 성장을 왜곡할 수 있음
- 울산광역시 남구청은 지자체로서 반부패 및 청렴에 대한 계획과 이에 대한 이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다만 반부패 및 청렴에 대한 강화를 위하여 남구 주민의 참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남구청은 명예구민감사관을 선발할 시 식견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판단되거나 퇴직 공무원 등을 고려함. 이에 전문분야를 건축, 토목, 도시계획, 조경, 환경, 위생, 보건, 소방, 전기, 기계 등으로 세분화하여 명예감사관을 선발하고 명예구민감사관이 전문분야에 대한 실제 감사 참여, 일반감사 참관

및 의견제시, 공직자의 부정부패 감시, 공직자의 청렴도 모니터링, 구민의 불편 및 애로사항 등 여론 수집 및 제보, 기타 구정발전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권고

- 한편 구민 명예감사관제가 전시 행정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명예감사관에 대한 명확한 혜택을 제공하고 명예감사관 선발 평가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공정운영 이슈 2 : 책임 있는 정치 참여에 대한 제언

- 남구청은 공공의 정치적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사회전반에 이익이 되는 공공 정책의 개발을 장려할 수 있지만 부당한 영향력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고, 조작, 협박, 및 강압과 같은 공공의 정치적 프로세스를 훼손하는 행위를 지양해야 함
-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하기 하여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요구하고 있고,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자 또는 공무원은 선거에서 중립의무를 지킬 것이 요구됨. 우리 헌법재소는 선거에서 중립의무가 요구되는 공무원의 범위와 관련하여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이 선거에서 중립의무가 요구되며,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에 대하여 선거중립의무를 요구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은 특별법적 지위에 있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요청과 선거 중립의무를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하는 것에 비롯된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남구청은 책임 있는 정치적 참여와 기부 및 이해관계 상충 처리방법에 대해 남구청의 구성원을 위한 교육을 이행하여 이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즉, 선거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감독과 이에 따르는 교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남구청 자체적인 '책임 있는 정치 참여'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정에 맞는 교육시간을 할당하여 정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공정운영 이슈 3 : 공정경쟁에 대한 제언

- 공정하고 광범위한 경쟁은 혁신 및 효율을 자극하고, 제품 및 서비스의 비용을 줄이고, 모든 조직이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며, 새롭고 또는 개선된 제품 또는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것을 장려하며, 장기적으로 경제성장 및 생활수준을 높임. 반경쟁적 행위는 남구청의 이해관계자와 함께 남구의 명성에 해를 끼치며,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남구청이 경쟁적 행위에 관여하고 촉진하게 되면, 남구는 그러한 반경쟁적 행위가 용인되지 않는 분위기 조성을 돕는 것이며 이는 모두에게 이득임
- 반경쟁적 행위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당사자들이 같은 가격에 같은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기로 연루/공모하는 가격조작, 당사자들이 경쟁 입찰을 조작하기 위해 연루/공모하는 입찰담합 및

시장에서 경쟁자를 퇴출시키고 경쟁자에게 불공정한 제재를 줄 의도로 매우 낮은 가격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약탈적 가격 책정이 그 보기임

- 남구청은 지자체로서 공정경쟁을 위한 기본적인 활동을 잘 이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에 공정경쟁이 필요한 이유와 공정경쟁을 통해 발생하는 긍정적 요소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공정경쟁 이슈에 대한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교육은 세부적인 교육 필요요소를 도출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실행하고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교육의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는 외부 콘텐츠가 있다면 외주를 통해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 공정경쟁에 대한 교육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교육대상

1. '공정거래법'에 대한 배경지식이 전혀 없는 초심자
2. '공정거래법'의 기본 개념을 짧은 시간 안에 습득하고 싶은 모든 임직원
3. 업무상 '공정거래법' 기초 지식이 필요한 담당자

교육대상

1. 시장경제, 경쟁, 독점, 카르텔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2. 공정거래법의 역할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시장독점의 폐해를 설명할 수 있다.
4. 공동으로 부당하게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폐해를 설명할 수 있다.
5.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

교육대상

- 시장경제와 공정거래
시장경제, 경쟁, 독점, 카르텔, 공정거래법
- 시장경제의 불공정거래 I
시장을 독점하는 행위, 공동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불공정거래행위
- 시장경제와 불공정거래 II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

교육대상

선수과정이 없습니다.

공정경쟁 교육사례(공정경쟁연합회-시장경쟁교육원)

■ 공정운영 이슈 4 : 가치사슬에서의 사회적책임 촉진에 대한 제언

- 남구청은 조달 및 구매 의사결정을 통해 다른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가치사슬에 따른 리더십 및 멘토링 등을 통해, 남구청은 사회적 책임의 원칙 및 관행의 채택 및 지원을 촉진할 수 있는 것임.

남구청은 남구청의 조달 및 구매 의사결정이 다른 조직 또는 위탁기관 등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또는 의도되지 않은 결과를 고려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회피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마땅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함

- 남구청은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제품 및 서비스의 수요를 자극할 수도 있는데, 가치사슬에서의 모든 조직은 해당 법 및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자신의 영향에 책임이 있음. kotra(2015)에 따르면 다국적기업의 94.2%가 협력업체 선정 또는 배제 시 CSR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음. 이는 국제적 이슈화로 인해 CSR경영은 거래의 핵심요건이 되어가고 있으며, 기업의 생존전략이자 경쟁력 제고방안으로도 재조명 받고 있는 것임
- 이에 남구청과 같은 지자체는 가치사슬에서의 사회적책임 촉진을 위해서는 청렴이행 서약서와 같이 사회적 책임 확산을 위한 법규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이를 위해 사회적책임 촉진을 위한 남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남구청과 협력하고자 하는 기업과 남구청의 위탁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위탁기관 등이 사회적 책임을 위한 노력과 다양한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이를 위해서는 남구청 가치사슬에서의 기관 및 조직들이 사회적 책임을 위한 노력과 활동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하고 명료한 평가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6. 소비자

소비자 이슈	이슈 평가	제언
1. 공정 마케팅, 공정계약 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구 주민과 적극적인 소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다문화 특성을 고려한 소통과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다만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다문화 특성을 고려한 소통과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다문화가족을 위한 소통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통과 지원에 대한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한 해결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2. 소비자 보건과 안전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환경 및 행정활동에서 노출되는 안전위험에 대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취약집단 안전 활동 또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어린이를 위한 교통안전 활동 외에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대책 수립과 이행이 필요함
3. 지속가능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과 환경 유지 및 개선을 위한 제도/정책이 수립되어 원활하게 이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친환경 에너지도시 건설을 위한 체계적이고 원활한 계획 이행과 목적 달성을 위한 주민참여와 홍보, 도시계획 관련법과의 연계 등 효과적인 관리활동이 필요함

4. 소비자 서비스, 지원 및 불만과 분쟁 해결	• 행정활동 피해 처리 프로세스는 국가보상법의 의거하여 처리되고 있어 자체적인 제도 및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소비자 즉, 남구 주민의 행정 만족 충족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계획 및 운영하여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5. 소비자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	• 소비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 활용과 정보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음	-
6. 필수 서비스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 겪는 계층을 위해 공공요금 긴급복지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음	-
7. 교육과 인식	• 금연, 어린이 급식, 음식문화 등 남구 주민의 인식제고 및 개선을 위한 교육이 운영되고 있음	복지, 다문화, 환경 등 중요한 이슈를 주제별로 구분하여 각 주제 별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 이슈 1 : 공정 마케팅 사실적이고 치우치지 않은 정보와 공정계약 관행

- 공정 마케팅, 사실적이고 편중되지 않은 정보 및 공정 계약 관행은 소비자 즉 남구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정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이를 통해 남구 주민은 행정 서비스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음. 남구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세부사항은 남구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행정서비스 이용 및 활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음. 불공정, 불완전, 오인 또는 기만적인 행정서비스 정보는 남구 주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음
- 남구청은 지자체로서 남구 주민과 적극적인 소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다문화 특성을 고려한 소통과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다만 다문화 특성을 고려한 소통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통과 지원에 대한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한 해결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일본은 외국인인 결혼이민자로 보는 관점에서 변화하여 외국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구하는 정책을 추진해왔고, 독일은 이주노동자와 난민의 증가로 이들에 대한 예우를 외국인 사회통합정책차원에서 처리하고 있음. 프랑스는 인권 보호 차원에서 철저한 평등의 원칙과 강력한 통합정책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지원을 폭넓게 하고 있음
-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 3월에 제정되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음. 이는 선진국의 다문화가족 관련 법/제도에 비하여 상당히 늦은 것임. 특히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사회지원 통합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의무적으로 언어강좌를 이수하게 하며,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지원도 일찍이 시행되고 있음. 현재 많은 국가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추진하는 다문화주의 모형은 다양한 문화나 가치, 다양한 민족과 그들의 언어, 습관을 한 나라 속에서 공존

시키는 정책으로 각 인종과 민족은 서로의 이익추구와 협조를 통한 조화를 이루면서 다문화 사회를 형성하고 있음(모선희, 2008)

- 외국의 다문화 지원정책이 우리사회에 주는 시사점은 다문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결혼 이민자의 적응, 융화 자체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공생, 공존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다양한 정책수립이 필요함
- 이에 따라 울산 남구청은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협력네트워크를 민-관, 민-민 형태로 구축하여 조직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다문화 지원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집합교육은 아이돌보미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임. 또한 일방적인 교육서비스 공급 방식을 지양하기 위하여 이민자들의 자조모임과 다문화가족 배우자 모임 등을 활성화하여 사회적 참여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의 처우문제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봉사정신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근무 의욕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소비자 이슈 2 : 소비자의 보건과 안전 보호

- 소비자의 보건 및 안전 보호는 안전하고,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 허용 불가능한 손해의 리스크를 수반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며, 이러한 보호는 의도된 용도 및 예측할 수 있는 오용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좋음
- 여기서 안전은 피해 또는 위험을 피하도록 잠재적인 리스크를 예상하는 것을 포함하며, 모든 리스크를 예상 또는 제거할 수는 없으므로, 안전 보호 조치는 행정서비스 이후에 대한 조치도 포함하는 것이 좋음
- 현재 남구청은 생활환경 및 행정활동에서 노출되는 안전위험에 대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취약집단의 안전위험에 대한 대응 활동 또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남구 내 다양한 재난에 의한 안전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체계 갖추고 있음
- 다만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대책과 이행을 한다면 소비자 보건과 안전 보호 부문에서 보다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는 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진행과 장애인 사회활동 요구 증가 등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적 정책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음. 즉, 서울시는 고령사회로 진입, 장애인의 사회활동 증가 등 변화하는 사회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방향과 추진과제 등 정립하였고, 교통약자를 포함한 서울시민 모두에게 편리한 보편적 교통복지 구현을 위한 추진방안 및 추진계획 수립하였음

[표 7-1]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과제 및 추진체계

목적	중점과제	증진시책
맞춤형 교통수단 접근성 향상	대중교통(버스)운행 효율화	-저상버스 도입 -저상버스 특성에 적합한 버스정류장 개선
	교통약자접근시설 개선	-횡단보도 개선/음향신호기 설치 -보도턱 낮추기
	보행동선 안전성 향상	-보행 장애물 정비 및 관리 -횡단보도 녹색 보행시간 개선
	교통약자 맞춤형 정보제공	-교통시설별 이용편의시설 정비 및 정보 제공 -대중교통서비스 고급화를 위한 R&D 연계
무장애 교통환경 구축	무장애 공간조성	-복지관, 병원 Barrier-Free -관광 Barrier-Free
	무장애 인증제	-무장애 공간 인증제 제도화 및 관리
사회시스템 구축	교통약자 통행지원	-이동지원센터 구축운영 -장애 맞춤형 교통수단 운영개선
	평가체계 구축	-평가단 구축을 통한 지속적 모니터링체계 구축 -교통약자에 대한 의식전환 및 개선

- 서울시의 교통약자 안전계획을 참고하여 남구청에서 수립할 수 있는 정책과 과제를 선제적으로 이행할 수 있음 구체적인 서울시 과제 추진 사례는 다음과 같음

무장애 교통환경 조성 : 3개 증진시책, 25억원

- 국립재활원 일대('09.3 ~ '11.6월)
 - 사업구간 : 국립재활원~국립재활원 사거리 약 0.7Km 구간
 - 주요 개선내용 : 보행공간 확보(0.9M→3.0M), 유도블록 정비 등
 - 추진방식 : 교통시설 설치 매뉴얼에 따라 설계·시공
- 독섬역~서울숲 일대('12.3~'13년 상반기)
 - 사업구간 : 독섬역에서 서울숲까지 약 1.3Km 구간
 - 주요 개선내용 : 보도 평면화, 이동편의시설의 일관성 확보 등
 - ▶ 단차·경사로 제거, 연속된 보행공간 및 동선 확보
 - ▶ 보도상 교통시설 인지 및 방향 전환도록 유도블록 정비 등
 - 추진방식 : 『장애인 이동편의 마실그룹』 사업 전과정 직접 참여

- 『서울시 교중양버스정류장 추가, 이동편의시설 배치 및 연결방법 등
- 활용방안 : 교통시설 관련 기관(부서), 업체 등에 설계·공사시 반영



■ 소비자 이슈 3 : 지속가능소비

- 지속가능소비는 지속가능발전과 일정한 속도로 제품 및 자원을 소비하는 것임. 이 개념은 환경 및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 제8원칙에 의해서 촉진된 것으로, 제8원칙은 모든 사람의 지속가능발전 및 더 높은 삶의 질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가능하지 않은 생산 및 소비 방식을 줄이고 제거하는 것이 좋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속가능소비 개념은 또한 동물의 신체적 존엄성을 존중하고 학대를 피하면서 동물 복지에 관한 관심도 포함함
- 현재의 소비 속도는 분명히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환경피해 및 자원고갈을 초래하고 있음. 소비자는 자신의 선택 및 구매 의사결정에 있어서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윤리적, 사회적, 경제적 및 환경적 요인을 고려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 현재 울산 남구청은 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과 환경 유지 및 개선을 위한 제도/정책을 수립하여 원활하게 이행하고 있음. 저탄소 고효율 친환경에너지 산업도시 구현과 지속적이고 자립 가능한 에너지 도시 구축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도시 건설 계획이 체계적이고 원활한 이행으로 목적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관리활동이 필요함
- 국내외 친환경에너지 도시 성공사례의 공통점은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임. 이에 울산 남구청은 주민참여형 접근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먼저 이루고, 에너지 교육 등으로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도시계획 관련법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을 연계·통합하여 도시 계획 측면에서 발전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도시계획과 연계되어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조성되면 관련법에 따라 지자체 주도적으로 관리·운영이 가능해짐. 현재의 도시·군 계획시설 관련법이 친환경에너지타운의 설치·관리를 위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환경적 측면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에 부합하지 않음
- 마지막으로 정부,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원활한 소통매개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대학, NGO 등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함. 성공적인 친환경에너지타운의 조성을 위하여 계획단계부터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나, 경험이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술적 조언이 가능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필요함

■ 소비자 이슈 4 : 소비자 서비스, 지원 및 불만과 분쟁 해결

- 소비자 서비스, 지원과 불만 및 분쟁 해결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발생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다루기 위해 남구청이 이용하는 메커니즘으로서, 이러한 체계는 행정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만 제기 시

만족스러운 대응체계를 뜻함

- 남구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남구 주민의 만족 수준을 높이고 불만을 줄일 수 있음. 또한 주민에게 적절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잘못된 행정 처리에 대한 복구방안에 대해 명확한 피드백을 해 주는 것이 좋음
- 현재 울산 남구청은 행정활동 피해 처리 프로세스는 국가보상법의 의거하여 처리되고 있어 자체적인 제도 및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소비자 즉, 남구 주민의 행정 만족 충족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음. 다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계획 및 운영하여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행정부 제출예산제도가 법제화된 후, 행정부를 중심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로의 분권화 또는 권한이양을 통해 예산편성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주민참여제도의 일종이라 정의할 수 있음

	정부주도적 예산 참여형	관/민 협의적 예산참여형		시민주도적 예산 참여형
		소극적 협의형	적극적 협의형	
예산결정권한	관료중심	협약에 의한 관료 의사결정		시민중심
의사전달유형	하향적(정보제공형)	쌍방향 (협의형)		쌍방향 (적극적)
참여도구와 기제	정보공재	민원방, 설명회, 협의회, 공청회		시민예산위원회
참여정도(단계)	형식적 참여단계 (정보제공, 상담, 회유)	주민권력 초기단계(협동)		주민권력단계 (권한위임주민통제)
개념 및 범위	형식적 참여예산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 현재 남구청은 예산참여시민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 및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추천방식과 공모방식을 병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함. 시민위원회의 2분의 1은 추천방식에 의하여 1차적으로 구청장이 위촉하고 나머지 2분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은 공모방식에 의해 위촉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착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함은 물론 주민들이 on/off-line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인터넷을 통한 의견수렴, 교환 및 정보의 공개와 제공 등은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성 향상, 나아가 재정의 건정성 강화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수단임. 따라서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종 책자, 설명회, 토론회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해 다양한 예산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음

■ 소비자 이슈 5 : 소비자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

- 소비자의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는 수집되는 정보의 종류와 이런 정보를 확보하고 이용하며 보호하는 방법을 제한함으로써 프라이버시에 대한 주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대용량 데이터 베이스의 증가뿐만 아니라 전자통신의 이용 및 유전자 테스트의 증가로 소비자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특히 고유 식별정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남구청은 주민의 데이터 수집, 이용 및 보호를 위해 보다 엄격한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남구청의 신용을 유지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음
- 현재 울산광역시 차원에서 5개 구군에 대한 통합보안관제 사이버 침해 대응센터 및 인공지능 사이버침해 대응시스템 운영중이며 울산 남구청 또한 APT(지능형 지속위협, Advanced Persistent Threat)를 포함한 다양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여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음

■ 소비자 이슈 7 : 교육과 인식

- 교육 및 인식 제고 활동(activities)은 주민이 정보를 잘 제공받고, 자신의 권리 및 책임을 의식하며, 적극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을 크게 하고, 식견을 가진 책임감 있는 행정서비스 고객이 되도록 함. 소비자 교육의 목적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그런 지식에 따라 행동하도록 능력을 부여하는 것임. 이는 행정서비스를 평가하고, 비교하는 기능을 개발하는 것을 포함하며, 또한 주위의 여러 사람 또는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것임
- 현재 남구청은 금연, 어린이 급식, 음식문화 등 남구 주민의 인식제고 및 개선을 위한 교육이 운영되고 있음. 다만, 복지, 다문화, 환경 등 중요한 이슈를 주제별로 구분하여 각 주제 별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남구는 남구 주민의 인식개선과 교육이 필요한 부분을 정의하고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즉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이 정례화되어 새로운 요구 반영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교육 수요자에 대한 기획을 세부적으로 하고, 세분화된 집단이 요구하는 사항을 면밀하게 조사 분석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그림 7-1] 성인교육 프로그램 개발 과정

- 또한 개설된 교육운영이 교육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며, 교육을 마친 후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평가를 통하여 피드백 활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교육프로그램의 질 또한 향상될 것임

7.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분야 이슈	이슈 평가	제언
1. 지역사회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로 다양한 민관협력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지역사회의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투명한 예산 집행과 뇌물수수 등 업무와 관련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감사 및 관리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음 •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활동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일회성 참여가 많은 한계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역할 중 심의·의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같이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가 보장되고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해야 함
2. 교육 및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을 거점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저소득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도 잘 운영하고 있음 • 지역축제 및 문화체육 활동을 위한 인프라를 잘 구축·운영하고 있음 • 지역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음 • 일회성 축제·행사를 줄이고,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보편적 인권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행사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관람하는 축제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축제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지역특성을 반영한 스토리텔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교육과 문화 활동에 소수자와 취약계층의 참여를 확대하기 접근성 제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3.고용 창출 및 기능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저소득 계층, 장애인, 노인 등 고용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지원 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음 • 공공일자리를 확대를 통한 직접고용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과의 신뢰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전문직,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기능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 노력이 부족함
4.기술개발 및 기술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혁신적인 기술개발 및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산물 개발 및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토지식 및 기술개발이 고래빵과 고래연 구소 등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음 •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노력의 성과에 대한 평가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5.부 및 소득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생산제품 구매, 지역 공급자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의 활동이 활성화 되어 있음 •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활성화, 의료관광 특화,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등 산업 구조의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 하지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양을 확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소득창출 효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함
6.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생활방식 권장을 위해 생애주기별 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주요 질병에 대한 예방활동과 깨끗한 물 공급, 선제적 예방관리 활동을 잘 추진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좀 더 많은 지역주민의 참여 및 인식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7.사회적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운영 지원 및 생산물 구매를 통해 지역사회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지원제도를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의 생필품 접근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좀 더 많은 사회적경제조직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적 관계 구축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 분야’에 대한 정책제언은 7개 이슈별로 구분하지 않고 7개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4가지로 구분하여 서술하고자 함

■ 형식적인 참여를 넘어선 실질적인 참여 강화

- 울산 남구청은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지역주민과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음. 2018년 현재,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모두 1,604명으로 적어도 형식적인 차원의 참여는 매우 활성화 되어 있음
- 하지만, 형식적인 참여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참여는 다르며, 남구청은 지역주민과 민간전문가의 참여가 형식적인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사업 및 정책의 추진 과정을 최종 단계에서 승인하는 수준의 참여를 넘어서, 계획수립 단계부터 참여가 가능하도록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 마을만들기지원사업과 같이 예산이 뒷받침 되어 실질적인 추진력을 갖는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타지역 우수사례] 서울 영등포구의 마을만들기 지원 강화 사업

■ 추진배경

- 해체된 이웃간 관계망 구축을 통한 지역 고유의 정서와 공동체 회복
- 주민 주도의 마을지향 행정으로 인식전환
- 지역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자원 나눔

■ 사업목적

- 주민 스스로 이웃 간 신뢰 관계망을 회복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가기 위해 이웃과 함께 의제를 발굴하여 이를 해결해 나가는 마을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함

■ 사업내용

- 주민주도 마을 공동체 사업 지원(정기적 간담회 등 소통창구 마련)
- 지역자원 연계 및 확보된 자원 나눔 활동
- 동별 특성을 살린 마을 공동체 사업 추진(소외계층 방문단 운영 등)

■ 집행실적(2015년)

- 교육(홍보) 및 공동체 사업 지원 건수(참여인원): 76건(2,665명)
- 예산액(집행액): 100백만원(86백만원)

■ 성과

- 지역주민 참여 확산: 이웃과 마을에 대한 재인식 기회제공 및 공동체 모임 발굴
- 마을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행동하는 주민 활동가 증가
- 행정과 주민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체계(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지원단) 구축을 통한 현장 밀착 지원

■ 성과평가와 연계된 사업 추진 필요

- 남구청은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을 위해 다양한 영역의 사업을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있음.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그것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당히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음
- 하지만, 투입되고 있는 예산과 인력에 비해 어느 정도의 성과가 확인되고 있는지, 비용 대비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인지, 확인된 효과는 일시적인 효과인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효과인지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부족한 실정임
-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대부분의 점검과 평가는 산출(output)에 대한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

고 있는데, 산출보다는 성과(outcome) 중심의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평가 결과와 사업의 축소·확대 여부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타지역 우수사례] 남양주시의 사회보장통계시스템 개발 사업

■ 추진배경

- 복지서비스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필요
- 시 추진 정책의 성과 및 효과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한 객관적 지표 관리의 필요성 증대

■ 사업목적

-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책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사회보장통계 DB 구축

■ 사업내용

- 생애주기와 사회보장사업의 내용에 따라 총 12개 영역(영유아,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보건, 빈곤, 소득, 주거, 고용, 돌봄, 기타)의 309개 지표 DB 구축
- 통계를 전국, 서울특별시, 경기도, 남양주시로 구분하여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제시

■ 집행실적

- 시스템 구축
- 예산액(집행액): 20백만원(19.8백만원)

■ 성과(효과)

-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사회보장통계를 제공
- 정책계획 수립 시 타지역 대비 양호한 분야와 취약한 분야에 대한 파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 가능
- 성과가 낮은 정책에 대한 객관적 모니터링 및 관리가 가능

■ 수요자 관점의 홍보 노력 강화

- 남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활발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건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지금까지 남구청의 홍보 노력에 큰 문제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공급자 입장에서 실적 위주의 홍보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음
- 홍보를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홍보하려는 내용이 잘 전달되고 있는가의 측면에 관심을 갖고, 수요자 관점에서 효과 있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지역주민이 많이 활용하는 SNS를 활용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아파트 단지 등에 직접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대학생이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홍보단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

[타지역 우수사례] 경북 행복지도 시스템 사업

■ 추진배경

- ICT를 활용하여 산재된 사회복지시설의 정보를 한곳에 모아 도민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필요
- 지리정보와 결합된 시각화된 온라인 사회복지시설 정보제공 필요
- 스마트폰 이용자의 증가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정보화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시설물 정보를 공간정보와 결합한 시설정보 제공

■ 사업목적

- 산재된 사회복지시설 및 복지서비스를 도민이 원하는 맞춤형 정보로 제공함으로써 복지체감도 및 만족도 향상
- 다양한 복지자원과 지도서비스의 구축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접근성을 확보함으로써 수요자 편의 증진

■ 사업내용

- 경북도내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DB구축
- 사회복지시설 소개 및 기본현황, 자원현황 안내
- 시설의 위치정보 표시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 개발

■ 집행실적(2015년)

- 시스템 구축: 11,461개 기관 정보 구축
- 예산액(집행액): 300백만원(276백만원)

■ 성과(효과)

- 사회복지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도민의 이용 편의성 증대 및 복지체감도 향상
- 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과적인 시설관리 여건 조성

■ 취약계층 및 이슈에 대한 관심 필요

- 남구청은 취약계층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에 장애인과 저소득계층,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등 취약계층과 소수자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확대해야 함. 특히, 교육 및 문화 활동 분야의 취약계층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함
- 지역사회 구성원 중 추가적인 관심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이슈 중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챙겨야 하는 이슈들이 있음. 노동과 부의 창출과 같은 부분은 많은 구성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지만, 인권과 분배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의 권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관심은 소홀해지기 쉬움
-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취약계층의 의견을 묻고, 각종 위원회에 취약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과 같은 방법을 통해 이들에 대한 권익 보호는 물론 참여 기회를 보

장할 수 있음

[타지역 우수사례] 순천시의 순천형 생활안정비 지원 사업

■ 추진배경 및 경과

-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기를 겪고 있지만, 법과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복지사각지대의 발생
-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대책 필요

■ 사업목적

- 기초생활보장 중지, 탈락된 가구에 대하여 한시적으로(6개월) 생활 안정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상실감 해소 및 자립 여건 마련

■ 사업내용

- 기초생활보장 중지, 탈락된 가구에 대하여 6개월간 생활안정비 지원
- 사업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자
 -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최근 1년 이내 중지, 부적합 결정된 가구
 -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가구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한 가구
 - 최근 2년 이내 긴급생계비 등 유사한 현금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
- 지원대상 및 지원액
 - 300가구(예산 범위 내)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가구별 생계급여액의 30~50% 범위 내에서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집행실적

- 지원가구: 258가구 지원
- 예산액(집행액): 500백만원(446백만원)

■ 성과

- 복지사각지대 해소
- 경제적 상실감 완화 및 자립 여건 마련

참고자료:

주민 및 공무원 설문지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적 책임 구현을 위한 주민설문조사

울산광역시 남구에서는 사회적 책임 구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내셔서 주민 여러분의 귀중한 의견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남구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분석은 철저히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정준금 교수)

※ 해당 항목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1) 남 2) 여

2. 귀하의 나이는?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6) 70대 이상

3. 귀하의 직업은?

1) 생산 및 노무직 2) 상업 3) 서비스직 4) 연구 기술, 전문직
5) 사무직 6) 농·축산·임·수산업 7) 학생 8) 기타 ()

4. 귀하께서는 울산광역시 남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1) 관심이 아주 많다. 2)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3) 거의 관심이 없다. 4) 매우 관심이 없다.

5. 귀하께서는 울산광역시 남구가 사회적 책임을 어느 정도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아주 잘 이행하고 있다. 2) 어느 정도 이행하고 있다.
3) 조금 미흡한 편이다. 4) 아주 미흡한 편이다.

6. 귀하께서는 남구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느 분야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3개 선택)

1) 환경 보전 2) 일자리 창출 3) 반부패
4) 인권 5) 근로자 보호 6) 주민참여
7)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8) 기타()

7. 다음은 울산 남구의 사회책임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이슈들입니다. 각각의 이슈들에 대해 귀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정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5~1까지의 숫자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슈 항목	중요성 정도				
	강	중간	약		
(거버넌스)					
- 기관장의 사회책임 추진 의지	5	4	3	2	1
-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	5	4	3	2	1
- 효율적인 예산집행	5	4	3	2	1
-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5	4	3	2	1
- 조직내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체계	5	4	3	2	1
- 주민과의 의사소통 및 민의수렴체계	5	4	3	2	1
(인권)					
- 인권실태 조사	5	4	3	2	1
- 고충처리	5	4	3	2	1
- 차별금지(여성, 장애인, 아동, 노동, 다문화)	5	4	3	2	1
- 주민기본권보장(언론, 출판, 표현, 집회, 결사)	5	4	3	2	1
(노동)					
- 일자리 창출	5	4	3	2	1
- 근로조건과 사회적 보호	5	4	3	2	1
-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	5	4	3	2	1
- 근로자의 보건과 안전	5	4	3	2	1
- 인적개발과 훈련	5	4	3	2	1
(환경)					
- 환경오염 예방(수질, 대기, 폐기물) 노력	5	4	3	2	1
- 에너지절약과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5	4	3	2	1
- 기후변화 대책	5	4	3	2	1
- 환경 및 생태계 보호	5	4	3	2	1
(공정운영)					
- 부패방지	5	4	3	2	1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책임	5	4	3	2	1
-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업무 처리	5	4	3	2	1
- 산하·협력기관들과의 사회책임 이행 공동노력	5	4	3	2	1
- 재산권 존중	5	4	3	2	1
(주민관계)					
-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	5	4	3	2	1
- 주민의 보건과 안전	5	4	3	2	1
-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5	4	3	2	1
- 취약계층에 필수서비스 제공 (복지행정)	5	4	3	2	1
(지역사회)					
- 남구 지역사회 발전	5	4	3	2	1
- 평생교육 및 문화 창달	5	4	3	2	1
- 일자리 창출 통한 구민 생활 안정	5	4	3	2	1
- 남구 새로운 먹거리 산업 창출	5	4	3	2	1
- 주민 건강과 보건	5	4	3	2	1
- 사회적 기업 활성화 등 사회적투자	5	4	3	2	1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적 책임 구현을 위한 정책담당자 설문조사

울산광역시 남구에서는 사회적 책임 구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책담당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의 귀중한 의견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남구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분석은 철저히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정준금 교수)

6. 다음은 울산 남구의 사회책임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이슈들입니다. 각각의 이슈들에 대해 귀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정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슈 항목	중요성 정도				
	강		중간		약
(거버넌스)					
- 기관장의 사회책임 추진 의지	5	4	3	2	1
-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	5	4	3	2	1
- 효율적인 예산집행	5	4	3	2	1
-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5	4	3	2	1
- 조직내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체계	5	4	3	2	1
- 주민과의 의사소통 및 민의수렴체계	5	4	3	2	1
(인권)					
- 인권실태 조사	5	4	3	2	1
- 고충처리	5	4	3	2	1
- 차별금지(여성, 장애인, 아동, 노동, 다문화)	5	4	3	2	1
- 주민기본권보장(언론, 출판, 표현, 집회, 결사)	5	4	3	2	1
(노동)					
- 일자리 창출	5	4	3	2	1
- 근로조건과 사회적 보호	5	4	3	2	1
-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	5	4	3	2	1
- 근로자의 보건과 안전	5	4	3	2	1
- 인적개발과 훈련	5	4	3	2	1
(환경)					
- 환경오염 예방(수질, 대기, 폐기물) 노력	5	4	3	2	1
- 에너지절약과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5	4	3	2	1
- 기후변화 대책	5	4	3	2	1
- 환경 및 생태계 보호	5	4	3	2	1
(공정운영)					
- 부패방지	5	4	3	2	1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책임	5	4	3	2	1
-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업무 처리	5	4	3	2	1
- 산하·협력기관들과의 사회책임 이행 공동노력	5	4	3	2	1
- 재산권 존중	5	4	3	2	1
(주민관계)					
-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	5	4	3	2	1
- 주민의 보건과 안전	5	4	3	2	1
-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5	4	3	2	1
- 취약계층에 필수서비스 제공 (복지행정)	5	4	3	2	1
(지역사회)					
- 남구 지역사회 발전	5	4	3	2	1
- 평생교육 및 문화 창달	5	4	3	2	1
- 일자리 창출 통한 구민 생활 안정	5	4	3	2	1
- 남구 새로운 먹거리 산업 창출	5	4	3	2	1
- 주민 건강과 보건	5	4	3	2	1
- 사회적 기업 활성화 등 사회적투자	5	4	3	2	1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적 책임(ISO 26000) 구현을 위한 지속가능성보고서

발 행 일 : 2019년 1월 25일

발 행 처 : 울산광역시 남구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돈길로 233(달동)

연 락 처 : (052) 226-5323

연구기관 :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적 책임(ISO 26000)
구현을 위한 지속가능성 보고서